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와 영향 분석**

2008. 11. 01.



한국회계기준원

서 문

한국회계기준원은 2007년 3월 15일에 발표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으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지난 2007년 12월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37개 기업회계기준서, 21개 기업회계기준해석서)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기업, 외부감사인 및 감독기구 등 각 주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2007년 5월에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국제회계기준(가칭)의 주요 차이와 영향 분석’을 발표하여 회계기준간의 주요 차이, 재무제표 또는 기업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 등을 예비적 검토자료로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공표일(2007.12.21.) 이후 2008년 10월에 제·개정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개정절차가 진행중인 주요 기업회계기준서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주요 내용 및 영향을 추가하는 한편, 회계기준제정과정에서 변경된 일부 용어를 반영하고 일부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보완된 검토자료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검토자료에 대한 보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갱신될 때 마다 한국회계기준원 웹사이트에 공개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품질의 단일한 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본래 의도하였던 목적대로 기업회계의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확실히 구현시킬 수 있도록 이 검토자료가 투자자, 기업, 외부감사인 및 감독기구 등 각 주체가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11월 1일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서 정 우

첨부된 검토자료에서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국제회계기준(가칭)의 주요 차이와 영향 분석'(2007.5.11.)의 내용 중 일부 변경된 용어와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공표일(2007.12.21.) 이후 제·개정될 예정인 기업회계기준서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중 주요 기준서·해석서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한 자료를 부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 부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준서·해석서에 대한 정규적인 회계기준 제·개정절차는 2008년 중에 완료되어 공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검토자료(부록 포함)는 한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와 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실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에 초점을 두어 작성되었으나, 모든 차이나 영향을 망라한 것은 아니며, 회계기준의 실무적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는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검토결과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보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검토자료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검토자료는 국제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대응관계에 따라 별표 1의 순서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부록의 검토내용은 별표 2의 순서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 검토결과에는 차이가 없더라도 회계기준 자체의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명이나 배경정보 등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 검토결과는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각 주체에게 필요한 일반적 정보(회계기준 자체의 주요 차이와 주요 영향 등)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전문적인 자문 또는 구체적인 실무적용의 근거로 사용되도록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 또는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 및 동 조직의 구성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검토결과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소유이며, 동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형하여 또는 변형없이 개인적인 용도와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 원천을 공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사전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회계기준원(전화:02 2259 0150, 전자우편: webmaster@kasb.or.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국제회계기준의 각 기준서·해석서에 대응하는 명칭

<기준서>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페이지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1
IFRS 1 First 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제1101호 한국-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8
IFRS 2 Share based Payment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9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제1103호 사업결합	11
IFRS 4 Insurance Contracts	제1104호 보험계약	19
IFRS 5 Non 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34
IFRS 6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39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41
IFRS 8 Operating Segments	제1108호 영업부문	42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51
IAS 2 Inventories	제1002호 재고자산	70
IAS 7 Cash Flow Statements	제1007호 현금흐름표	77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	88
IAS 10 Events after the Reporting Period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95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	제1011호 건설계약	98
IAS 12 Income Taxes	제1012호 법인세	106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제1016호 유형자산	114
IAS 17 Leases	제1017호 리스	120
IAS 18 Revenue	제1018호 수익	124
IAS 19 Employee Benefits	제1019호 종업원급여	127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131
IAS 21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133
IAS 23 Borrowing Costs	제1023호 차입원가	141
IAS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144
IAS 26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147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149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제1028호 관계회사 투자	154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157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페이지
Hyperinflationary Economies			
IAS 31	Interests in Joint Ventures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158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163
IAS 33	Earnings per Share	제1033호 주당이익	169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172
IAS 36	Impairment of Assets	제1036호 자산손상	175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181
IAS 38	Intangible Assets	제1038호 무형자산	186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204
IAS 40	Investment Property	제1040호 투자부동산	249
IAS 41	Agriculture	제1041호 농림어업	253

<해석서>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페이지
SIC-7 Introduction of the Euro	해당사항없음	
SIC-10 Government Assistance—No Specific Relation to Operating Activities	제2010호 영업활동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정부지원	258
SIC-12 Consolidation—Special Purpose Entities	제2012호 특수목적회사 연결	259
SIC-13 Jointly Controlled Entities—Non-Monetary Contributions by Venturers	제2013호 참여자의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비화폐성자산 출자	261
SIC-15 Operating Leases—Incentives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262
SIC-21 Income Taxes—Recovery of Revalued Non-Depreciable Assets	제2021호 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264
SIC-25 Income Taxes—Changes in the Tax Status of an Entity or its Shareholders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	265
SIC-27 Evaluating the Substance of Transactions Involving the Legal Form of a Lease	제2027호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래 실질의 평가	267
SIC-29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Disclosures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의 공시	268
SIC-31 Revenue—Barter Transactions Involving Advertising Services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270
SIC-32 Intangible Assets—Web Site Costs	제2032호 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272
IFRIC 1 Changes in Existing Decommissioning, Restoration and Similar Liabilities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273
IFRIC 2 Members' Shares in Co-operative Entities and Similar Instruments	제2102호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276
IFRIC 4 Determining whether an Arrangement contains a Lease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의 결정	278
IFRIC 5 Rights to Interests arising from Decommissioning, Restoration and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Funds	제2105호 사후처리, 복구와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279
IFRIC 6 Liabilities arising from Participating in a Specific Market—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	281
IFRIC 7 Applying the Restatement Approach under IAS 29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284
IFRIC 8 Scope of IFRS 2	제210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	285
IFRIC 9 Reassessment of Embedded Derivatives	제2109호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286
IFRIC 10 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288
IFRIC 11 IFRS 2—Group and Treasury Share Transactions	제2111호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	290
IFRIC 12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292

별표 2 제·개정 예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기준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페이지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1
제1103호 사업결합	4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10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12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14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17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19

<해석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페이지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22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상환,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24
제2115호 부동산건설계약	28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31

한국-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1. 현행 개념체계와의 주요 차이

(1) 개념체계의 범위

- (가) 현행 개념체계(“재무회계개념체계” 2003. 12)는 개념체계의 범위를 재무회계 전반으로 하고 재무보고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은 IAS의 개념체계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 (나) 따라서 현행 개념체계는 문단 1에서 재무회계와 재무보고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 기초개념을 제시한다고 기술함
- (다) 현행 개념체계는 문단 6, 문단 9 등에서 재무제표 외의 재무보고 수단을 통한 재무보고를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의 경우 재무제표에 더 초점을 맞추어 기술함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	현행 개념체계
5 이 개념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u>재무제표의 목적</u> (2) 재무제표의 정보 유용성을 결정하는 질적 특성 (3)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의 정의, 인식 및 측정 (4) 자본과 자본유지의 개념	4. 본 개념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u>재무보고의 목적</u> (나)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다) 재무제표 (라)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마)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바)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측정

(2)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가) 재무제표의 기본가정의 차이 비교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	현행 개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기준 • 계속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실체 • 계속기업 • 기간별보고

- (나) 현행 개념체계는 발생기준(accrual basis)을 재무제표의 기본가정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주의 회계를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별도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정의

(3) 질적 특성 및 제약요인

- (가) 현행 개념체계와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질적 특성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를 보임

- (나) 현행 개념체계에 기초한 질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정보유용성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구조로 표현될 수 있는데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질적 특성을 계층구조로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	현행 개념체계	
질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가능성 • 목적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측역할, 확인역할* - 중요성** •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의 충실성 실질의 우선 - 중립성 - 신중성 	주요 질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적합성 • 신뢰성
		주요 질적 특성의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측가치와 피드백 가치 - 적시성 •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의 충실성 - 중립성 - 검증가능성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	현행 개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성 · 비교가능성 	2차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가능성 (기업간, 기간별)
제약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시성 · 효익과 비용의 균형 · 질적 특성간의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과 효익의 균형 · 중요성 	
전반적인 사항	진실하고 공정한(true and fair view) 보고에 초점을 둠	이해가능성은 질적 특성이 아니라 유용성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	

* 별도의 제목을 두고 있지는 않음.

** 중요성을 목적적합성에 대한 제약조건으로 설명하고 있음. 또한 정보의 유용성을 위한 임계치나 판단기준(threshold, cut-off point)으로 봄

(4)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가)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는 현행 개념체계와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 간에 큰 차이가 없음

(나) 현행 개념체계는 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로서 포괄이익과 수익, 비용을 정의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경영성과의 측정치로서 이익을 다소 불명확하게 언급하고 그 요소로서 수익과 비용을 정의. 포괄이익의 개념은 자본유지개념을 정의하며 설명함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	현행 개념체계
경영성과	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
69 이익은 흔히 성과의 측정치로 사용되거나 투자수익률이나 주당이익과 같은 측정치의 기초	111. 기업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는 포괄이익, 수익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	현행 개념체계
<p>로 사용된다. 이익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다. 수익과 비용, 즉 이익의 인식과 측정은 부분적으로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자본과 자본유지개념에 의존한다. 그러한 개념은 문단 102~110에서 논의한다.</p> <p>105 자본유지개념은 기업이 유지하려고 하는 자본을 어떤 개념으로 정의하는지와 관련된다. 자본유지개념은 이익이 결정되는 준거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자본개념과 이익개념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자본유지개념은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과 투자회수를 구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자본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의 유입액만이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본의 투자수익이 된다. 따라서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필요한 경우 자본유지조정액을 포함)을 차감한 후의 잔여액이다. 만일 비용이 수익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손실이다.</p>	<p>및 비용이다.</p> <p>포괄이익</p> <p>112. 포괄이익은 기업실체가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즉, 포괄이익에는 소유주의 투자 및 소유주에 대한 분배 등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이 포함된다.</p> <p>113. 포괄이익은 문단117 이하에서 정의되는 수익의 합계에서 비용의 합계를 차감하여 측정한다. 포괄이익을 이와 같이 측정하는 것은 거래접근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포괄이익의 정의를 만족하는 특정 항목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의 계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과 문단112에서 정의한 포괄이익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가능증권평가차손익, 해외사업환산차손익 등이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고 누적기타포괄이익(손실)의 항목으로 자본에 표시되는 경우 포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일치하지 않는다.</p>

- (다) 현행 개념체계는 수익(revenue)에서 차익(gains)을, 비용(expenses)에서 차손(losses)을 분리하여 표시할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비해,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광의의 수익(income)은 협의의 수

익(revenue)과 차익(gains)을 포함하며, 비용(expenses)은 차손(losse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	현행 개념체계
75 차익은 광의의 수익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 항목으로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다. 차익도 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키므로 본질적으로 협의의 수익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에서는 차익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아니한다.	119. 손익계산서의 정보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소인 수익 중에서 차익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여기서 차익(‘이익’ 또는 ‘이득’이라는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음)이란 기업실체의 주요 경영활동을 제외한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서 소유주의 투자가 아닌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로 정의된다.
76 차익은 예를 들면, 비유동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한다. 광의의 수익의 정의는 또한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의 재평가나 장기성 자산의 장부금액 증가로 인한 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차익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분 표시하는 데 별도로 알리는 것이 경제적 의사결정 목적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차익은 주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된다.	122. 손익계산서의 정보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소인 비용 중에서 차손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여기서 차손(‘손실’이라는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음)이란 기업실체의 주요 경영활동을 제외한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가 아닌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로 정의된다.
79 차손은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는 그 밖의 항목으로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다. 차손도 경제적효익을 감소시키므로 본질적으로 그 밖의 비용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에서는 차손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아니한다.	
80 차손은 예를 들면, 화재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또는 비유동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	현행 개념체계
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한다. 비용의 정의는 또한 기업의 외화차입금에 관련된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미실현손실을 포함한다. <u>차손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분 표시하는 데 이는 별도로 알리는 것이 경제적 의사결정 목적에 유용하기 때문이다.</u> 차손은 주로 관련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된다.	

- (라) 현행 개념체계는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의 구성요소도 정의하고 있으나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의 구성요소를 언급하지 않음

(5)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과 측정

- (가) 현행 개념체계와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에 대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나) 현행 개념체계와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측정기준(속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설명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	현행 개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실현가능(상환)가치 현재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원가(역사적 원가)와 역사적 현금수취액 공정가치 순실현가능가치와 이행가액

* 현행 개념체계의 경우 현재가치를 별도의 측정속성이 아니라 공정가치나 기업특유가치의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단 154 내지 157에서 별도의 소제목으로 현재가치 측정을 설명(미국 SFAC No. 7을 요약)

(6) 용어

- 유사한 의미에 대한 용어 변화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	현행 개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 (liquidity) • 지급능력 (solvency) • 예측역할 (predictive role) • 확인역할 (confirmatory role) • 수익에 원가를 대응 (matching of costs with revenues) • 효익과 원가 (benefit and co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 • 재무건전성 • 예측가치 • 피드백가치 • 수익에 비용을 대응 • 효익과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ome & Revenue • gain & lo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 (Income, Revenue) • 차익('이익' 또는 '이득'이라는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음) • 차손('손실'이라는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1) 개념체계는 기업회계기준이 아니며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에 우선하지도 않으므로 한국-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를 IAS의 개념체계에 기초하여 새로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 작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 (2) 현행 개념체계와 접근방법 및 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새로운 개념체계를 제정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제·개정할 때 그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K-IFRS 접근방식에 의해 개념체계 뿐 아니라 기업회계기준 자체도 IFRS를 따르게 될 것이므로 예견되는 문제는 없다고 보아야 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기업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한국-국제회계기준을 최초채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서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대응되는 기준이 없으므로 현행 기준과의 차이 분석은 해당사항 없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비상장기업의 측정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비상장기업의 기대 주가변동성을 구할 때 비슷한 상장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당해 비상장기업이 속하는 산업주가지수의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문단 B29)	비상장기업의 기대 주가변동성을 구할 때 비슷한 상장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은 물론이고 당해 비상장기업이 속하는 산업주가지수의 역사적 변동성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문단 B30, B31)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비상장기업의 측정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공정가치(문단 30)	공정가치가 원칙이지만, 비상장기업은 내재가치를 선택할 수도 있음.(문단 30, 34)

(3)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회석화방지조항이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명문 규정 없음	회석화방지조항에 따른 조정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계처리목적상 조건변경으로 보지 않음.(문단 B47)

(4) 재부여주식선택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본문에 규정을 둠.(문단 22)	본문에서 삭제하고 결론도출근거에서만 언급함(결60)

(5) 주석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해서는 주식선택권과 같은 주석사항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주식선택권과 동일한 주석사항을 요구함.(문단 54)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1) 비상장기업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하는 경우 내재가치 선택권이 인정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므로 부채인식금액이 증가함.
- (2)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식선택권과 같은 주석사항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주석공시량이 감소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적절한 산업주가지수의 변동성을 이용한 기대주가변동성 추정, 희석화 방지조항에 따른 조건변경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무 적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1 지분통합법의 폐지

(1) 차이 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p>회계처리방법</p> <p>14 모든 사업결합은 매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p>	<p>4. 기업결합의 구분</p> <p>가. 기업결합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와 지분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매수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매수법, 지분통합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지분통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p> <p>나. 결합참여회사 중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매수기업결합으로,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없는 기업결합은 지분통합기업결합으로 한다.</p> <p>5. 지분통합기업결합</p> <p>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결합은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없는 지분통합기업결합으로 보고 지분통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p> <p>가. 결합참여회사 중 주식발행회사가 결합을 위하여 발행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이 상대방 결합참여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90% 이상과 교환 또는 통합되어야 한다.</p> <p>나. 결합참여회사간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의 공정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p>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p>아야 한다.</p> <p>다. 각 결합참여회사 주주들간의 결합전 상대적 의결권 또는 지분율이 결합으로 인하여 변동되어서는 아니된다.</p>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모든 사업결합을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여 동일한 회계사건에 대하여 기대되는 결과가 실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 비교가능성을 증진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가) 사실상 과거 지분통합법에 의해 회계처리하였던 사업결합이 거의 없으므로 효과 미비

- 2000년부터 2003년 까지 금감위에 합병종료보고서를 제출한 103개 합병 건 중 조사대상 101건에서 지분통합법을 적용한 합병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신현걸·정재연, '우리나라의 합병현황 분석을 통한 합병회계 및 합병세제의 개선방안', 2005, 회계저널 제14권(105쪽~128쪽))

(나) 국제적 정합성 달성

2 영업권 상각 중지

(1) 차이 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p>영업권</p> <p>51 취득일에 취득자는</p> <p>(1)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고</p> <p>(2) 사업결합원가가 문단 36에 따라 최초에 인식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중 취득자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가로 측정한다.</p> <p>54 최초인식 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한다.</p>	<p>10. 영업권</p> <p>가. 매수원가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p> <p>나.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p> <p>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p> <p>라.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결산기에 회수가 능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감액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할 수 없다.</p>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영업권 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매년 손상여부를 평가하거나 손상을 나타내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그보다 더 자주(연 1회 이상) 손상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가) 손상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실무적으로 어려운 처리과정을 수반함
- (나) 따라서 일부에서는 손상평가를 포기하고 상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3 부의영업권 개념 삭제

(1) 차이 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p>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중 취득자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초과분)</p> <p>56 문단 36에 의해 인식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p> <p>(1)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식별 및 측정, 그리고 사업결합원가에 대한 측정을 다시 평가한다.</p> <p>(2) 재평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초과분은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p>	<p>10. 부의 영업권</p> <p>가. 매수일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다.</p> <p>나. 부의 영업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1)에 해당하는 부의 영업권은 그 손실이나 비용이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경우에 인정한다.</p> <p>1)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p> <p>2) 기타의 부의 영업권</p> <p>다.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미래의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 영업</p>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p>권은 그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한다. 다만, 당해 손실이나 비용이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기간내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라”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p> <p>라. 기타의 부의 영업권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한다. 2)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수일에 특별이익으로 인식한다.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가) 공정가치의 측정이 불합리할 경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인식하는 위험이 더욱 커짐
- (나) 이 기준서(안)의 논리상 초과분은 잉가매수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취득일에 당기손익에 반영
- (다) 그러나 현실에서 잉가매수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면(FAS 141의 문단 B187에서는 공정가치 배분이 적절히 되었다면 초과분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하고 있음) 즉, 독립적인 제삼자간에 공정가치에 의해 교환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초과분의 발생은 측정의 오류를 표시하고 있을 수 있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가) 기업과 감사인이 정확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부담 가중

(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4 과거 부의영업권 잔액을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조정

(1) 차이 요약

	국제회계기준	참고: 미국회계기준
기업 인수 · 합병 등에 관한 회계 처리 준칙	<p>IAS 22(현행 준칙과 동일)</p> <p>1. 자산의 과대 계상 및 부채의 과소계상 확인</p> <p>2. 미래손실 대응부분은 부의영업권으로 발생시까지 이연</p> <p>3.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부의영업권으로 이연 후 가중평균내용연수로 환입</p> <p>4. 그 외 특별이익</p>	<p>APB 16</p> <p>1.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및 사업결합원가에 대한 재측정(결론도출근거에서 설명)</p> <p>2. 해당 자산 배분</p> <p>3. 잔여분 부의영업권으로 이연</p>
제 1103 호 (안)	<p>IFRS 3</p> <p>1.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및 사업결합원가에 대한 재측정(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요구)</p> <p>2. 일시 이익 인식</p>	<p>FAS 141</p> <p>1.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및 사업결합원가에 대한 재측정(결론도출근거에서 설명)</p> <p>2. 해당 자산 배분</p> <p>3. 잔여분 일시 이익 인식</p>
경과 조치	기초 부의영업권은 이익잉여금으로 가산함(※)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함

※ 기존 부의영업권 잔액을 기초의 이익잉여금에서 일시에 조정하고 이것은 개별재무제표에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라 하되

라도 투자주식의 증가 형태로 개별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침.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가) 기존의 부의영업권으로 계상된 잔액의 이익잉여금 환입으로 기업의 자본비율 상승효과 예상
- (나) 2004년 말 현재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1456개 기업 중 개별재무제표에 부의영업권을 표시하고 있는 기업은 22개 기업 뿐이었으나 연결재무제표에는 129개의 기업이 부의영업권 잔액을 가지고 있음. 지분법에 의하여 부의영업권일시환입이 개별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하면,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난 부의영업권 잔액을 이용하여 그 영향을 대략적으로 계산함.
- (다) 부의영업권을 일시에 이익잉여금으로 환입시킬 경우 18개 기업이 연결자본총액 비율이 10%이상 증가하며, 19개 기업은 5%이상 증가함. 그러나 기타 67개 기업은 1% 미만의 변동이 예상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특이사항 없음

5 단계법의 적용

(1) 차이 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11. 연속적인 주식의 매입
58. 주식을 연속적으로 매입하여 사업결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결합은 둘 이상의 교환거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자는 각 거래와 관련한 영업권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매수하는 경우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은 매수일에 일괄하여 인식한다. 나. 단계적으로 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의 매수원가가 매수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p>각 교환거래일에 거래의 원가와 공정가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u>각각의 교환거래를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각 단계마다 개별 투자 원가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자 지분을 단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u></p>	<p>피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 지분해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다.</p> <p>(11-1) 매수일 전에 피매수회사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수원가는 매수일 직전 매수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동 주식의 장부가액과 매수일에 지급된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p> <p>(11-2) 피매수회사 주식과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계정)은 매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한다.</p>

(2) 재무제표에의 주요영향 : 특이사항 없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가) 이 기준서(안)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그러나 이 기준서(안)의 시행일 후 둘 이상의 교환거래에 의한 사업결합을 하기로 한 경우, 과거 이 기준서 시행일 전 교환거래 시 해당일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를 이용하여야 함.

(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용의 혼란이 예상됨.

☞ 20% 미만 취득시 단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실무지침 포함을 고려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1 기준서의 적용범위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가) 기준서의 적용대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서의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자가 발행한 보험계약 (재보험계약 포함) 및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2) 보험자가 발행한 임의배당요소를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p>[문단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적용함.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에도 준용할 수 있음.

(나) 용어의 정의 : 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계약 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중요한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음. <p>[부록 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준칙에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정의는 없으며, 보험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음. 보험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하거나 발생될 특정한 위험으로부터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며, 다음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험계약자는 가능성 있는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발견에 앞서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예탁함. ②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 보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시점이나 그 금액을 알 수 없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현행 준칙에서는 보험회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는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보험자와 비보험자가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기준서의 적용대상을 ‘보험계약’으로 정함. 이에 따라 보험회사 및 비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적용범위에 포함되지만 보험회사의 비보험계약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현재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이 사실상 보험계약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면 중요한 보험위험의 이전 등 보험계약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계약들은 투자계약으로 분류되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될 것임. 금융겸업화 등의 추세를 고려할 때, 이 기준서를 적용함으로써 거래의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가) 보험계약은 중요한 보험위험을 인수할 때에만 성립하므로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자는 우선적으로 보험위험의 중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본문 B22~B28에서는 중요한 보험위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결론도출근거와 실무지침에서도 보험계약의 정의에 대한 적용지침을 서술하고 있음. 그러나 결론도출근거에서 계량화된 지침은 유사한 계약에 대해 임의의 경계선을 형성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유발하므로 기준서에서는 계량화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따라서 보험위험의 중요성 여부는 보험자의 판단에 의하므로 기준서 적용 초기에는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나)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기구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이 기준서가 적용되면 일반목적회계와 감독목적회계가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음. 일반목적회계와 감독목적회계가 이원화되어 운용된다면, 서로 다른 재무제표를 산출함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2 내재파생상품의 평가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내재파생상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예외로서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보험계약이거나 고정급부금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옵션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할 필요가 없음. [문단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규정 없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서술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전환, 연금전환과 같은 옵션 및 보증 등의 내재파생상품은 보험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함.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계약자에게 부여한 옵션 등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정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보험사는 개념적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부리할 것을 결정하는 옵션을 가질 수 있으나, 이 옵션은 계약 체결시 행사되므로 이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 평가와는 무관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옵션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험요소와 자산·부채의 변동성을 예측해야 하는데 이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경험이 필요함. 국내 보험사들은 아직 이와 관련된 경험이 없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3 저축요소의 분리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p>(1) 보험계약에서 (가) 보험자가 저축요소를 분리하여(즉, 보험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측정할 수 있고, (나) 보험자의 회계정책이 저축요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도록 별도로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축요소를 분리하여야 함.</p> <p>(2) 분리 측정이 가능하나, 보험자의 회계정책이 저축요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도록 별도로 의무화하고 있다면, 분리할 수 있지만 반드시 분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p> <p>(3)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다면 분리해서는 안 됨.</p> <p>[문단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규정 없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저축요소의 분리와 관련된 내용은 2단계에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서는 분리하기가 쉽고 그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만 분리를 요구하고 있음. 현재 저축성보험료는 전액 보험료수익으로 인식되고 준비금과 비용이 동시에 인식됨. 저

축요소가 분리되면 저축요소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가 적용되면서 이를 부채로 인식하게 되어 수익 규모가 감소할 것임.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국내 실무의 의견으로는, 대부분의 국내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요소가 저축요소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두 요소 간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이어서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함. 또한 분리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이 기준서에서는 중요한 계약상 권리·의무가 대차대조표에 완전히 누락될 위험이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만 저축요소의 분리를 강제하고 있음. 이로 볼 때 실무에서 저축요소를 분리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4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인식 금지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발생가능한 보험금에 대하여 충당부채(비상위험준비금, 평준화준비금 등)의 인식을 금지함. [문단 14]	보험료 중 비상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산정된 금액은 비상위험준비금 과목으로 하여 매기 계속적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금지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상위험준비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함.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가) 비상위험준비금의 경우,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누적하여 적립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이를 환입하지 않음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현재 계약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준비금이 계상되어 있음. 이는 결국 과거 계약의 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으로 미래 계약에서 발생할 보험금을 지급함을 의미하며, 현재 존재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준비금을 계상하는

것은 이중적립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기준서는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충당부채를 인정하지 않음.

- (나) 이에 따라 기존에 적립하던 준비금은 자본의 일부인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분류되어 부채가 감소하게 됨. 다만,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는 계약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결과적으로 보험부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그 영향이 반영될 것임.

5 재보험 회계처리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부채,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손익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상계하지 않음. [문단 14]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문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사로부터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출재보험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함.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현행 준칙상 재보험의 회계처리는 양도거래인 경우와 결과가 유사한데, 기준서에 의하면 당초 보험계약상 의무가 면제, 취소 또는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재보험의 경우라면 이를 새로운 거래로 보아 별도의 자산, 부채를 인식함. 이 경우 재보험계약으로 재보험사로부터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부채 차감이 아니라 재보험자산으로 계상되어 결산일마다 손상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계정분류의 변경으로 인해 지급여력비율이 감소할 수 있음.

6 보험부채 평가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가) 보험료 방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자는 매 대차대조표일에,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을 통하여 인식한 보험부채(관련 이연신계약비와 무형자산이 차감된 금액)가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보험부채 금액이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차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문단 15] • 보험자는 부채적정성평가 수행시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보험부채에 대해 차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보험자의 회계정책이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채적정성평가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된 보험부채의 장부금액에서 관련 이연신계약비와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면 인식되었을 장부금액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차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문단 1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적립금(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체결된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대차대조표일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대차대조표일 후에 회수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함. • 보험료결손(보험료적립금 기말잔액이 미래의 보험금부채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에 유입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동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차액은 신계약비 상각,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또는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을 보험료적립금으로 대체, 보험료적립금 추가적립을 차례로 적용함.

(나) 기초율의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자는 현행시장이자율을 반영하여 지정된 보험부채를 재측정하고 그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 지정된 부채에 대해서는 부채가 소멸되기 전까지 현행시장이자율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문단 24] • 보험자는 다음의 회계실무를 계속 적용할 수 있으나, 새로 도입할 수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부채를 명목금액으로 측정하는 것 [문단 25] • 미래투자수익이 계약상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보험계약을 측정함에 있어 미래투자수익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하면 보험자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음. 다만, 미래투자수익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을 측정함에 따라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감소하더라도, 회계정책 변경의 다른 요소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이전보다 더 향상되는 경우에는 미래투자수익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할 수 있음. [문단 2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시점에서 적용가능한 예정이익률, 예정사망률(생존율), 예정손해율, 예정상해율, 예정해약률, 예정사업비율 등 기타 많은 가정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가정들은 보험료결손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가) 이 기준서는 보험부채의 측정시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하는 영업보험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순보험료

방식으로 보험료적립금을 계상하고 있음. 기준서의 적용은 보험부채의 측정방법이 순보험료 방식에서 영업보험료 방식으로 전환됨을 의미함.

(나) 이 기준서에서는 기초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험부채를 명목가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기존 관행이라면 계속 적용이 가능하고, 일부 보험부채를 지정하여 현행시장이자율 등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미래투자수익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하는 데에는 제한을 두고 있음. 다만, 1단계에서는 할인율이나 위험조정기준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음. 한편, 국내의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료적립금에 적용할 이율 및 위험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고, 보험계약 체결시의 적용이율 및 위험율을 전 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기준서에서 할인율이나 위험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기초율을 적용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명목가액으로 측정되는 일부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기존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

(다) 단기보험계약의 경우 현행 준칙에서는 미경과보험료만 계상하며 보험료결손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 기준서는 미래현금흐름이 대부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보험부채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음. 다만, 단기보험계약에 대해 장기계약과 동일하게 보험부채를 평가하더라도 기존 방법에 따라 계상한 부채금액과의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미경과보험료만큼 보험부채를 적립하는 회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에서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행시장이자율을 반영하여 매 결산일마다 지정된 보험부채를 재측정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할 경우 이러한 방식의 준비금 산출과 검증경험이 없는 국내 현실에서는 시스템 구현과 체계적인 프로세스 정립 등에 상당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할 것임. 또한 1990년대 말까지 시장이자율이 10%

를 상회했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자율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할 경우, 도입 시점에 부채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음.

7 그림자회계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실현손익이 실현손익과 동일하게 보험부채(이연신계약비, 무형자산)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회계정책(그림자회계)으로 변경이 가능함. <p>[문단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규정 없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그림자회계는 미실현손익의 실현을 가정하여 변동이 예상되는 재무제표 항목을 조정하는 것임. 이는 보험부채 등의 측정이 보유자산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내의 경우 7년 이내의 계약기간 동안 균등상각하는 이연신계약비에는 적용될 수 없음. 보험부채의 측면에서 보면, 국내에서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중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지분 조정에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그림자회계를 적용한 것과 결과가 동일함.

8 임의배당요소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계약에서 임의배당요소는 보장요소와 분리하여 인식할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수입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대차대조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p>있으며, 분리하는 경우 보장요소만 부채로 분류하고 분리하지 않는 경우 전체 계약을 부채로 분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의배당요소는 일관되게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자본으로 분류하는 경우 자본항목에 귀속되는 손익은 수익이나 비용이 아닌 당기손익의 배분으로 인식함. <p>[문단 34]</p>	<p>일 현재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이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같은 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임의배당요소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음. 부채로 분류하느냐 자본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부채비율이 달라지고, 임의배당요소가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자본항목에 귀속되는 손익은 당기손익의 배분으로 손익계산서에 별도 표시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가)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발생한 손익에 근거하여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지급될 부분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임의배당요소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 규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실무상 변동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나) 임의배당요소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Fair Value reserve는 미래 급부금 뿐만 아니라 배당도 고려한 개념이며,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미래투자계획과 기업의 배당정책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함.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2단계에서 제시하기로 하였으므로 1단계에

서는 해당 부분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9 수익 인식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함. 보험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사실상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미경과보험료 상당액은 수익의 차감이 아닌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 비용 처리함.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가) 현행 준칙상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미경과보험료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것은 미경과분을 수익 차감이 아니라 비용으로 계상하는 논리상 문제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발생주의와 동일함. 그러나, 현행 준칙은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실상 현금주의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나) 기준서 본문에는 수익 인식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으나, 기준서의 실무지침에서는 이 기준서가 수익 인식에 관한 특정한 방법을

규정하지는 않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모형들이 존재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 회계기간 동안 획득한(earned) 보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IBNR(Incurred But Not Reported)의 추정치를 포함하여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
- 수령한 보험료를 수익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보험부채의 증가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
- 수령한 보험료를 예치금으로 보고하는 방법

(다) 따라서 수익인식방법과 관련하여 이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10 주식공시사항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의 거래결과보다는 미래의 위험과 관련된 공시 정보가 많이 추가됨. 이 기준서에 추가된 주요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정의 결정 과정 2) 보험자산·부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가정들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 3)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목적, 정책 및 과정과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4) 보험위험에 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보험위험에 대한 민감도 나) 경영진이 보험위험의 집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회계처리방침과 보험종류별 책임준비금, 신계약비, 보험료 수익의 세부내역 등과 같이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p>를 판단하는 방법과 각각의 집중화를 구분하는 공통된 특성(예: 보험사건의 유형, 지역 또는 통화)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보험위험의 집중에 대한 정보</p> <p>다) 과거 추정치와 비교한 실제 보험금(즉, 보험금 진전) - 10년 이내 소급공시</p> <p>5) 보험계약이 1107호의 적용범위에 속한다면 1107호의 문단 31~42에 따라 공시가 요구될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대한 정보</p> <p>6) 내재파생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이 강제되지도 않고 실제로 그렇게 측정하지도 않았다면, 주보험계약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의 시장위험 노출정도에 대한 정보</p>	

(2)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가) 기준서의 공시사항은 크게 1)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재무제표상 금액 2)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로 구분될 수 있음. 현행 준칙과 비교하여 미래 위험과 관련된 공시 정보가 많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실무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 기준서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금융상품 기준서의 공시사항과 비교할 경우 공시사항 작성에 따른 부담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나) 기준서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실무지침에서 공시항목을 보다 세부적으로 서술하면서 공시

할 정보의 예시를 나열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지침이 추가적인 공시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지침에서 제시된 모든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차이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개념의 도입

- 현행 기준은 국제기준과 달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며,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서 등에서 처분 예정이거나 사용을 중단한 자산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언급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등

(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관련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와의 주요차이

(가)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용중단 여부와 관계없이</u> 매각 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을 중단하며, 순공정 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용을 중지하고</u>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유지한다. (문단 73)

(나)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용중단 여부와 관계없이</u>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연수 도중 <u>사용을 중단하</u>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유형 자산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을 중단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함	<u>고</u> ,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문단 41)

(다) 유가증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의 적용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이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제외되므로 유가증권은 이 기준서가 적용되지 않음

(3) 중단영업 관련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와의 주요차이

(가) 중단영업의 요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각목적만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 중단영업 범위에 포함됨 (문단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분목적만으로 취득한 종속회사에 대한 언급이 없음

(나) 보고기준 시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이 처분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때(최초공시사건 개념의 삭제) (문단 32) 비유동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 사용이 중단된 날에 중단영업으로 표시(문단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공시사건 발생시점(문단12)

(다) 영업중단으로 인한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에 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영업에서 손상차손과 관련된 언급은 없으나, 매각예정자산의 일반원칙(문단 20~25)을 적용하면 현행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 (단, 매각예정자산은 회수가능가액이 아닌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을 비교함) • 공정가치 추정시 개별자산별로 할 것인지 현금창출단위별로 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단일거래로 처분되는 처분자산집단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현행 기준과 유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상차손 인식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문단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가능가액을 기준으로 함 • 회수가능가액 추정은 매각단위에 따라 개별자산별로 할 것인지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할 것인지를 규정함(문단19)

(라) 영업중단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중단직접비용 관련 언급은 없으나, 충당부채에 대한 기준서를 적용하면 현행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사업손익에 반영하고 충당부채 계상(문단 16)

(마) 신규취득종속기업에 대한 공시사항 면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시할 필요 없음(문단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영업손익의 분석에 대한 공시 - 중단영업의 현금흐름 - 처분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과 부채의 주요 유형별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문 규정 없음

(바) 과거의 중단영업처분과 관련된 당기 조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단영업에서 별도로 분류하여 공시(문단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문 규정 없음

(사) 영업중단계획을 철회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단영업 분류 중단시 중단영업의 성과는 모든 기간에 대해 계속 영업손익으로 재분류함(문단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의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제외한 중단사업손익을 계속사업손익으로 재분류함. 그러나 전년도의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은 계속해서 중단사업손익으로 보고하고, 사업중단계획을 철회하기로 한 기간에 환입하여 중단사업손익으로 보고한다. 사업중단을 철회하기로 한 기간의 경영성과는 계속사업에 포함하여 보고한다.(문단 30)

(4) 기타 현행기준과의 차이

(가) 문단 28에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문단 5에서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으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모형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다) 문단 5에서 보험계약, 농림어업 등의 기준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미비한 기준임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1) 이 기준서에 따라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원래의 계정에서 별도로 표시하는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의 문단 73과 제5호 유형자산의 문단 41에 의하면 매각예정인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은 더 이상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투자자산으로 이미 분류하고 있었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2)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와 제5호에서 처분예정시 장부가액으로 평가되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된 경우에 감액손실여부를 판단해야하고 따라서 회수가능액으로 측정될 것임. 한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가 비슷한 금액으로 측정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측정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해야만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현행기업회계기준의 처분예정이나 사용중단보다는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며 새로운 분류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적용판단에 있어 주의가 요구됨.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 대응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는 없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1) 탐사와 평가 관련 자산의 분류 형태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규정된 자산재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손익과 자산의 변동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규정상¹⁾ 정상거래시장이 존재할 경우에만 자산재평가가 가능하므로 실무적으로 적용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2)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관리원가나 일반간접원가의 경우도 탐사와 평가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자산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그러나 기존에 이러한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의 문단 10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Prudence²⁾의 요건에 의해 상기와 같은 회계정책 변경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3) 탐사와 평가 관련 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손상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1) 75 (전략)For the purpose of revaluations under this Standard, fair value shall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an active market.(후략)

2) Prudence: The inclusion of a degree of caution in the exercise of the judgements needed in making the estimates required under conditions of uncertainty, such that assets or income are not overstated and liabilities or expenses are not understated.

개별 자산을 관련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 배분하여 해당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해 손상을 검토하여야 함. 이에 따라 탐사와 평가 관련 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손상차손의 인식가능성과 변동가능성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1) 기업은 탐사와 평가 활동 이전단계, 탐사와 평가 활동단계, 개발활동 단계의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이 기준서는 탐사 및 평가 관련 지출단계에만 적용시켜야 함.
- (2) 기업이 회계정책을 개발하면서 이 기준서의 문단 9와 10의 규정을 준용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의 문단 11과 12를 제외하고 문단 10만을 적용하도록 회계정책 변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무상 기존에 기업에서 수행하던 회계실무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면제조항으로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 (3) 재평가가 허용되어 이를 적용한 기업의 경우는 재평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과 평가방법의 수립 등에 대한 업무부담이 예상됨.
- (4) 손상에 대한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나 손상에 대한 검토의 수행여부는 문단 20의 내용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그리고 손상 검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의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은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 수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의 수행이 가능해져 회계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한 결정을 회사의 판단사항으로 위임하였으며 개발단계로의 자산 재분류 때에도 손상검토를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1 주석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품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서로 통합하여 규정 • 원칙중심으로 규정 • 기업의 내부보고자료를 활용하는 접근방법 •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 및 업종별회계처리준칙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금융상품/위험별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강조 • 산업별 적용대상이 상이하며, 금융 권역별 차이도 존재

(1)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가) 기업의 내부보고자료를 활용하는 원칙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됨
- (나) 실무전문가, 재무제표 이용자, 규제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작업반에 의한 실무지침 등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1 현행 기업회계기준(해석50-87: 사업부문별 정보 등의 공시)과의 주요차이

(1) 기본적인 차이 비교

구 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해석 50-87
관점	• 내부보고 기준	• 부분적 내부보고 기준
부문의 구분	• 사업별, 지역별 외의 구분 가능 (내부적 기준에 따른 구분)	• 사업별 및 지역별 구분 (내부적으로 구분한 사업별 및 지역별 부문)
측정	• 내부보고 측정치 사용 가능	• 명문규정 없음
영향	• 기업 간 비교가능성 낮음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공시를 통해 보완함) • 정보의 목적적합성 높음	• 기업 간 비교가능성 높음 • 정보의 목적적합성 낮음

(2) 적용범위(문단 2~4)

구 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해석 50-87
상장기업	포함	포함
상장예정기업	포함	포함
기타	불포함	부분포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적용받는 기업은 사업부문별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모든 비상장기업이 이 기준서에서 적용제외됨

(개) 해석 50-87에서는 상장기업이나 상장예정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문정보의 공시가 요구되지만, 이 기준서(안)에서는 공개기업과 공개예정기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음.

- (나) 현행 기준에서 상장기업이나 상장예정기업이 아닌 경우 기업 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적용받지 않는 기업만 부문정보가 요구되어 비상장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낮았음. 따라서 이 기준서(안)의 도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에 적용받지 않는 비상장기업의 작성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비상장기업에 대한 적용범위의 일관성을 높임.**

(3) 부문의 구분(문단 5~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해석 50-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u>영업부문</u>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구성단위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2)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경영 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3)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p>(문단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사업별 부문</u>과 <u>지역별 부문</u>으로 구분하여 각각 공시한다.(2. 부문의 구분)

○ 정보의 목적적합성이 높아짐

- (가) 해석 50-87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구분한 사업별 부문정보와 지역별 부문정보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내부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 사업별 부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지역별 부문은 국가별, 대륙별, 경제공동체별, 문화권별 등 다른 구분기준을 사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 경우 기업별 비교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정보의 목적적합성이 낮았음.

- (나) 이 기준서(안)에서는 경영관리목적에 따라 내부적으로 구분하는 영업부문에 따라 부문정보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업이 사업별이나 지역별 구분이 아닌 다른 구분 방법(예: 법적실체, 고객유형 등)으로 내부조직을 구분할 경우 그 다른 구분 방법으로 영업부문을 구분할 수 있음. 따라서 경영진의 시각으로 기업을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4) 보고부문(공시대상 부문)의 인식(문단 11~1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해석 50-87
<p><u>보고부문</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각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보고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단 5~10에 따라 식별하거나 문단 12에 따라 다수의 영업부문을 통합한 영업부문 문단 13의 양적기준을 초과하는 영업부문 문단 14~19에는 영업부문에 대하여 별도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p>(문단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별 또는 지역별 <u>각 세부부문</u>의 다음 각각의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별 또는 지역별 부문은 <u>공시대상 부문</u>이 되며 제4호 및 작성 사례에 따라 부문별 재무정보 및 관련사항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3. 공시대상 부문 가.)

○ 보고부문(공시대상 부문)의 정의가 명확해짐

- (가) 해석 50-87에서는 '세부분'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보고부문(공시대상 부문)에 대한 인식이 자의적임.
- (나) 이 기준서(안)에서는 영업부문을 정의한 후, 영업부문이 통합기준과 양적기준을 충족하면 보고부문이 되도록 하고 있어 보고부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함. 따라서 보고부문 인식과정의 자의성이 줄어들 것임.

(5) 부문별 주요 주식공시 내용(문단 23, 24 및 문단 28)

구 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해석 50-87
자산 ·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부문별 자산총액 (부채금액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될 경우에 보고함) • 부문자산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항목 (예: 관계회사나 조인트벤처 투자의 지분법적용 투자지분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자산
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부문별 당기손익 •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항목 (예: 이자수익,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지분법손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영업손익, 감가상각비
조정사항	보고부문들 금액의 합계와 기업전체 금액의 조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전체 자산으로의 조정 • 부채를 보고할 경우에는 기업전체 부채로의 조정 • 기업전체 수익으로의 조정 • 기업전체 법인세 비용(이익)과 중단영업손익 가감전 당기손익으로의 조정 	보고부문들 금액의 합계와 기업전체 금액의 조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전체 영업손익으로의 조정

○ 기업분석에 유용한 공시정보 제공

- 이 기준서(안)에서 보고부문별 당기손익과 자산총액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부문의 투자수익률(ROI) 분석을 통한 부문성과의 평가가 가능해질 것임.

○ 조정사항에 대한 공시내용의 증가

- 해석 50-87에서의 조정사항은 기업전체 영업손익으로의 조정만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이 기준서(안)에서의 조정사항은 기업전체 자산, 부채, 수익 및 당기손익으로의 조정에 대해 모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부문의 금액이 기업전체 재무제표상 금액과 차이나는 원인과 금액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6) 부문의 측정(문단 25~27)

구 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해석50-87
측정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금액을 부문항목의 측정치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문규정 없음
배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이용하는 측정치에 포함될 경우만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

○ 내부보고의 측정치 사용

- (가) 해석 50-87에서는 측정원칙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이 기준서(안)에서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측정치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문단 25), 보고되는 측정치가 둘 이상일 경우 경영진이 판단하여 기업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측정원칙과 가장 일관성 있는 측정원칙에 따른 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문단 26)
- (나) 또한 이 기준서(안)에서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이용하는 측정치에 포함될 경우만 배분하며, 배분하는 금액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함.(문단 25)

○ **측정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측정금액에 대한 신뢰성 제고**

- (가) 이 기준서(안)의 문단 27에서는 보고부문의 측정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음. 예를 들어, 공통비, 공통자산과 공통부채에 대한 배분정책을 포함하여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과 부문부채의 기업전체 금액으로의 조정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하며, 비대칭 배분(감가상각대상자산은 부문에 배분하지 않았지만 감가상각비는 부문에 배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함.
- (나) 이처럼 내부보고 금액이 부문 측정치의 측정원칙과 배분기준이 되고 있으나 **부문의 측정치와 기업전체 금액의 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문단 27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측정금액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짐.

(7)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공시(문단 31~3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해석50-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물과 용역에 대한 정보(문단 32) • 지역에 대한 정보(문단 33) •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문단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해석 50-87의 사업별, 지역별로 구분한 부문정보는 제1108호(안)의 문단 32와 33의 정보와 유사할 수 있음)

○ **기업 간 비교가능성 저하의 단점 보완**

- (가) 이 기준서(안)의 문단 31에서는 생산물과 용역의 차이나 지역의 차이가 아닌 다른 차이에 기초하여 보고부문을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전체 수준에서 이 두 차이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따른 공시는 해석 50-87의 사업별부문과 지역별 부문의 공시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나) 보고부문의 공시가 기업내부의 부문구분에 따른 것이므로 그 정보의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전체 수준에서 공통된 기준에 따라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여 기업 간 비교가능성 저하라는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8) 조직 구조 변화에 따른 재작성(문단 29, 3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해석 50-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조직의 구조를 변경하여 보고 부문 구성이 변한 경우 과거 회계 기간(중간회계기간 포함)의 해당하는 부문정보를 재작성한다. 필요한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지 않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문단 29) (.....)과거 회계기간(중간회계기간 포함)의 부문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회계연도의 부문정보를 부문을 구분하는 과거 기준과 새로운 기준에 따라 모두 작성하여 공시한다. 단, 필요한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지 않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문단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문 규정 없음

○ 기간별 비교가능성 제고

- 보고부문 구성이 변한 경우 부문정보를 재작성하거나 변경된 회계연도의 부문정보를 과거 기준으로도 작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부문정보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함.

(9) 중단영업의 공시

- (가) 해석 50-87의 6. 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 주석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로 대체되었음.
- (나) 중단영업에 관해서는 이 기준서(안)에서 다루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안)에서 다루고 있음.

2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1) 관련 규정의 통합화로 적용의 용이성

- 이 기준서(안)은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에 모두 적용되므로 해석50-87,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에 나뉘어져 있는 현재의 관련규정이 통합됨으로써 실무적 적용이 용이해질 것임.

(2) 내부보고 회계시스템의 중요성 증가

- (가) 해석50-87에서는 기업이 사업별 부문의 구분방법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라 사업별 부문을 정할 수 있었으나, 이 기준서(안)에 따르면 이런 표준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내부보고 회계시스템이 미비한 기업(특히 상장예정기업)의 경우 보고부문을 구분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나) 반면에 내부보고 회계시스템이 잘 갖춰진 기업의 경우는 공시정보를 작성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특히 내부조직을 사업별 또는 지역별 부문으로 구분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해석 50-87에 따라 사업별 부문과 지역별 부문의 공시 정보를 작성하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음.

(3) 기업들의 내부정보 공개에 대한 거부감

- (가) 내부보고에 따른 부문보고가 경쟁기업들에게 그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가능한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할 유인이 있음
- (나) 따라서 기업들이 부문정보를 축소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행태가 우려됨

(4) 감사인의 감사 부담의 증가

- 이 기준서(안)은 보고부문의 금액과 재무제표 상의 금액과의 조정사항에 대해 요구하고 있으나 측정원칙에 있어서도 내부적인 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들이 내부보고 되는 정보를 조작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사수행 시간이 증가할 뿐 아니라 확인과정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1 일반사항

(1) 재무제표의 명칭 및 구성의 변경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 및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에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로 구성되며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문단 1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식을 포함함 (문단 8)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명칭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는 범위내에서 재무상태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이익잉여금처분보고서(또는 결손금처리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자본변동보고서 등의 재무제표의 명칭을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문단 9)

(가)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현행 기준서 제21호에 따르면 포괄손익계산서는 전체 재무제표의 일부는 아니며 손익계산서의 주석으로 공시함. 그러나 기준서 제1001호에 따르면 전체 재무제표의 일부로서 포괄손익계산서를 공시해야 함. 또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에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를 추가로 작성해야함.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현행 기준서 제21호에서는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보고서의 명칭과 다른 명칭을 보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준서 제1001호에서는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을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용자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무제표 명칭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후에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명칭이 재무상태표, 재무상태보고서, 대차대조표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되며 다른 기업과의 비교가능성 저하도 우려됨. 따라서 재무제표의 명칭을 기업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포괄손익계산서의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포괄손익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간 중 자본의 변동(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 제외). 총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함 (문단 7) • 해당 기간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로 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나 ② 두 개의 보고서, 즉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배열하는 보고서(별개의 손익계산서)와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여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배열하는 보고서(포괄손익계산서)(문단 81) •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은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이나 반영전 금액으로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함(문단 90,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손익'은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포괄손익에는 주주의 투자 및 주주에 대한 분배 등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이 포함됨 (문단 5) • 당기순손익은 계속사업손익에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효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함(문단 76)

(가)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현행 기준서 제21호에 따르면 포괄손익의 개념이 처음 도입됨에 따라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에서 포괄손익을 나타내는 것은 실무적으로 혼란이 예상되므로 포괄손익계산서를 손익계산서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함(기준서 제21호 부록 A54). 반면 기준서 제1001호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를 별도의 재무제표로서 공시해야 하며 당기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나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중에서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참고로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방법은 첫째, 손익 및 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income and comprehensive income)로서 기존의 손익계산서를 확장하여 기존의 당기순손익 뿐만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그 합계인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방법임. 둘째, 손익계산서(Statement of income)와 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인데,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에서 출발하여 기타포괄손익을 가산하여 포괄손익을 산출함. 셋째, 자본변동표(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포괄손익을 별도의 항목으로 두고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여 기타포괄손익에 해당항목의 변동내용을 집계함. FASB의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권장하고 있음(기준서 제21호 부록 A52, 53).

현행 기준서 제21호에 따르면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할 때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 반면 기준서 제1001호에서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순액 또는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음.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포괄손익의 표시방법을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IASB와 FASB의 Convergence Project 결과로 판단됨) 자본변동표에 총포괄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한 것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위의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판단됨. 현행 기준서 제21호가 2007년부터 적용되어 실무에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주식공시를 하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기 전까지 충분한 적용이 예상되므로 포괄손익계산서를 별도의 재무제표로 공시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다양성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상태표의 경우 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문단 60) 포괄손익계산서의 경우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항목만 규정하되, 중단영업손익은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문단 82) 또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에 대한 분석을 표시할 때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기준 중 하나를 선택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시방법은 포괄손익계산서나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문단 99, 100)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영업손익에 대해 정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림. (BC 55, 56) (자세한 내용은 아래 '1.3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의 구분 여부'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과 부채는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되,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문단 32, 33) 손익계산서의 경우 단계별로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문단 60)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 계정과목별 설명과 함께 계정과목을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음. (부록 2) 부록에서 각 재무제표의 양식을 예시하고 있음. (부록 3) 특수 업종 영위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하여 특별한 사항은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문단 4) 각 업종별로 기준서 제21호와 유사한 방법으로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언급하고 있음. (업종별 준칙 또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I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 업종의 재무제표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그러나 일부 문단에서는 특수 업종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더욱 적절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음. (문단 63) 	공개초안)

(가)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기준서 제21호에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을 정형화시킨 반면에, 기준서 제1001호에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표시방법에 대해 선택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음.
- 재무상태표의 경우 특수업종을 제외한 많은 회사들이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을 채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방식과 중요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임.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의 비교는 ‘3.(1)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의 비교’ 참조)
- 금융회사와 같은 특수업종의 재무상태표의 경우에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금융회사의 경우 많은 부분이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금융상품 관련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039호, 제1107호의 분류방법이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포괄손익계산서의 경우 어떠한 정형화된 형식을 제시하지 않고 최소한의 항목만을 규정하였으며, 비용항목에 대해서는 성격별 분석 또는 기능별 분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 (‘4. 포괄손익계산서’ 참조) 또한, 영업손익에 대해 정의를 내리

지 않았으나 기업의 선택에 의해 영업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3)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의 구분 여부’** 참조) 이렇듯 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손익계산서가 나타날 수 있음으로 인해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예전에 비해 다소 떨어질 수 있음.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재무상태표표에 대해서는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을 선택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기업실무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됨.
- 포괄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정형화된 예시가 없음으로 인해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시 기업별로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기업간 비교가능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정착하는데 몇 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IAS 1의 실무지침에서 예시하는 재무제표는 매우 기본적인 요소들만을 사용하여 제시되어 있으므로, 실무적용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회계기준제정기구에서 IAS1의 실무지침에서 예시된 재무제표보다 더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다양성과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기준서 제1001호의 내용과 상충될 소지가 있음. 다만 기업이 실제 적용시에는 회계법인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적 요인과 해당 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기업에 적합한 재무제표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임.
- 감독기관의 입장에서는 모든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공개되는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에 대해 이 기준서의 내용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표준화된 재무제표를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다만 특수감독목적(예를 들어 은행감독목적)으로 표준화된 재무제표 양식을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음.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 및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의 구성됨. (문단 1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식으로 구성됨. (문단 8)

(가)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법에서 요구되어 왔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재무제표에서 제거할지의 여부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 표시할지의 여부가 결정됨.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상동

(5)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의 구분 여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손익계산서의 경우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항목만 규정하되, 중단영업손익은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문단 82)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AS 1에서 "Operating Activities"를 정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BC55, 56) 그러나, 이 기준서 본문에서 정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론도출근거에서는 기업은 "results o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익계산서의 경우 단계별로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문단 60)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operating activities"를 공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함.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되는 금액이 반드시 영업활동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영업활동인 항목을 제외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예를 들어 비정기적이거나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 비일상적이라는 이유로 재고자산감액손실이나 구조조정비용을 제외할 수 없음. 또한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할 수 없음. (BC56)	

(가)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전통적으로 영업손익은 기업에 대한 재무성과 평가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사용되어 왔고, 기준서 제1001호에서는 정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업손익의 공시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기업의 정책에 따라 영업손익을 표시할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음.
- 각 기업별로 영업손익의 정의를 달리 하는 경우 적어도 영업손익에 대해서는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영업손익을 공시하기로 결정한 기업의 경우 기준서상에서 영업손익의 정의를 찾을 수 없으므로 기업의 정책으로 영업손익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여야 할 것임.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정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영업손익의 정의에 대해 우리나라 제정기구에서 영업손익의 정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회계감사의 측면에서는 기업이 영업손익을 공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하더라도 영업손익과 관련된 분류에 대해서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며 단지 기업의 판단에 의한 참고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석공시사항으로 추가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

(1) 중간재무제표에의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된 요약 중간재무제표의 구조와 내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문단 15내지 35까지의 내용(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계속기업, 발생기준 회계, 중요성과 통합표시, 상계)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의 재무제표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문단 4) •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시에는 요약 중간재무제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 따라 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도 금지하지는 않고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문단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서 제21호는 중간기간을 포함한 모든 회계기간에 적용이 가능하나, 특별한 사항은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문단 3) •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요약 또는 일괄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 문단 6)

(가)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양식으로 하되 계정과목의 요약 등 특별한 사항을 기준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반면,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서는 전체 재무제표와 요약재무제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기준서 제2호와 기준서 제21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서는 전체 재무제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따르면 되고, 요약재무제표를 선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1034호와 이 기준서의 문단 15-35을 따르면 됨.
-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간에 중요한 차이는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자세한 분석은 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서 다루어짐.)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요약재무제표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무관행에서는 실질적으로 요약재무제표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요약재무제표를 선택한다면 기업이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공정한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해진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한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린 극히 드문 상황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문단 19-24) 경영진이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경우 기업이 기준서 또는 해석서의 요구사항으로 부터의 일탈을 관련 감독체계가 금지하지 않는 경우(문단 19)와 금지하는 경우(문단 23)의 두 가지로 나누어 처리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문단 1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급이 없음

(가)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문단 19와 24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므로 발생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나, 혹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 문단 19에 해당하는 것인지(기준서 또는 해석서와의 요구사항으로 부터의 일탈을 관련 감독체계가 금지하지 않는 경우), 또는 문단 23에 해당하는 것인지(기준서 또는 해석서와의 요구사항으로 부터의 일탈을 관련 감독체계가 금지하는 경우)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제3항에 따르면, ‘회사는 제1항의 규정(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해진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한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린 극히 드문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요구사항으로 부터의 일탈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면 이 규정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문단 21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위와 같이 확대해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문단 19와 문단 23이 모두 적용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이런 극히 드문 상황이 만약 발생한다면 그 유형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할 것임. 따라서 이 문단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단 19-24에 규정한 대로 경영진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근거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공시사항에 대한 근거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이 문단은 극히 드물겠지만 재무제표를 왜곡하려는 기업들에게 악용될 소지도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신중한 감시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우리나라 감독기관에서 문단 19와 문단 23 중 한 가지 경우만이 적용가능하도록 하기를 원한다면 관련 법령에서 이런 극히 드문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야 할 것임. 동시에 기본적으로 기준서나 해석서에서 허용한 경영자 재량사항의 금지여부는 감독기관이 정할 사항임.

3 재무상태표

(1)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의 비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문단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비유동성으로 구분하되,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문단 32, 33)

(가)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기준서 제21호에서는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재무제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구분하여 두 가지의 다른 재무상태표 표시방법으로 보고 있음.
- 하지만 이 기준서에서의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우리가 실무적으로 적용해오던 자산 부채의 표시방법과 실질적으로 중요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자산과 부채에 대한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기준은 기준서 제21호와 이 기준서 사이에 중요한 차이는 없음.
- 이 기준서 문단 60에 따라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을 선택하는 경우, 그 구분내의 각 자산 부채의 항목별 배열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음. 또한 문단 57에 따르면 이 기준서는 재무상태표 항목의 순서나 형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음. 따라서 유동/비유동을 구분한 후에는 그 유동성 자산부채항목과 비유동성 자산부채항목의 배열방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

-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적절한 회사로서는 금융회사를 들 수 있는데,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계정과목의 성격별 분류를 넘어서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은 작성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결국 기존에 사용하던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재무상태표 작성방법이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보임.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해외은행들의 사례를 보아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기준서 제21호와 이 기준서 사이에 중요한 차이는 없으므로 기업실무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항목의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상태표 본문에 포함할 최소한의 항목을 대분류 수준에서 예시하고 있음. (문단 54)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을 별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문단 54) •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하는 더욱 세부적인 항목들을 예시하고 있음. (문단 77-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 개별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예시하고 있음. (부록 2 실무지침)

(㉠)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재무상태표 본문에는 대분류 수준의 항목들만을 요구하고 있고, 세부적인 분류에 대해서는 본문 또는 주석에 선택해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비교했을 때 재무상태표 본문이 좀 더 요약된 형태로 표시될 수 있음.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을 별도 표시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음.
(상세한 분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참조)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기존의 대차대조표 본문의 표시방식이 지나치게 상세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기준서에 따라 기업이 최소한의 대분류 수준의 항목들만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비록 세부분류를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 더욱 알아보기 쉽고 잘 정리된 재무제표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의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기준서에서는 자본 항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예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문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본은 크게 자본금,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로 구분됨. (실무지침의 재무상태표와 자본변동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더욱 세부적인 계정과목을 예시하고 있음. (문단 45-49) • 자본항목의 구분 및 통합표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문단 52-56)

(가)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자본의 대분류로서 위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하고 그 소분류 항목의 구분 및 통합표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 기준서에서는 크게 자본금,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자본의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지 않음.

- 이 기준서에서는 자본의 개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하지는 않았지만 IAS 1의 실무지침상의 자본변동표의 예시를 참조하면 실질적으로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중요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이 기준서 사이에 자본항목의 표시에 대해 중요한 차이가 없으므로 기업실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4 포괄손익계산서

(1)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 금융원가, 지분법관련손익, 법인세비용, 중단영업관련손익, 당기순손익의 최소한의 항목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문단 82)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영업손익을 정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1.(3)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의 구분 여부’ 참조) •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감액손실 및 환입 등 포괄손익계산서 본문 또는 주석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문단 98) •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에 대한 분석을 표시할 때 성격별 또는 기능별(또는 매출원가법) 분류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계산서의 경우 단계별로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문단 60)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p>으며, 이러한 표시방법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문단 99,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 비용의 성격에 대해서도 추가로 주석에 공시해야 함. (문단 104) 	

(가)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포함할 최소한의 항목만을 규정함에 따라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포괄손익계산서가 나타날 수 있음.
- 특히 ‘일반사항 1.(5)’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영업손익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정의하지 않기로 했으나, 기업이 자신의 정책에 따라 영업손익을 표시하는 경우는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기업마다 영업손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포괄손익계산서가 나타날 수 있음.
- 참고로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다름없이 중단영업손익은 구분하여 표시하되, 특별손익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비용에 대한 분석을 표시할 때에는 성격별 또는 기능별(또는 매출원가법) 분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통적인 방법은 기능별 분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기업이 성격별 표시를 선택하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이 현행 방법과 완전히 달라지게 됨. 물론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당기순손익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각 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성격별 표시 (문단 102)		기능별 표시 (문단 103)	
수익	X	수익	X
기타 수익	X	매출원가	(X)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X	매출총이익	X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X	기타 수익	X
종업원급여비용	X	물류원가	(X)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X	관리비	(X)
기타 비용	<u>X</u>	기타 비용	<u>(X)</u>
총비용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u>X</u>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u>X</u>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업별로 가장 적합한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형태를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기업간 비교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몇 년간 조정과정이 있을 수 있음.
- 새로 도입된 비용의 성격별 표시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상이하므로 처음에는 이해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기능별 표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도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공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항상 파악되어야 함.

5 자본변동표

(1) 법정적립금의 적립,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등, 배당금,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도 있음. (문단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처분손실, 상환주식상환액 등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각하도록 하고 있음. (문단 83)
--	---

(가)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기본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이외에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의 유형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법정준비금, 임의적립금 등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적립가능한지의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형태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중요성에 따라 재무상태표 본문 또는 주석에 표시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주식할인발행차금과 같은 부의 자본조정 항목을 이익잉여금 처분의 형태로 상각가능한지의 여부 또한 이 기준서에서는 언급된 바가 없으나, 법정준비금 등의 적립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법정적립금의 적립은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일부이므로 이익잉여금 총합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은 이익잉여금 총합계를 감소시킴) 과연 이익잉여금 처분의 형태로 상각가능한 것인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규명할 필요가 있음.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단지 표시의 문제일 뿐이므로 정확한 표시방법만 확정되면 기업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1 적용범위 제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제외 : [문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계약 및 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에서 발생하는 진행 중인 공사(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참조) (2) 금융상품 (3)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u>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농림어업 수확물</u>(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참조) 측정부분 적용제외 : [문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어업 제품과 수확시점 이후의 농림어업 수확물 및 광물자원과 광업 제품의 생산자가 해당 산업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2) 1차상품 중개기업이 재고자산을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판매원가를 차감한 금액)로 측정하는 경우. 	<p>3.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재고자산의 회계에 적용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형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진행 중인 건설공사 (나) 금융상품 (다) <u>농업, 임업, 축산업 및 광업의 재고자산</u>

○ 재무제표와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기준서 제10호는 적용범위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및 광업의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있으며 결론도출근거 A1에서 그 이유를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기준서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농림어업 등에 적용될 별도의 기준서가 없는 상황임. 기업들은 기준서 제10호를 준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왔을 가

능성이 있음. (참고: 관련 기업들의 주석사항3))

- 이 기준서는 기준서 전체의 적용제외와 측정부분의 적용제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문단 2와 3 참조) 즉 문단 2(3)에 따라, a)생물자산과 b)수확시점의 수확물에 대해서는 IAS 2를 적용하지 않으며, 문단 3에 따라, 농림어업 및 광업의 관련 분야에서 순실현가능가치나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IAS 2의 측정부분만을 적용배제하고 있음.
- 이 기준서가 적용되는 경우, 기업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측정규정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나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면서, 변동분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게 됨. 따라서 손익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2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3) (주)동원(광업)의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2-2. 재고자산의 내용과 평가 : 제품은 원유 및 금 재고이며, 저장품은 채탄 및 굴진 자재로 구성되어 있고, 제품은 총평균법, 저장품은 이동평균법에 의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에 따라 기록한 수량을 실지재고조사에 의해 그 차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경우에는 현행대체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에서 차감하여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주)신라교역(수산업)의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다. 재고자산 : 회사의 재고자산의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되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기와 전기 중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147,018천원 및 78,671천원을 각각 재고자산평가손실(어획물매출원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마니커(축산업)의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3) 재고자산의 평가 : 회사는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기록하고 실지 재고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함. [문단 10]	또는 제조원가를 말하며,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문단 6,7]

○ 재무제표와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기준서 제10호가, IAS 2의 원칙을 수용하여, 취득부대비용을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두 기준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3 표준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측정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u>유사한 경우에</u> 사용할 수 있음. • 표준원가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야 함. [문단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은 실제원가로 보고하여야 함. [문단 20]

○ 재무제표와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기준서 제10호는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한 기업도 실제원가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는 표준원가법의 적용결과인 표준원가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원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측정할 수 있어 원가관리회계 차원에서 표준원가법을 사용하는 기업이 공표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조정하여야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 그러나, 유사한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으며 원가차이의 회계 처리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표준원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원가가 실제원가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원가를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측정해 온 현재의 회계실무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

4 후입선출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음. [IAS 2의 IN 13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입선출법을 허용함. [문단 15, 18]

○ 재무제표와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으로 실제 원가흐름을 신뢰성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흔히 절세목적으로 사용되며, 기말B/S에 표시되는 재고자산이 오래 전에 취득한 단가를 반영함으로써 다른 방법에 비하여 영업성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03년 IAS 2 개정당시 재고자산 평가방법에서 제외되었음. (BC9-BC21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이 이 기준서와 관련하여 선택적 면제조항(exemption)이나 의무적 예외조항(exception)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후입선출법을 사용해 온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 등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여야 함.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문단32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경우⁴⁾,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고자산 평가액과의 차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회계정책을

4) 후입선출법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현황 : 2006년 12월 28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732개 임. 그중에 금융업 등 업종의 특성상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기업을 제외한 605개 사 중 178개 사를 조사한 결과(모집단 605개 회사 중 약 30%를 조사함), 3개 회사만 후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었음. 정유업계의 SK 및 S-Oil(단, 두 회사 공히 미착품은 개별법, 저장품은 이동평균법 적용). 한편 자동차관련 제조업인 삼성중공업은 미착품에 한하여 후입선출법 적용함.

변경함에 따른 추가적인 재무제표 작성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5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원가의 분류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고자산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제시하지만 분류표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부른다고 기술하면서, 분류표시를 상세히 제시하지는 않음. [문단 34,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원가로 분류되는 항목과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는 항목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원가 계정 : 모든 재고자산평가손실과 환입,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 영업외비용 계정 :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 [문단 28, 29]

○ 재무제표와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는 ‘원가(cost)를 **비용(expense)**으로 인식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상세 분류표시는 기술하지 않고 있음. 상세 분류표시를 기술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가 손익계산서 양식을 ① 성격별 표시 방법과 ② 기능별 표시 방법으로 제시하여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일관성이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손익계산서 양식은 다음과 같음.

성격별 표시방법 (문단 91)		기능별 표시방법 (문단 92)	
수익	X	수익	X
기타수익	X	매출원가	(X)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X	매출총이익	X
사용된 원재료와 소모품	X	기타수익	X
종업원급여비용	X	유통비	(X)
감가상각비와 기타상각비용	X	관리비	(X)
기타 비용	X	기타 비용	(X)
총 비용	(X)	당기순이익	X
당기순이익	X		

- 손익계산서 양식을 성격별 표시방법으로 할 것인가, 기능별 표시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역사적, 산업적 요인과 기업의 성격에 따라 결정함. 기능별 표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도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공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항상 파악되어야 함(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94).

- 새로운 손익계산서 작성 양식과 손익분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고자산과 관련된 비용의 분류표시가 간략해지고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어떤 손익계산서 양식을 채택하는지에 상관없이,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금액(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분류되는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문단 36 d.), 재무제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매출원가에 상당하는 정보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음.
- 기능별 표시방법의 손익계산서에서, 비정상 감모손실의 회계처리가 문제될 수 있는데, 손실의 성격상 매출원가 보다는 기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 : 개념체계 문단 80⁵⁾)

5) IFRS 개념체계 문단 80

Losses include, for example, those resulting from disasters such as fire and flood, as well as those arising on the disposal of non-current assets. The definition of expenses also includes unrealised losses, for example, those arising from the effects of increases in the rate of exchange for a foreign currency in respect of the borrowings of an entity in that currency. **When losses are recognised in the income statement, they are usually displayed separately** because knowledge of them is useful for the purpose of

making economic decisions. Losses are often reported net of related income.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1 당좌차월의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기업회계기준 제6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 차입은 일반적으로 재무활동으로 간주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의 경우 기업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함. 이 때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되며, 그러한 은행거래약정이 있는 경우 은행잔고는 예금과 차월 사이에서 자주 변동하는 특성이 있음. [문단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규정 없음.

(1) 내용 분석

- 이 기준서에서는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 당좌차월에 대하여 이를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당좌차월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으로 보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함.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되어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금융회사의 요구에 의한 수시상환 조건의 당좌차월은 국내에서 거의 취급하지 않으므로 실무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2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기업회계기준 제6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음. (7)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 기업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때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과 유사함. 따라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함.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현금 선지급이나 대출채권은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함. • [문단 1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포함됨.

(1) 내용 분석

(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현금흐름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기준서에서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경우 재고자산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를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도록 함.

(나) 이 기준서에서는 금융회사의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예: 대출채권, 예수금)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도록 함.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가) 현재 금융회사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은 영업활동,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서를 적용하더라도 변경될 부분이 없음. 그러나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

업이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련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됨.

- (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출채권 등의 분류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나,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채권은 투자활동, 예수금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 현금흐름의 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것임.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이나 예수금의 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단기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일부 기업에 실무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3 파생상품계약에 따른 현금흐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기업회계기준 제6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계약, 선도계약, 옵션계약 및 스왑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함. 다만, 단기매매목적으로 계약을 보유하거나 현금흐름이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함. • 파생상품계약에서 식별가능한 거래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그 계약과 관련된 현금흐름은 위험회피대상 거래의 현금흐름과 동일하게 분류함. • [문단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규정 없음.

(1) 내용 분석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파생상품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이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고, 단기매매목적으로 계약을 보유하는 경우와 현금흐름이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도록 명시함. 다만, 파생상품계약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 거래의 현금흐름과 동일하게 분류하도록 함.

4 외화현금흐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기업회계기준 제6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로 거래된 현금흐름은 현금흐름이 발생한 시점의 기능통화와 외화 사이의 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환산한 기능통화 금액으로 보고함. •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기초와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조정에 포함하여 현금흐름표에 보고하되, 그 금액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구분하여 표시함. • [문단 2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규정 없음.

(1) 내용 분석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화현금흐름에 관련된 규정이 없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현금흐름이 발생한 시점의 환율을 적용(가중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구분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조정항목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함.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에 따라 별도 표시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과는 기말 외화현금의 환산손익과 연결현금흐름표 작성시 기중변
 동에 대하여 평균환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모두 포
 함함. 현재 외화현금의 환산손익은 현금흐름표 작성시 별도로 조
 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
 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됨. 연결현금흐름표 작성시 적용환율 차이
 로 인한 차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변경될 부분이 없음.

5 이자와 배당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기업회계기준 제6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하고, 각 현금흐름은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에 따라 회계기간 동안 지급한 이자금액은 당기손익의 비용항목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자본화하는지에 관계없이 현금흐름표에 총지급액을 공시함. •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나, 다른 업종에서는 현금흐름의 분류가 일치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현금흐름은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이자비용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고,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기업회계기준 제6장
<p>수 있고,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비용(이자지급)이나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이자수입과 배당금수입)으로 보아 각각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비용이므로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이용자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음. • [문단 31~34] 	

(1) 내용 분석

(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이자비용은 영업활동,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경우 이 기준서의 적용에 따라 변동될 부분이 거의 없음. 반면,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의 분류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 기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조건만 제시하고 있음.

(나) 현재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일반적으로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한 차입원가와 함께 총지급액을 표시하여야 함.

(2)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에서 이자와 배당금의 분류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현금흐름을 분류할 수 있으나, 기업의 판단에 의하여 분류를 결정하므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음.

6 법인세와 관련된 현금흐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기업회계기준 제6장
법인세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나, 그 법인세 현금흐름이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명백히 관련되는 경우에는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분류함. [문단 35~36]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제외하고는, 미지급법인세의 지급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함.

(1) 내용 분석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법인세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지 않는 예외사항으로서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특별부가세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명백히 관련되는 경우라고 하여 예외사항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

(2)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실무적으로 법인세 현금흐름은 활동별로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활동별 구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구분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7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회사의 현금흐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기업회계기준 제6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업이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 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투자회사는 배당금이나 대여금과 같이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현금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규정 없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기업회계기준 제6장
<p>름만을 현금흐름표에 보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분법을 적용하여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을 보고하는 기업은 공동 지배기업에 대한 투자, 분배 및 그 밖의 당해 기업과 공동지배기업 사이의 지급액이나 수취액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포함함. [문단 37~38] 	

(1) 내용 분석

- 이 기준서에서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투자한 경우 투자자의 현금흐름표에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현금흐름만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8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부문의 취득과 처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기업회계기준 제6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부문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총현금흐름은 별도로 표시하여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고, 총매수대가 또는 총처분대가 등 관련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함.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부문의 매수대거나 처분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부문이 취득이나 처분 당시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가감한 순액으로 현금흐름표에 보고함. [문단 39~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규정 없음.

(1) 내용 분석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부문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규정이 없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이를 투자활동으로 별도로 표시하고 관련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함.

9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기업회계기준 제6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공시하고, 현금흐름표상의 금액과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해당 항목의 조정내용을 공시함. 또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채택한 정책을 공시하고, 이러한 정책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에 따른 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에 따라 보고함. • [문단 45~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규정 없음.

(1)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의 현금분류정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 현금성자산의 정의를 만족하는 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은 기업의 보유목적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

(2)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기업이 현금관리목적에 맞게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함으로써 거래의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으나, 이자 등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판단에 의하여 구성요소를 결정하므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음.

10 주식공시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기업회계기준 제6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현금거래와 직접법으로 현금흐름표 작성시 당기순손익에 가감할 항목만을 주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권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현금흐름이 둘 이상의 활동에 배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총지급액을 공시함. - 회계기간 중 종속기업이나 기타 사업부문을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매수대가 또는 총처분대가 (2) 매수대가 또는 처분대가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지급하거나 수취한 부분 (3)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부문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 (4)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부문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외의 자산·부채 금액에 대한 주요 항목별 요약정보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공시하고, 현금흐름표상의 금액과 대차대조표에 보고된 해당 항목의 조정내용을 공시함. 또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채택한 정책 및 그러한 정책의 변경에 따른 효과를 공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기준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직접법으로 작성한 경우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과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에 가감할 항목에 관한 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기업회계기준 제6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중요한 금액을 연결실체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경영진의 설명과 함께 그 금액을 공시함. 다음 정보에 대하여 경영진의 설명과 함께 공시하는 것을 권장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영업활동과 자본약정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차입한도 중 미사용금액과 이러한 차입한도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그 내용 영업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현금흐름과는 별도로 영업능력의 증대를 나타내는 현금흐름의 총액 각 보고부문별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의 금액 [문단 36, 40, 45~52] 	

(1)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에서는 하나 이상의 활동에 배분되는 법인세의 총지급액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영업능력의 증대를 위한 현금흐름이나 부문별 현금흐름 등의 공시를 권장함. 기준서에서 공시를 권장하는 사항들의 경우 실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공시가 강제되는 사항들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실무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

1 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거래나 회계사건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고려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p>11 문단 10의 판단(새로운 회계정책의 개발, 적용을 위한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p> <p>(1) <u>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사항을 다루는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요구사항과 지침의 내용</u></p> <p>(2) <u>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u></p> <p>12 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u>경영자는 유사한 재무회계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 기준을 개발하는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실무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려사항은 문단 11에서 기술한 고려사항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u></p>	<p>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거래나 회계사건에 대한 회계정책은 경영자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p> <p>(1) 유사 또는 관련 거래나 회계사건에 대한 기업회계기준</p> <p>(2) 재무회계개념체계</p> <p>(3) (1) 및 (2)와 일관성이 있는 회계관습 및 회계실무</p> <p>(문단 18)</p>

- (1) 회계정책을 개발·적용함에 있어 다른 회계제정기구가 발표한 회계기준(예:USGAAP, 비상장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한 K-GAAP, 실무지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국-국제회계기준(가칭)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거래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조항을 기술하고 있음. 반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이러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음.

- (2) 특정 거래 등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에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는 회계관습 및 회계실무를 기업회계기준 및 재무회계개념체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는 유사한 기업회계기준서 및 재무회계개념체계를 우선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회계관습 및 회계실무는 기업회계기준서 및 재무회계개념체계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로 고려하도록 하였음.

2 중대한 오류 개념의 삭제와 오류수정 회계처리의 원칙변경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한: 어떠한 항목이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항목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는 중요하다. 중요성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누락이나 왜곡표시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그 항목의 크기나 성격 또는 두 가지 모두 결정요소가 될 수 있다. (문단 5) 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 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한다. (문단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오류를 말한다 (문단 4).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문단 23) 중요하지 않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문단 3).

- (1)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경우의 오류

로서 일반적인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보다 엄격한 개념임. 현행 기준서의 이와 같은 개념은 개정전 IAS 8에 근거한 것으로서, IASB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오류의 개념이 실무상 일관성있게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IAS 8을 개정하면서 이와 같은 개념을 삭제하였음. 따라서 개정된 IAS 8에서는 중대한 오류와 중요한 전기오류의 구분이 폐지되었으므로 전기오류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소급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 경우의 중요성의 개념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이러한 개념은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정의한 중요성에 기초하고 있음.

- (2) 현행 기준서 제1호의 문단 2에 따르면 중요하지 않은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은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으므로, 실무상 중대한 오류로 판단하지 않은 당기에 발견된 과거기간의 중요한 오류는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오류 개념의 폐지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에 전기오류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인해 재무제표의 표현의 충실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음.

3 회계정책변경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문단 12). • 회계정책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문단 1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p><u>조정한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다. (문단 24)</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문단25) 	

-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는 예외적인 전진법의 적용을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는 소급적용의 누적적효과를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최초의 회계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 최초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당기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됨.

4 회계추정의 변경이 대차대조표항목에만 영향을 주는 경우의 명시적 문구 삽입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회계추정의 변경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을 변경하거나 자본의 구성요소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추정을 변경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를 인식한다. (문단 37).</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자산, 부채 또는 자본에만 영향을 미치는 회계추정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음.

- (1) 회계추정변경이 자산 및 부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대차대조표항목에만 영향을 주는 경우,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예외조항을 삽입하였음.

- (2) 또한, 다른 기업회계기준서나 기업회계기준해석서에 따라 회계추정변경의 효과를 자본항목에 직접 가감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조항이 필요함.
- (3) 그러나, 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예외조항이 실무상 현행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은 명시적 규정으로 해석됨.

5 오류의 누적적 영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 (실무적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다.) (문단 44).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문단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명시된 기준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회계정책변경의 소급적용의 예외를 참조하여 중대한 오류를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할 것이므로 이는 명시적인 규정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적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기오류의 누적적 효과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시함.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공시사항

구분	추가 공시사항
회계정책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문단28) •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귀속되는 조정금액 (문단28, 29) • 기준서 또는 해석서가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시사항 (문단30, 3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나 기업회계기준해석서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 3) 위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할 다음의 공시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나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명칭 (2) 회계정책 변경이나 예정된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3)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나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시행일 (4)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나 기업회계기준해석서에 대한 기업의 최초 적용 예정일 (5) 다음 중 하나의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나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최초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영향에 관한 내용 (나) 그러한 영향을 알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효과에 관한 기술
회계추정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추정 변경이 <u>당기이후의 회계기간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를 공시</u>, 이 경우 이러한 효과를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 27에서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당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한하여 공시를 요구

구분	추가 공시사항
	하며, 또한 예외적으로 영향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사실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는 당기에 미치는 효과의 공시를 필수사항으로 하였다.
오류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표시되는 가장 빠른 과거기간의 기초금액의 조정금액 • 특정 과거 기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소급하여 재작성할 수 없는 사유 및 오류수정의 적용방법과 적용시기에 관한 내용

7 회계정책의 변경의 공시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u>당기 및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 (나) <u>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조정금액</u> <p>(문단 28, 29)</p>	<p>(바) <u>회계변동연도와 직전 3년간 각 연도별로 재계산된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주당경상이익, 주당순이익 및 기타 중요변동항목의 내역</u></p> <p>(문단 25)</p>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직전 3년간의주당이익 등의 변동항목에 대한 공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는 당기 및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에 대한 주당이익 등의 조정금액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직전 3개년의 기간이 재무제표 본문에 비교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현행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직전 3개년의 변동항목을 공시하여야 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를 적용하는 경우 실무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1 재무제표 : ‘발행승인일’ vs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p>○ 발행승인일</p> <p>- 문단5의 예시 20x2.2.28. 경영진 20x1년도 F/S초안 완성 20x2.3.18. 이사회 재무제표 발행승인 20x2.3.19. 이익과 선별된 재무정보 발표 20x2.4.1. 주주 등 이용가능 20x2.5.15. 정기주총 승인 20x2.5.17. 감독기관에 제출</p> <p>- 문단6의 예시 20x2.3.18. 경영진은 감독이사회(비집행이사 로만 구성)에 제출하기 위하여 재 무제표 발행 승인 20x2.3.26. 감독이사회 동의</p>	<p>○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p> <p>- 원칙: 주총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 (문단 3 내)</p> <p>- 예외: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 서 수정·승인된 경우 에는 주주총회일</p> <p>예시) 현행법상 재무제표 승인 절차 20x2. ~D-6주 재무제표 초안 이사회 승인 20x2. ~D-6주 감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 표제출 20x2. ~D-4주 감사의견 제출 20x2. ~D-1주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재무제 표확정 20x2. ~D-1주 F/S와 감사보고서 공시 20x2. D. 정기주총 승인</p>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20x2.4.1. 주주 등 이용가능 20x2.5.15. 정기주총 승인 20x2.5.17. 감독기관에 제출	
<p>※ 참고: 다음의 회계감사기준(2005.3.30.제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의 제정으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임.</p> <p>560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p> <p>3.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공표일 전에 발견한 사실)</p> <p>3.1 <u>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 공표일(주식회사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승인일)전에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고 경영자와 논의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이 주주총회에서 수정되어 승인되었음을 통보받거나 알게 된 경우도 같다.</u></p> <p>3.2 문단 3.1에 따라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감사보고서의 일자는 회사의 이사회가 수정재무제표를 승인한 일자보다 빨라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문단 2.1의 <u>감사절차는 새로운 감사보고서일까지 확대되어야 한다.</u></p> <p>3.3 문단 3.1에서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경영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여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p> <p>3.4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는 경우 재발행 감사보고서에는 회사가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를 수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동 사항에 관한 수정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참조하라는 내용, 그리고 이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언급을 특기사항문단에 포함하여야 한다.</p>	

2 용어수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보고기간후사건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3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과 주주총회 수정·승인일 사이의 정보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못함.

4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과 주주총회 수정·승인일 사이의 정보에 대한 기업의 수정의무나 공시의무가 단축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1)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전 판매에 대한 진행기준 적용여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계약: 단일 자산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을 건설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문단 3)	이 기준서의 목적 상 건설형 공사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계약 등을 포함한다.(문단 7) (중략) (다)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

(가) 2004년 11월 IFRIC AGENDA Committee는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AASB")의 Urgent Issues Group이 발의한 "Pre-completion contract for the sale of residential development properties"의 건설계약 범위의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완성전 계약(pre-completion contract)은 주거용 부동산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되지(specifically negotiated) 않으며, 관련 계약은 완성을 조건으로 한 주거용부동산의 구매와 판매에 대한 합의(agreement)일 뿐이므로 IAS 11의 건설계약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IAS 18의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인식조건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판매수익은 법적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나) 호주 'UIG Abstract 53'의 주요 논의 내용

- 2003년 4월 호주의 Urgent Issues Group ("UIG")에서는 주거용부동산의 완성전 판매계약(Pre-completion contracts for the sale of residential development properties)에 대하여 실무상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Abstract 53을 공표하여 AAS 11 (IAS 11에 대응되는 호주의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위의 판매계약을 회계처리하도록 하였음.

(ㄷ) Pre-completion contract에 대한 IFRIC의 최근 논의 내용

- ① IFRIC은 2006년 3월에 부동산판매(real estate sales)에 관한 회계기준 해석서를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음. 이 해석서의 목적은 건설이 완료되기 이전에 부동산판매약정이 맺어진 경우 수익을 어느 시점에서 인식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데 있음. ☞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와 IAS 18 *Revenue* 중 어느 기준서를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
- ② IFRIC은 부동산판매계약이 건설계약(construction contract)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건설용역이 '구매자의 상세한 주문(buyer's specification)'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였음. 그 결과 2007년 3월에 부동산판매계약이 IAS 11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지표(indicator)를 해석서에서 예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하였음.
- ③ 2007년 5월에는 부동산판매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이 '구매자의 상세한 주문(buyer's specification)'에 따른 것임을 나타내는 지표(indicator)로서 다음 두 가지를 해석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음.
 - ㉠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구매자가 주요 설계내용을 지정할 수 있고, 건설 중에도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실제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지는 관계없음).
 - ㉡ 구매자가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 소유나 통제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짐. ☞ 하부지표로서, 부동산개발(판매)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가 부동산개발(판매)자에게 자신의 주문대로 건설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제기권을 가지는 것도 논의되었음.

- ④ IFRIC은 추가 검토와 IASB의 승인을 거친 후 조만간 해석서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임(2007년 7월 경).

(2)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인식에 있어 진행기준의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u>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재무보고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u> • 문단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한다. <u>당기공사수익은 공사계약금액에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사 진행률을 적용하여 인식한 누적공사수익에서 전기말까지 계상한 누적공사수익을 차감하여 산출한다.</u> • 당기공사원가는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u>총공사비용에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추정공사손실)을 가산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환입액을 차감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된 타계정대체액을 가감하여 산출한다.</u> • 문단 25, 26

- (가) 원칙적으로 계약수익의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차이가 없으나, 계약원가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서 계약원가를 당기에 실제 발생한 원가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실무적으로 보다 많이 사용되고 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현행 기준서 제정시 채택되었음(A13).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서는 계약원가를 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 당기에 실제 발생한 원가와 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한 원가(총 추정계약원가에 진행률을 곱하여 계산)는 서로 상이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원가가

중요하게 서로 다를 수 있음.

(나) 계약의 진행률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문단 30에 따라 원가 대비법(발생누적원가를 총 추정원가로 나누는 방법)외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 ① 수행한 공사의 측량
- ② 계약공사의 물리적 완성비율

(다) 따라서 계약의 진행률을 위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원가에 관계없이 총 추정계약원가에 위의 방법으로 산정한 진행률을 곱하여 당기에 인식할 계약원가가 계산되므로 이는 현행 기준서에 의하여 인식하는 당기에 실제 발생한 원가와 차이는 있음. 그러나 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두 기준서간에 차이가 없음.

(3) 진행률을 누적발생원가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 진행률 산정을 위한 원가에서 제외되는 원가요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토지의 취득원가 등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함(문단 31)	문단 35 (다) 토지의 취득원가 (라)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마) 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바)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가) 현행 기준서에 의해 진행률에 따라 건설기간에 걸쳐 계약원가로 산입되는 원가요소

- ① 토지의 취득원가
- ② 선급공사원가로 계상된 공사개시전까지 발생한 이주대여비의 순이자비용

- 위의 원가요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서 진행률 계산에

서 제외되는 원가로 예시하지 않고 있음. 만약 위의 원가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진행률 산정을 위한 원가요소에 포함될 것이므로 진행률 자체에 영향을 미쳐 계약수익과 계약원가 모두 현행 기준서하에서 계산된 수익과 원가와 다르게 결정될 것임. 그러나 위의 원가요소는 아파트 등 예약매출을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데 있어 주로 고려되는 사항인바, 당해 예약매출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진행률 산정에 관한 문제에서 논의할 실익이 없음.

(나) 현행 기준서에 의해 당기 공사원가(계약원가)로 처리하지만 진행률에는 산입하지 않는 원가요소

① 자본화대상금융비용

- 위의 원가요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 따라 진행률을 결정할 때 누적발생원가에 포함될 것이므로 진행률 자체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계약수익금액이 현행 기준서 제1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함. 그러나 진행률을 누적발생원가기준으로 결정한다면 두 기준서상 비용으로 인식되는 계약원가금액은 동일함.

(4)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의 재무상태표상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p>문단 42~4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미청구공사는</u>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재무상태표상 <u>자산</u>으로 표시함. $= (\text{누적발생원가} + \text{누적이익}) - (\text{누적손실} + \text{진행청구액})$ • <u>초과청구공사는</u>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재무상태표상 <u>부채</u>로 표시함. $= (\text{누적손실} + \text{진행청구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누적발생원가 + 누적이익)	
-------------------	--

(가) 누적발생원가 + 누적이익 - 누적손실

① 모두 발생시 미성공사(contract work in progress)로 회계처리함. 따라서 미성공사계정에는 실제 발생원가뿐만 아니라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되는 손익이 포함됨. 즉, 미성공사는 원가에 이윤을 가산한 순실현가능액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고자산과 차이가 있음.

② 원가 발생시

(차) 미성공사	xxx	(대) 현금	xxx
----------	-----	--------	-----

③ 기말에 계약손익을 인식시(진행기준에 따라)

(차) 계약원가	xxx	(대) 계약수익	xxx
미성공사	xxx		

(나) 진행청구액

• 공사 대금 청구를 하나의 회계사건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차) 공사미수금(Billed A/R)	xxx	(대) 진행청구액(임시계정)	xxx
-----------------------	-----	-----------------	-----

(다) 미청구공사 또는 초과청구공사

① 재무상태표상에서는 위의 "(가)"와 "(나)"를 서로 상계하여 표시하므로, 위의 "(가)"의 미성공사의 잔액이 (나)의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청구공사"의 과목으로 자산으로 기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의 과목으로 부채로 기록함.

② 따라서 현행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공사미수금은 위의 "미청구공사"와 기말시점현재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Billed A/R)을 더한 금액으로 표시됨. 따라서 총액 개념에서는 기업 회계기준서 제12호와 차이가 없음.

(5)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공시사항

구분	추가 공시사항
계약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공사계약잔액에 신규계약액, 추가계약액 및 계약변경액을 가감한 후, 당기 중 공사수익(계약수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차감하여 당기말 현재의 공사계약잔액을 계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공사계약잔액의 최근 자료
계약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의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의 공사계약에 대한 내용(문단 36의 적용을 받는 공사계약에 대한 주석공시사항) 공무원가(계약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아 관련 공무원가(계약원가)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내용(문단 38의 적용을 받는 공사계약에 대한 주석공시사항)
공사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중인 모든 공사들로부터 공사 전 기간에 걸쳐 실현이 예상되는 총공사손실예상액 및 중요 공사별 총공사손실예상액내역
특정 장기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한 약정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는 채권은 회수계획 및 방법과 이에 관련된 이자 상당액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1) 공사미수금은 실제로 청구(billing)한 채권금액으로 표시되며, 누적청구금액과 공사진행에 따른 순실현가능액(누적원가+누적손익)간의 차이는 "미청구공사(자산)" 또는 "초과청구공사(부채)"의 과목으로 재무상태표에 별도 표시함. 현행 재무상태표상 공사미수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 의하면 청구된 채권(Billed A/R)과 "미청구공사"의 합계금액과 동일함. 총액개념으로는 영향이 없음.

- (2) 아파트 분양 등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경우 관련 예약매출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서 배제됨에 따라 수익인식을 일반적인 수익인식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관련 자산을 완성하고 법적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에 하게 될 것이므로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시점에 관련 누적효과를 계산하여 이를 기초잉여금에 반영하게 되면 재무제표 금액이 전반적으로 변동할 수 있음.
- (3)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약원가를 인식하게 되므로, 원가대비법외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시점에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의 최초기간의 기초잉여금을 조정하여 관련 누적효과를 반영하여야 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1) 원가대비법외의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원가를 인식하는 경우 현재의 방법과 손익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이 경우 실무적으로 당해 기업은 진행률의 산정방법과 총 추정계약원가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회계논제가 될 수 있음.
- (2) 아파트 예약매출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시점에 관련 수익인식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계산하여 소급적용하여야 하므로 실무상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임. 그러나 최초 채택시점 이후부터는 매기 진행기준에 따른 개별 계약관리의 부담이 없어지므로 회계처리가 간편하게 됨.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1 세무가액의 정의 도입

(1) 차이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의 세무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문단 7)이며, 부채의 세무가액은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문단 8)으로 정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과 부채의 세무가액은 해당 자산과 부채가 세무상 자산 또는 부채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의함.(문단 5와 6)

☞ 의미전달이 쉽게 되지 않아 기준서 제정당시 제외하였던 문단이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는 이를 포함함.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특이사항 없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세무기준액(세무가액: 세무상 인정되는 금액)의 정의가 명확해짐으로써 이해가능성이 증진되어 실무적용이 보다 용이해짐

2 타 기준서 개정(예, 사업결합, 주식기준보상)으로 인한 법인세 부분 반영

(1) 차이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권 상각을 고려한 문단 수정 (문단15(1), 21A, 21B 등) • 부의 영업권과 관련된 문단 삭제 및 수정(문단 18(3), 22(1), 24, 66, 67, 68 등) • 주식기준 보상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연법인세(문단 68A, 68B, 68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권 상각/부의영업권 환입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부의영업권 개념 사용 • 없음

☞ IAS 12는 국제회계기준이 제·개정될 때마다 관련 문단을 조정하여 반영해왔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특이사항 없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다른 기준서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명시하여 기준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임

3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 완화

(1) 차이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사용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과세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u>높은</u> 경우(문단 24)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u>거의 확실</u> 하여, 미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문단 20)

☞ ‘probable’의 의미 개정에 따른 효과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시 과세소득이 발생가능성 판단 기준이 거의 확실(80%)에서 높은(50% 초과)으로 완화되었으므로 자산인식금액 증가 기대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판단시 80%이상의 확률로 회계처리하는 것보다 50% 초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쉽게 회계처리할 수 있음

4 종속회사, 지점 및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과 조인트벤처에 대한 지분과 관련한 일시적차이의 인식 예외조건 변경

(1) 차이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나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 가. 소멸시점 통제가능하고 나. 예측가능한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u>높은</u> 경우 (문단 39) 가&나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u>높고</u> 나. 사용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과세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u>높은</u> 경우(문단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나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 가. 소멸시점 통제가능하고 나. 예측가능한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u>거의 확실한</u> 경우(문단 36)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예측가능한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u>거의 확실한</u> 경우(문단 40)

☞ ‘probable’의 의미 개정에 따른 효과 ⇒ 결과적으로, 종속회사, 지점 및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과 조인트벤처에 대한 지분과 관련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여부에 대한 비대칭성 조정

		0%	50%	80%	100%
소멸가능성					
현행	부채	미인식	인식		
	자산	미인식			인식
제1012호	부채	미인식		인식	
	자산	미인식		인식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종속회사, 지점, 관계회사 등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과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의 비대칭성 해소 예상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인식 예외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않는 경우 축소될 것임

5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1) 차이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시 일시적차이에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문단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시 일시적차이에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문단 43)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특이사항 없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측정시 한계세율에서 평균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점의 과세이익을 추정해야 하는 등 실무적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6 사업결합의 결과 취득자의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1) 차이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취득자의 이연법인세자산이 사업결합의 결과로 인식가능하게 된 경우, 사업결합 회계처리로 보지 않음(문단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취득자의 이연법인세자산이 사업결합의 결과로 인식가능하게 된 경우,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을 조정함(문단 57)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취득자의 추가적 자산인식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처리되고, 영업권 등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취득자의 상황에 따라 영업권 등이 계상되는 가능성 작아짐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특이사항 없음

7 사업결합 이후 실현된 피취득자의 이연법인세 자산

(1) 차이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피취득자의 이연법인세자산이 <u>향후 실현된</u> 경우 회계처리(문단 68)• 그러나, 관련 사례는 수정되지 아니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피취득자의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u>인식하는 경우</u>(문단 58)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특이사항 없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표현의 문제일 뿐 실질적으로 차이 없음

8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의 표시와 상계

(1) 차이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 없음• 상계의 법적 권한 있음 & 순액 결제(실현과 동시에 상환) 의도 있을 경우 상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성/비유동성 구분 표시 요구 (문단 60)• 동일 과세당국과 관련된 이연법인 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함(문단 61)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유동성에 따라 분류하지 아니하고 모두 비유동 항목으로 분류하게 됨에 따라 유동비율 등이 다소 낮아질 것임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지 아니 하므로 회계처리 간편화 예상

9 연결재무제표 관련 규정 삭제

(1) 차이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실현손익제거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고려할 내용 규정(문단 63~66)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특이사항 없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다른 문단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가능한 부분이므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10 주식공시 사항의 추가

(1) 차이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직전 회계기간 대비 적용세율 변경(문단 81(4))배당 지급과 관련한 법인세 결과(문단 81(9), 82A, 87A, 87B, 87C)법인세와 관련된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문단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규정 없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특이사항 없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많은 주식공시 사항이 추가되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1) 사후적인 원가(취득 또는 완성후의 원가)의 자산인식조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최초 취득 시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동일한 인식조건을 적용함(문단 10, 12). 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 ②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자본적 지출’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초 취득 시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와는 다른 인식조건을 적용함(문단 22). ☞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자산)로 처리

(2)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하면서 대체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할 때 대체되는 부분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대체되는 부분이 별도의 인식단위나 감가상각단위로 식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장부금액을 결정하여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함(문단 13, 14, 70).	유형자산의 일부를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당해 자산을 교체할 때 교체된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함(문단25). 그러나 유형자산의 일부를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의 자산대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3) 정기적인 종합검사 원가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	별개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유형자산의 일반적인 인식조건을 충족할 때 자본적 지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함시킴. 이 경우 물리적 부분과는 별개로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와 관련된 장부금액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함(문단 14).	로 처리함(문단23). 그러나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종합검사 관련 장부금액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4) 복구원가의 범위와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의무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요소로 나누고, 두 가지 각각에 관련된 복구원가를 모두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킴(문단 1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형자산 취득 또는 설치의 결과로서 부담하게 되는 복구 의무 ② 유형자산을 특정 기간동안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복구 의무 다만, 위 ②가 제품생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조원가로 회계처리함(문단 18). - 법규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복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원가를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킴. 그러나 취득의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 의무와 관련된 복구원가만 해당됨(문단 12 (a), 13). 사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 의무와 관련된 복구원가(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복구원가)는 해당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함(문단 13). - 법규의 신설, 계약조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사용하는 도중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함(문단13).

(5) 교환거래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거래에 다음과 같이 원칙과 예외의 방식으로 규정함(문단 24). ① 원칙: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 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거래를 동종자산간 교환거래와 이종자산간 교환거래로 나누고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① 이종교환: 취득한 자산의 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p>함(문단 24, 26). 다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함(문단 26).</p> <p>② 예외: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거나, 교환대상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함(문단 24).</p> <p>-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갖기 위한 요건을 규정함(문단 25).</p>	<p>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문단 19)</p> <p>② 동종교환: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함(문단 21).</p> <p>- 교환거래가 동종교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이종교환으로 간주되는 요건을 규정함(문단 21).</p>

(6) 유형자산의 평가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함(문단 29).	원가모형(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만 인정됨(문단 5(재)).

(7)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단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일부의 원가가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별도로 감가상각하여야 함(문단 43).	유형자산 일부의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이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유형자산으로 인식함(문단 10). 그러나 중요성에 따른 감가상각단위 구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8) 잔존가치의 정의 및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여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함(문단 51).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주기적인 재검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A19).

(9)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함(문단 61).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의무는 없으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함 (문단 34, A19)

(10) 자산손상에 대한 보상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p>관련 거래를 모두 분리하여 각각 회계처리함(문단 66).</p> <p>① 자산손상</p> <p>② 처분되는 유형자산의 제거</p> <p>③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삼자로부터 받는 보상금</p> <p>④ 복원이나 대체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된 유형자산의 원가</p>	관련규정 없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1) 사후적인 원가의 자산인식조건을 규정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기존의 '자본적 지출' 개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 (2) 유형자산의 일부가 별도의 인식단위로 식별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을 결정하여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므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기준서 5호를 적용할 때보다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금액이 감소하고 그 결과로 후속 감가상각비도 감소함.
- (3) 정기적인 종합검사 원가의 경우에도 위 (2)와 같은 영향이 있음.
- (4) 유형자산 사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의무와 관련된 원가는, 기준서 5호에 따르면 모두 비용이나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반면, 기준서(안) 1016호에 따르면 제품생산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킴. 따라서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금액이 증가하고 그 결과로 후속 감가상각비도 증가함.
- (5) 교환거래의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기존에 동종교환과 이종교환으로 구분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 (6) 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 원가모형에 비하여 순자산이 과대/과소 계상될 수 있음.
- (7) 유형자산의 중요한 일부는 별도로 감가상각하여야 하므로 기준서 5호를 적용할 때보다 감가상각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
- (8)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함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그 결과로 감가상각비가 당초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
- (9) 감가상각방법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함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그 결과로 감가상각비가 당초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 또 감가상각방법을 기준서 5호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반면, 기준서(안) 1016호에서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므로 회계변경누적효과(이익잉여금)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함.

- (10) 자산손상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를 모두 분리하여 각각 회계처리하므로 수익과 비용의 총액이 증가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1)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다만, 문단 70에서 실무적으로 당해 장부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정기적인 종합검사 원가의 경우에도 동일한 영향이 있음.
- (2) 교환거래의 경우, 기준서 5호를 적용할 때에는 동종교환과 이종교환을 구분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였으나, 기준서(안) 1016호를 적용하면 더 구체적인 요건을 적용하여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3)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재평가와 관련하여 공정가치 측정시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4) 유형자산의 중요한 일부를 별도의 감가상각단위로 식별해야 함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노력과 비용이 증가될 수 있음.
- (5)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여야 하므로 재무제표 작성 노력과 비용이 증가될 수 있음.
- (6)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회계정책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변경으로 간주하므로 정책변경의 정당성에 관한 주석을 공시하여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음. 또한 회계정책변경의 효과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고 전진적으로 처리하므로 재무제표 작성 노력과 비용이 감소됨.
- (7) 자산손상에 대한 보상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 실무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1 적용범위 : 적용배제 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활동'의 적용대상이 되는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자산과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의 측정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음[문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규정 없음 기준서 제19호 제정당시 K-GAAP에 '투자부동산', '농림어업'관련 기준서가 없었으므로 IAS17 '리스'의 관련 문단을 수용할 수 없었음

2 용어 및 개념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 vs 리스실행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약정일(the inception of the lease)과 리스기간개시일(the commencement of the lease term)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리스약정일 :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사항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빠른 날 → 리스의 분류 결정일, 금융리스의 경우 채권·채무액의 결정기준일(공정가액 산정기준일) 리스기간개시일 : 리스이용자가 리스한 자산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 리스의 최초 인식일 즉, 리스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최초로 인식하는 날, 감가상각 개시일 [문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의 구분이 없음 국내의 리스는 일반적으로 리스이용자가 먼저 결정되고 나중에 리스자산이 취득되는 형태로 보았음 따라서,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의 개념인 리스실행일로 단일화 하였음. 리스실행일은 리스분류, 리스자산 공정가액 결정일, 리스료 기산일, 감가상각의 개시일 등으로 사용함 그런데 실무적으로 리스약정일과 리스기간개시일의 구분이 의미가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S 17 문단5 참조]

임가매수선택권, 임가갱신선택권, 전대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정의하지 않음 • 전대리스(sublease)라는 용어는 본문에서 사용함 • [문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정의 함

경제적내용연수와 내용연수 vs 내용연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내용연수(economic life)와 내용연수(useful life)를 구분하여 용어정의 함 • 경제적내용연수 : 여러 이용자에 의한 리스자산의 일반적인 경제적 사용가능기간 → 리스분류에서만 사용됨 • 내용연수 : 리스제공자 또는 리스이용자에 의한 예상사용기간 →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으로 사용됨 • [문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내용연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IAS 17의 입장은 수용하였음 • 내용연수라는 용어만을 사용하되, 리스분류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고 • 감가상각기간 목적으로는 '리스제공자의 내용연수' 또는 '리스이용자의 내용연수'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음 • 실무적으로 리스분류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사항임

미실현금융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총투자와 리스순투자의 차이를 미실현금융수익(Unearned finance income)으로 정의 함 • [문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당연한 정의이고 3개 용어의 정의가 서로 맞물릴 수 있다는 이유로 용어정의 하지 않음

3 측정: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이자비용 산정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리스이자비용의 기간 배분시 계산의 단순화를 위하여 일정형태의 개산방식(approximation)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문단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규정 없음

4 인식과 측정 및 표시 : 해석[56-90] 관련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회계처리 (하기 3.)

5 재무제표 및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1) 기준서 제19호가 IAS 17의 규정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였음. 따라서 리스회계처리의 기본적인 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식과 측정 및 표시와 공시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는 없다고 판단함
- (2) 다만, 일부 개념 및 용어들의 수용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그러한 차이 때문에 기준의 내용 및 실무 적용에서 미세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6 해석 [56-90] 관련

(1) 해석 [56-90]의 현재 상황

- (가) 구 리스준칙을 근거로 만들어진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는 리스회계의 변칙적 적용과 기업회계기준에 배치되는 차감표시의 문제를 안고 있음
- (나) 기준서 제19호를 제정하면서 해석 [56-90]의 폐지가 논의 되었으나, 업계와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추후에 폐지하기로 하였음
- (다) 당시의 판단은 2-3년 기간 동안 관련기관들에서 해결방안을 찾으라는 것이었음
- (라) 한편 기준서 제19호가 구 리스준칙을 대체함으로써 해석 [56-90]은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 있음

(2) 해석 [56-90]의 주요내용

- (가) 임대개시 시점과 임대기간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융리스 분류요건 중 **염가구매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리스 회계처리를 인정**
 - 사업시행 단지별로 **입주비율**(계약체결 후 실제입주 또는 임대보증금 완납 후 입주가능 상태기준)이 90% 이상일 것
 - 당해 임대주택의 **공정가액**(감정평가금액 또는 주위시세)과 **산정가격**(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서 규정) 중 낮은 가격이 입주자모집 당시의 당해 주택가격(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서 규정) 보다 높을 것
- (나)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국민주택기금차입금,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채권금액을 한도로 당해 임대주택채권에서 차감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1 적용배제 항목의 추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단 6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에 관련된 다음 항목을 적용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농림어업활동(agricultural activity)과 관련된 생물자산(biological assets)의 최초인식과 공정가치의 변동 (7) 수확물(agricultural produce)의 최초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임산물, 가축⁶⁾의 자연적 가치증가'에 대해서 본 기준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문단 3)

- (1)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서는 농산물, 임산물, 가축의 '자연적 가치증가'에 대해서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최초인식'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에 따르면 생물자산 등의 최초인식 시점에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어로어업이나 별목업 등의 수익인식은 본 기준서를 적용함(참고: 양식어업이나 영림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2 거래의 주목적 식별기준- 재화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의 식별에 대한 원칙만 규정. (문단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의 식별에 대한 원칙과 함께 거래의 주목적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음.(문단 11)

6) 현행기준서 제4호에서는 '어업'에 대한 언급이 없음. IFRS는 양식어업과 어로어업으로 구분하여 양식어업은 IAS 41을 적용하고 어로어업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IAS 18의 부록 문단10, 문단11에 현행기준서 제4호 문단11과 유사한 내용이 있음

3 수익인식 조건-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 'probable'의 해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bable을 '가능성이 높은'(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제1038호, 제1039호)으로 번역하여 highly probable(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가능성이 매우 높은')과 구별함. • (문단14, 20,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bable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으로 표현해 왔음. (문단 12, 20, 28)

○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매우 높은'에서 '높은'으로 완화 된다면 수익을 조기에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

4 용역제공거래 전체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문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함. (문단 24)

- 이 기준서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의 문단36에 현행기준서 제4호와 동일한 규정이 존재함.

- 또한 이 기준서 문단 21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문단 36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

5 주식공시사항- 주요 수익항목에 대한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공시(문단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인식에 적용한 회계정책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 중 교환에서 생긴 수익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공시(문단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인식에 적용한 회계정책

- 이 기준서에서는 ‘주요 수익항목’과 관련된 사항의 주식공시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6 지분증권 취득 전 순이익에서 결의된 배당금의 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분증권의 취득 전 순이익과 관련하여 결의된 배당금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함. 임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는 지분증권의 취득 전 순이익에서 결의된 배당금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이 지분증권원가의 일부 회수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한 수익으로 인식함.(문단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문 규정 없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1) 퇴직급여채무의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기업회계기준 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측정함. 즉, 미래의 퇴직급여를 추정할 때 미래의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며,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함.(문단 63~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산가치 개념을 채택함. 즉, 회계연도 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함.⁷⁾

(2)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채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기업회계기준 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식함.(문단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퇴직금지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이 없으므로 인식하지 않음.

(3) 퇴직급여채무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와 개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기업회계기준 제27조, 해석 1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채무의 변동액을 ‘과거근무원가’로 정의함. 또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 및 실제치와의 차이로 인한 퇴직급여채무의 변동액을 ‘보험수리적손익’으로 정의함. 과거근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근무원가와 같은 별도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근무원가⁸⁾가 당기에 일괄 반영되도록 함(해석 13-27의 1.나). 한편 청산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보험수리적손익과 같은 별도의 용

7) 적용의견서 05-2에 따르면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면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함. 그러나 현행 실무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회사가 퇴직연금제도규약에 따라 퇴직일시금 상당액으로 일시납 연금상품을 구매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기업회계기준 제27조, 해석 13-27
가와 보험수리적손익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연상각하도록 함.(문단 7, 92~101)	어나 개념은 존재하지 않음.

(4) 사외적립자산의 측정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기업회계기준 제27조, 해석 13-27
• 공정가치(문단 54, 56, 102)	• 퇴직보험예치금이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측정기준에 대해서는 명문의 구정을 두고 있지 않음 ⁹⁾

(5) 사외적립자산 수익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기업회계기준 제27조, 해석 13-27
• 기대수익 ¹⁰⁾ 을 퇴직급여원가(비용)에서 차감함(문단 61, 105~107)	•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은 별도의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함(해석 13-27의 2.다) ¹¹⁾

(6) 해고급여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와 제24호
• 명시적 용어정의를 두고 있으며, 인식과 측정기준을 별도로 규정함(문단 7, 133~143)	• 명시적 용어정의나 인식과 측정기준은 없고, 기준서 제21호와 제24호의 실무지침에서 판관비에 포함되는 항목의 하나로만 제시하고 있음(제21호-A93, 제24호-A84)

8) 급여규정의 개정과 급여의 인상으로 인한 퇴직금소요액의 증가

9) 적용의견서 05-2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함. 퇴직연금운용자산은 그 구성자산별로 각각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측정함(예: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10)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이는 보험수리적손익에 포함시킴.(문단 105)

11) 또 예컨대, 퇴직연금운용자산에 포함된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이나 처분손익은 기준서 제8호 및 제21호에 따라 영업외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함.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1)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인 '미래임금상승률'과 '할인율'의 차이에 따라 보험수리적으로 측정되는 퇴직급여채무가 현행 퇴직급여충당금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 즉, 미래임금상승률이 할인율보다 큰 경우 퇴직급여채무가 현행보다 증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 퇴직급여채무가 현행보다 감소하게 됨.
- (2) 보험수리적 가정이 바뀔에 따라 퇴직급여채무가 변동하고 그 결과 손익이 발생함. 이 기준서(안)에서는 이를 보험수리적손익이라 함.
- (3) 과거근무원가의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르면 당기에 일괄반영하는바¹²⁾, 과거근무원가에 대해 별도의 가득기간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이 기준서(안)에 따르더라도 즉시 인식되므로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음. 다만, 과거근무원가에 대해 별도의 가득기간이 부과된다면 그 기간동안 이연상각되는데, 현행 기준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연상각효과를 새 회계기준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기는 어려움.
- (4)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이 퇴직급여원가(비용)에서 차감되므로, 제조원가나 판관비가 감소하고 영업외수익도 감소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1) 퇴직급여채무를 보험수리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문 보험계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회계처리비용

12) 기준 제27조에 따른 측정방법을 고려할 때 당기에 일괄반영하려면 별도의 가득기간이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임. 왜냐하면 과거근무원가에 대해 별도의 가득기간이 부과되는 경우 기준 제27조에 따르면 가득기간중에는 퇴직일시금추계액에 포함할 수 없기 때문임.

및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퇴직일시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기업에서 체감하는 실질 비용과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왜냐하면 기업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기금재정계산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받는 보험수리적 평가가 회계처리에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지만, 퇴직일시금제도를 설정하게 되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 보험수리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임.

- (2) 만약 회계감사목적으로 보험수리적 평가에 관해 전문 보험계리인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이든 퇴직일시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이든 간에 회계감사과정상 전문가활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 (3) 중요하고도 민감한 보험수리적 가정이라 할 수 있는 할인율과 기대수익률 산정에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 요구됨.
- (4) 해고급여의 인식시점¹³⁾을 결정하기 위해 구조조정 등 관련 절차의 경과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음.

13) 예: 기업이 공식적인 세부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계획이 현실적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없는 시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1) 비화폐성 정부보조금의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1020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나 경우에 따라서 대체적인 방법으로 명목금액으로 기록(문단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나 공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31, 제5호 문단 18)

- 현행기업회계기준은 공정가치로만 측정하게 되어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는 명목금액으로 기록하는 것도 대안으로 허용함

(2)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1020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문단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기업회계기준 제71조)

(3)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1020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하거나 대안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 (문단 29~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방법 두 가지가 서로 선택가능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강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는 선택사항임

(4)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

기업회계기준서 1020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 회계추정 변경으로 회계처리(문단 32)	• 명시된 규정 없음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규정상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실무적으로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차이점이 없음

(5) 정부지원의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1020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 인식된 정부지원에 부수되는 미 이행 조건과 기타 우발상황을 공시(문단 39)	• 명시된 규정 없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차감계정이 아닌 이연수익으로 표시할 수 있어 이연수익으로 표시할 경우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게 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정부지원에 대한 공시사항이외에 추가적으로 기업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1) 은행업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업종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화폐성항목은 결산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IAS 21 par.23) 해외사업장 등의 재무제표를 보고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대차대조표일의 결산환율로 환산하며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IAS 21 par.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업의 경우 일반기업과 상이한 환산방법을 적용(기업회계기준 제90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함.(은행업회계처리준칙 30 가) 해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함.(은행업회계처리준칙 31 가)

(2) 기능통화 개념의 도입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통화와 보고통화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통화의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통화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침을 제시하고 있음(문단 9~14)	

(3)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 자본항목으로 인식(문단 32)	• 당기손익으로 인식 ¹⁴⁾

(4) 해외사업장의 일부 처분시 외환차이 누계액의 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처분한 부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문단 49)	• 해외사업장의 전부 처분의 경우에는 관련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기업회계기준 제69조 제3항) 일부 처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5)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조정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보고 해	• 명시된 규정 없음

14) 제목: 관계회사에 대한 장기성 채권의 외화환산

사건번호: 질의회신03-032, 2003.2.11.

질의: 지배회사가 지분을 100%의 해외종속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화장기성 채권은 지배회사가 실질적으로 현금 또는 기타의 대가로서 회수할 의지가 없고 추후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종속회사에 출자전환할 예정인바, 이 경우 지배회사는 외화장기성 채권의 외화환산손익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회신: 외화장기성 채권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제3항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결산환율로 환산(문단 47)	

- (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명백하게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결산환율로 환산함(IAS 21 BC28)
- (나) 영업권을 취득자의 피취득자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취득자의 자산으로 취급해 환위험이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영업권의 대부분이 별도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형자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 특히 무형자산과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영업권은 해외사업장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며, 해외사업장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영업권은 해외사업장의 자산으로 보아 결산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타당함(IAS 21 BC29~32)

(6) 기능통화의 변경효과 및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통화의 변경한 경우 전진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즉 기능통화를 변경한 날의 환율을 사용하여 모든 항목을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문단 35~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시된 규정 없음

(7)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일 경우 재무제표의 작성방법

- (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기업 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보고통화 기능통화		초인플레이션 경제가 아닌 경우		초인플레이션 경제인 경우	
		당기재무제표	비교표시 재무제표	당기재무제표	비교표시 재무제표
초인플레이션 경제가 아닌 경우	자산 부채	당기 B/S 결산환율	비교표시 B/S 결산환율	당기 B/S 결산환율	당기 B/S 결산환율
	수익 비용	해당 거래일의 환율	해당 거래일의 환율	해당 거래일의 환율	해당 거래일의 환율
	자본	명시된 규정 없음	명시된 규정 없음	명시된 규정 없음	명시된 규정 없음
초인플레이션 경제인 경우	자산 부채	당기 B/S 결산환율	전기말 보고 금액	당기 B/S 결산환율	당기 B/S 결산환율
	수익 비용	당기 B/S 결산환율	전기말 보고 금액	당기 B/S 결산환율	당기 B/S 결산환율
	자본	당기 B/S 결산환율	전기말 보고 금액	당기 B/S 결산환율	당기 B/S 결산환율

- (나) 보고통화는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의 통화이며 기능통화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일 경우에 비교표시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환율이 두 경제의 물가수준의 차이를 완전히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임.

(8)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의 대차대조표일이 다른 경우의 환율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해외사업장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나 보고기업의 대차대조표일까지 환율이 중요하게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반영하도록 규정(문단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사용하고, 환율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지분법피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문단34)

(9) 환율이 일시적으로 발표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환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의 환율을 사용(문단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는 명시된 규정은 없음 그러나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 견서에는 계속성원칙을 준수하여 이전 회계연도에 적용한 환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3-2] 금융기관이 휴무하는 경우의 결산환율 적용)¹⁵⁾

(10)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의 계정과목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분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차손익의 계정과목으로 표시하며 화폐성외화자산(또는 부채)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표시(기업회계기준 제48조와 제68조)

15) 제목: 금융기관이 휴무하는 경우의 결산환율적용

사건번호: 해석사례2003-02, 2003.2.18.

질의: 결산일을 전후하여(예를 들면 12월 결산의 경우 20X1.12.31.부터 20X2.1.3.까지) 금융기관의 외환거래가 중단되어 동 기간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결산일이 12.31.인 법인의 20X1년 결산시 적용할 환율은.

회신: 이전 회계연도까지 회계연도종료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였다면 20X1.12.30.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회계연도에 최초로 고시되는 환율을 적용하였다면 20X2.1.4.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1 외화환산을 위한 적용환율은 계속성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0X1.12.31.부터 20X2.1.3.까지 금융기관이 휴무하여 외환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12.31.)에 고시되는 기준환율을 적용한 경우: 20X1년 12월 30일에 고시된 기준환율을 적용

나 다음회계연도에 최초(일반적으로 1.3.)로 고시되는 기준환율을 적용한 경우: 20X2년 1월 4일 고시된 기준환율을 적용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1) 기능통화의 변경효과 및 표시

- (가) 기능통화를 당기에 변경하여 전진적용 하더라도 보고통화는 변동이 없으므로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에 기능통화의 변경이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나) 기능통화를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전진적용한다는 의미는 자산·부채와 자본 항목을 변경된 기능통화로 일괄적으로 환산하여 새로운 기초가액을 확정시키는 것임. 따라서 기능통화 A에서 기능통화 B로 변경하더라도 새롭게 확정된 비교표시되는 금액은 다시 보고통화로 환산하여야 하므로 기능통화 변경전 재무제표 보고금액과 동일하게 될 것임.

(2)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의 회계처리

- (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화폐성항목은 환산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분류함에 따라 당기손익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나) 그러나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가능성이 높지 않은’이란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3)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조정액

- (가)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 개시일 이후의 해외사업장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조정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전진적용한다.
- (나)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기 전에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조정액은 소급적용할 수

있으나 비교표시 재무정보인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계상한 기초와 기말의 변동내역 파악 등 실무적으로 소급적 용하기 어려운 경우나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전진적용할 수도 있다. 전진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조정액을 보고기업의 자산·부채로 처리하여 보고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하는 항목이거나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 본다.

(4) 환율이 일시적으로 발표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환율

일반적으로 환율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1) 은행업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는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은행업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으나 은행의 자산과 부채 항목의 대부분이 화폐성이고 비화폐성항목의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적용의 어려움 등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기능통화 개념의 도입

(가) 기능통화의 결정은 이 기준서의 핵심 규정으로 경영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 따라서 기업은 기능통화 결정시 기준서에 제시된 주요지표에 대한 고려사항과 주요지표 적용이 어려워 보조지표를 적용하였을 때에도 역시 이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배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종속회사, 관계회사, 조인트벤처와 지점에 대하여 모두 수행하여야 함.

(나)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기능통화를 외화로 결정할 수 있어 거액의 외화환산손익으로 인한 재무상태와 경영실적 왜곡현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3)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의 대차대조표일이 다른 경우의 환율 적용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의 원칙과 보칙이 바뀌는 것으로 환율이 안정되어 있다면 실무적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4) 환율이 일시적으로 발표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환율

국내 세법과 상충되며 변경으로 인한 금액적 중요성이 미미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기업은 소수일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2001.11.1. 번호개정)

- 1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001.11.1.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1) 차입원가의 즉시비용화 삭제

(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서 원칙적 회계처리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차입원가의 즉시비용화를 삭제하고,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으로 허용해오던 자본화만을 인정함.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는 자본화만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SFAS No. 34 Capitalization of Interest Cost의 규정과도 정합한 내용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8.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6.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후략]

(2) 적용범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 <u>자본의 실제원가 또는 내재원가</u> 는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문화 함 [문단 3]	• 해당 규정 없음

(3) 적격자산 (자본화대상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u>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u> 자산으로 정의됨 [문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u>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u>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으로 정의되어 있음 [문단 3(나)]

(4) 외환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차입원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됨 [문단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환차이(환율변동손익)에 대한 <u>용어정의</u> 및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u>산정기준</u>이 규정되어 있음 [문단 3(다), 5]

(5) 차입원가 해당 항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예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및 <u>채권·채무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u>과 차입금 등에 이자율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u>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u>과 거래손익을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예시에 포함함 [문단 4(다), 4(바)]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1) 자본화 적격자산에 대한 단일화된 회계처리방법(차입원가자본화)이 의무화되므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됨
- (2) 현행 기준서 제7호의 원칙적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오던 기업의 총자산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1) 현행 기준서 제7호의 원칙적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오던 기업의 경우 자본화가능차입원가의 산정, 특정 및 일반차입금의 구분, 자본화율의 산정 등을 실무에 적용시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2) 현행 기준서 제7호에 명시되어 있는 외환차이(환율변동손익)의 정의 [문단 3대] 및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산정기준[문단 5]이 삭제됨에 따라, 외화차입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선업 등과 같은 산업에 있어 관련 회계처리에 자의적 판단 및 과도한 자본화 가능성이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1 중대한 영향력과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기업의 범위(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계기업¹⁶⁾)(문단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분법피투자회사의 범위(기업회계 기준서 제1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분법피투자회사^{17) 18)})(문단 9(2))

○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소유로 판단하는 중대한 영향력 기준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관계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소유자'로 분류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2 종속기업으로 분류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의 정의만 제시(문단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여부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문단 9(마))

○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지배의 정의는 동일함.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에서는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

16)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명백하게 중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7)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8) 종속회사는 기준서 제20호 문단 9(1)(가)에서 별도로 구분하고 있음.

정하도록 하므로 외감법 시행령(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30% 초과 소유 최대출자의 경우 등도 지배·종속회사에 포함, 자산규모 70억 미만의 회사 등은 종속회사에서 제외)에 의한 종속회사의 범위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규정하는 종속기업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종속기업으로 구분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3 주요경영진 보상에 대한 공시의무 면제 여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기업의 공시 의무 면제 규정 없음(문단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요경영진 보상에 관한 주식 공시 생략 가능(문단 15)

○ 기업 실무에의 주요 영향

- 주권을 상장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에도 주요경영진 보상에 대해 예외없이 공시해야함.

4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주식, 채권에 관한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 대상인 특수관계자거래의 예시(문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주식(출자금 포함)의 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및 장부금액과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채권의 장부금액 공시 추가(문단 19)

(1) 내용 분석

- (가) 이 기준서 문단 20에는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사항의 예시에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나)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에 투자한 경우 관련 기준서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주식공시사항 중 일부를 주식으로 기재해야함¹⁹⁾.

(2) 기업 실무에의 주요 영향

-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이외의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경우 명시적인 주식공시 요구가 없으므로 공시부담이 일부 감소될 수 있음.

5 연결실체에 속하는 복수의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에의 참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 연결실체에 속하는 기업간에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특수관계자거래에 해당함(문단 20)	• 명시적인 규정 없음(문단 19)

○ 기업 실무에의 주요 영향

- IAS 24가 개정되어 추가된 내용임.

19)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43), IAS 28 '관계기업 투자' (문단 37),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문단 56)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 (1)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대응되는 기준이 없고 법률상 퇴직급여제도의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가 요구되지도 않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 (2) 기준서(안) 제1026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가) 확정급여제도의 재무제표는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 보고서와 기금정책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다.
 - (나) 확정급여제도의 재무제표는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한다.
 - ① 다음 사항을 나타내는 보고서
 - i.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
 - ii.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가득급여와 비가득급여로 구분한다.
 - iii. 초과액 또는 부족액
 - ②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여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을 나타내는 보고서
 - i.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에 관한 주식공시, 가득급여와 비가득급여로 구분한다.
 - ii. 첨부된 보험계리인의 보고서에 있는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에 관한 정보로의 참조표시
 - (다)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현재임금수준이나 미래임금수준을 사용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둘 중 결정근거로 사용된 것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라) 확정급여제도의 재무제표에는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와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 간의 관계, 그리고 약정급여를 위한 기금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 (마) 퇴직급여제도의 투자자산은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현재에는 없는 새로운 형식의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됨. 물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과 같은 관련 법률에서 추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를 요구할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있으며, 관련 법률의 요구가 없는 한 해당사항이 없어 이 기준서(안)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1) 새로운 형식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야 하므로 시행초기에 실무 적용능력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2)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법률의 요구가 없는 한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될 일이 없어 기업실무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1 연결재무제표 작성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기업. 단, 문단 10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문단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상위지배회사(문단 5(1), 문단 7). 단,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감규정²⁰⁾ 제6조에서 정하는 중간 지배회사(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외감법²¹⁾ 시행령 제1조의3 제3항)

○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현행 외감법 시행령보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자의 범위가 넓어짐.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종속기업. 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종속기업은 당해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문단 12,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감법 시행령 1조의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에 따라 현행 외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에는 포함되나 이 기준서에 따라 연결대상에

2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서 제외되는 피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회계기간에 대해 소급적용해야함. 이 기준서에 따라 연결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종속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사업결합에 대한 내용을 따름.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연결대상에 새로 포함되거나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투자기업과 관련하여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해야함.

3 별도재무제표 작성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의 경우 별도 재무제표 작성의무는 없음.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중간 지배기업(문단 8), 법규에서 별도재무제표 작성을 규정하거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문단 3)에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재무제표 작성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함.

○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의 적용 이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 대신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면²²⁾ 기존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작성된 통계자료와의 비교가능성은 저하될 것임.

22)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로 인한 지배기업의 부담 증가 등은 법령 개정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고려하지 아니함.

4 회계연도 중 연결실체 변동 시 손익 반영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취득일부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를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문단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연도 중에 종속회사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의 당해 회계기간 전체의 손익을 항목별로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종속회사 매수일 직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순이익(손실)을 일괄하여 차감(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문단 32)

○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에서는 회계연도 중 연결실체 변동 시 손익을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5 해외소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 환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단 34에서 별도로 규정

6 지배력 상실시점의 잔존 보유 주식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문단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보유 투자주식의 장부금액(문단 29)

○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기보유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순자산 및 순손익이 증감함.

○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지배력 취득시점과 상실시점에 모두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함에 따라 논리적 일관성으로 인해 이해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공정가치 평가를 하여야 하는 부담 가중.

7 둘 이상의 거래(약정)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단일 거래로 볼 수 있는 지표 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의 거래를 단일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다음의 지표 제시(문단 33) ① 둘 이상의 거래가 동시에 체결되거나, 서로 고려되어 체결된다 ② 둘 이상의 거래가 종합적으로 상업적 효과(commercial effect)를 위하여 계획된 단일 거래이다 ③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기 위하여, 적어도 또 다른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거래가 경제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나, 다른 거래와 함께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정당화된(예: 한 거래에서 주식을 시장가치 이하로 처분하였으나 후속적인 처분가격이 시장가치 이상이 되어 보상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적인 규정 없음

○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경제적 실질에 대한 표현의 충실성을 제고함

○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판단할 필요가 발생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회사 투자’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1)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여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FRS 하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일반재무제표이므로 중대한 영향력에 지배와 공동지배를 포함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속기업 : 연결로 반영 공동지배대상기업 : 비례연결로 반영 관계기업 : 지분법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K-GAAP 하에서는 개별재무제표가 일반재무제표이므로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관계회사 뿐만 아니라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도 지분법으로 평가함. 종속회사 투자에 대한 평가규정이 별도로 있음(문단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속회사, 공동지배회사, 관계회사 : 지분법으로 평가
<pre> graph TD P([P(지배)]) --> s1([s1(종속)]) P --> s3([s3(종속)]) s1 --> s2([s2(종속)]) subgraph Consolidated s1 s2 s3 end </pre>	
P가 작성하는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P+s1+s2+s3) 별도재무제표(P+f.v./cost s1,s2,s3) 없음	P가 작성하는 재무제표 좌동 없음 재무제표 (P+지분법 s1,s2,s3)
s1이 작성하는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s1+s2) 별도재무제표 (s1+f.v./cost s2) 없음	s1이 작성하는 재무제표 좌동 없음 재무제표 (s1+지분법 s2)
s2가 작성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	s2가 작성하는 재무제표 좌동
s3가 작성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	s3가 작성하는 재무제표 좌동

<참고> 개별재무제표

- K-IFRS 하에서 개별(individual) 재무제표는 P가 s1, s2, s3의 재무제표를 지칭할 때 사용함. 따라서 P 입장에서 s1의 연결·별도재무제표, s2의 재무제표, s3의 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라 지칭함.
- 우리나라는 연결재무제표와 대칭되는 명칭으로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있어 K-IFRS와 개념상 차이가 큼.

(2)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산정시 합산 대상 (간접보유 범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 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회사가 <u>직접 또는 지배·종속 회사를 통하여</u> 간접으로 피투자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

(3) 중대한 영향력 획득시 투자차액(영업권) 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속기업을 취득할 때 사용한 회계처리 절차의 기본 개념은 관계 기업 투자자산의 취득시 회계처리에도 적용 (문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IFRS 3 : 단계법 - IFRS 3 ED : 일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괄법

(4) 관계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차감시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확한 언급 없음 (문단 11) <p><참고 IAS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회사가 배당금 지급 결의한 시점에 차감 (문단 20)

11 Distributions received from an investee reduce the carrying amount of the investment. ...	
---	--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종속기업 투자에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않으므로 회계처리 간소화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지배기업이 작성할 재무제표의 내용이 달라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P	의무 - 연결F/S (별도F/S 작성 가능)	의무 - 연결F/S 재무제표
s1	의무 - 연결F/S (별도F/S 작성 가능)	의무 - 재무제표 (외감법시행령에 의해 연결F/S 작성의무가 있을 수 있음)
s2, s3	의무 - 재무제표	의무 - 재무제표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초인플레이션 경제국가에 피투자회사(그 국가의 화폐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지고 있는 극히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영향이 없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초인플레이션 경제국가에 피투자회사(그 국가의 화폐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지고 있는 극히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처음 도입되는 개념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예상됨.

4 기타 사항

- 인플레이션율에 관한 정보는 IMF에서 매월 발표하는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에서 얻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초인플레이션 상태(3년 동안의 누적인플레이션율이 100% 이상)에 있다고 분류되는 국가의 예
 - 앙골라,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짐바브웨, 콩고, 수리남, 미얀마, 터키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에 따른 손익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
<p>48 참여자가 조인트벤처에 자산을 출자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인식한다. 조인트벤처가 자산을 보유하고 참여자가 소유에 따르는 중요한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였다면, 참여자는 손익 중 다른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인식한다. 출자나 매각거래가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감소나 자산손상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참여자는 손실을 전액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p> <p>5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대가로 공동지배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하는 거래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문단 48을 적용하는 경우, 참여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참여자의 투자지분에 귀속되는 손익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p> <p>(1) 출자된 비화폐성자산의 소유에 따른 중대한 위험과 효익</p>	<p>29. 참여자가 공동지배대상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한 경우, 이로 부터 발생하는 손익 중 당해 참여자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참여자의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식하지 아니한다. (A9, 10, 11, 20, 21)</p> <p>(가) 출자된 비화폐성자산의 소유에 따른 중대한 위험과 효익이 공동지배대상기업에 이전되지 않은 경우</p> <p>(나)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와 관련된 손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p> <p>(다)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p> <p>A21. 다음은 문단29와 관련하여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비화폐성자산 출자의 대가로 투자주식이 외에 추가적으로 현금 등을 받았는지, 조인트벤처 설립시 차입금이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p>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
<p>이 공동지배기업에 이전되지 않거나</p> <p>(2)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와 관련된 손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거나</p> <p>(3)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거래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p> <p>예외사항 (1), (2) 또는 (3)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문단 6의 사항이 또한 적용되는 경우에는 문단 6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p> <p>6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추가하여 참여자가 화폐성 또는 비화폐성자산을 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적절한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p>	<p>이 비화폐성자산 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또는 손실 중 당해 참여자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비화폐성자산의 출자 시점에 실현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29)</p> <p><사례1> 현물출자 대가로 조인트벤처 주식만을 수령한 경우</p> <p>A사가 장부금액 50억원, 공정가치 100억원의 유형자산을 출자하고 B사가 현금 100억원을 출자하여 조인트벤처 X를 설립하였다. X사에 대한 지분율은 참여자 A사와 B사가 각각 50%로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A사는 현물출자¹⁾의 대가로 X사 주식 100억원만을 수령하였다.</p> <p>(질문) A사가 X사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중 실현된 부분은?</p> <p>(풀이) A사의 현물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중 A사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만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즉, $(100\text{억원}-50\text{억원}) \times 50\% = 25\text{억원}$을 실현이익으로 처리한다.</p> <p>¹⁾ 문단29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실현이익은 “0”이다.</p> <p><사례2> 현물출자 대가로 조인</p>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
	<p>트벤처 주식과 현금을 수령한 경우 - 차입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p> <p>A사가 장부금액 100억원, 공정가치 200억원의 유형자산을 출자하고 B사가 현금 100억원을 출자하여 조인트벤처 X를 설립하였다. X사에 대한 지분율은 참여자 A사와 B사가 각각 50%로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A사는 현물출자²⁾의 대가로 X사 주식 100억원, 현금 100억원을 수령하였다.</p> <p>(질문) A사가 X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중 실현된 부분은?</p> <p>(풀이) A사의 현물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중 A사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만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즉, $(200\text{억원}-100\text{억원}) \times 50\% = 50\text{억원}$을 실현이익으로 처리한다.</p> <p>²⁾ 문단29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실현이익은 “0”이다.</p> <p><사례3> 현물출자 대가로 조인트벤처 주식과 현금을 수령한 경우 - 차입금이 발생한 경우</p> <p>A사가 장부금액 100억원, 공정가치 400억원의 유형자산을 출자하</p>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
	<p>고 B사가 현금 100억원을 출자하여 조인트벤처 X를 설립하였다. 설립과정에서 X사는 출자된 유형자산을 담보로 200억을 차입하였다. X사에 대한 지분율은 참여자 A사와 B사가 각각 50%로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A사는 현물출자³⁾의 대가로 X사 주식 100억원, 현금 300억원을 수령하였다.</p> <p>(질문) A사가 X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중 실현된 부분은?</p> <p>(풀이) A사의 현물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중 A사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만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즉, (400억원-100억원)*50% = 150억원을 실현이익으로 처리한다.</p> <p>³⁾ 문단29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실현이익은 “0”이다.</p>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 문단 29에 의하면, 공동지배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 중 당해 참여자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비화폐성자산의 출자로 인한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
- (2) 결론도출근거에서 관련된 문단 A10에 의하면 참여자가 출자 후에도 이전된 자산에 대하여 계속하여 관리적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그리고 문단 A21에 의하면 비화폐성자산 출자의 대가로 투자주식 외에 추가적으로 현금을 받았는지, 조인

트벤처 설립시 차입금이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 중 당해 참여자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비화폐성자산의 출자 시점에 실현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본문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기준서(안)의 관련 해석서(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에 의하면 공동 지배 기업에 대한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시 투자지분 외에 추가적으로 화폐성자산 또는 다른 비화폐성자산을 받는 경우에, 이러한 자산의 실현은 미래의 현금흐름과는 관계없으므로 획득과정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음.
- (4) 즉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에 의하면 비화폐성자산의 출자로 발생한 처분손익을 공정가액의 비율로 화폐성자산 또는 기타 비화폐성자산을 받은 부분과 투자지분을 받은 부분으로 나누고, 화폐성자산 또는 기타 비화폐성자산을 받은 부분과 관련된 처분손익은 전액 실현된 것으로 보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투자지분을 받은 부분과 관련된 처분손익 중 당해 참여자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실현된 것으로 회계처리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1 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항목(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려면 발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야 함(문단 16)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함(문단 18(1)) 비용으로 분류하는 배당은 포괄손익계산서나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되는 경우)의 손익항목으로 표시(문단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소각의 경우 자본금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주식으로 공시함(해석 32-77) 현행 상법 제451조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자본금으로 보고 있으며, 자본감소의 절차가 아닌 이익으로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액면총액과 자본금의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이 상법상의 해석임

(1) 내용 분석

- (가) 이 기준서에서는 계약의 법적 형식보다는 계약 내용의 실질에 따라 분류
- (나) 상법 제345조에 의하여 발행되는 **상환우선주의 경우**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면, 이 기준서에 따라 **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함**
- (다)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의 배당은 포괄손익계산서나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되는 경우)상 손익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함
- (라) 2004년 중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4-23호 “자본거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자본유지개념에 따른 **상법과의 상충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시**

- 현재 진행중인 상법의 회사편 개정과 관련하여 계약상 의무를 고려하여 상법 제451조를 개정할 것을 건의한 상태임

(2) 기업실무 및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구조조정, 인수합병재원조달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발행된 상환우선주를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함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부채비율의 상승 및 이에 따른 차입약정의 위반가능성
 - 기본자본(Tier 1)의 감소 및 보완자본(Tier 2)의 인정범위 축소에 따라 BIS 비율이 일시 하락하는 등 자기자본비율의 감소가 예상됨

2 풋가능 금융상품(puttable instrument)의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뮤추얼펀드, 단위형 투자신탁 등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풋가능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임(문단 18(2)) • 다만, 재무제표에 '지분보유자 귀속 순자산' 또는 '지분보유자 귀속 순자산 변동액' 등의 용어사용까지 금지하지는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기구의 자본은 원본, 간접투자기구안정조정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 '간접투자기구' 문단 18)

(1) 내용 분석

- (가)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기업은 주권상장기업이나 코스닥상장기업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선박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뮤추얼펀드, 선박펀드, Reits, 수익증권 등은 환매금지투자회사 또는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서 지분보유자가 환매를 요구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 또는 수익자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²³⁾에 따라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상장²⁴⁾하는 것이므로, 풋가능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나) 2008년에 IASB가 발표한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에 관한 개정 IAS 32에 의하면, 특정한 조건²⁵⁾을 충족하는 풋가능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도 이러한 개정을 반영하여 2008년 내에 개정할 계획임

(2)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가) 조합이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인 경우 조합출자금은 일반적으로 풋가능금융상품에 해당하여 조합출자금을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할 것임. 그러나 2008년 IASB가 발표한 개정 IAS 32에 따르면 조합출자금이 특정조건을 충족하면 풋가능의 특성을 갖고 있더라도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조합출자금을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

3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통한 결제가 요구되는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 기업 자신의 주식 등의 수량과 교환되는 대가의 금액이 모두 확정되는 경우에만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 명시적인 관련 규정이 없음

2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5조, 제45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 선박투자회사법 제17조

24) 현재 5개 뮤추얼펀드, 9개 Reits, 30개 선박투자펀드 및 67개 수익증권이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됨

25)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풋가능 금융상품

- ① 청산시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에 대한 권리
- ② 가장 후순위
- ③ 동일한 특성 공유
- ④ 다른 계약상 의무가 없음
- ⑤ 존속기간 중 기대되는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대상 기업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기초함
- ⑥ 발행자는 ⑤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금융상품의 잔여 수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다른 금융상품이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업 자신의 주식 등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금융부채로 분류함	

(1) 내용 분석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 파생상품으로 정의하기 위한 조건 중 결제조건이 금융상품을 기초항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총액결제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 자신의 주식 등을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계약 중에는 총액결제를 통하여 기업 자신의 주식 등의 실물을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경우도 포함됨
- (나) 계약내용과 결제조건에 따라 기업 자신의 주식 등을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계약이더라도 지분상품이 아닌 금융부채로 분류될 수 있음. 이러한 분류 결과의 예는 다음과 같음
- 기초항목인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차액결제되는 매입한 선도 등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며, 지분상품이 될 수 없음
 - 기초항목인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총액결제되는 매입선도, 매도한 풋옵션 등에서 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입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하여야 함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주식매입선도나 주식에 대한 매도풋옵션이 총액기준으로 실물결제되는 경우, 미래에 자기주식 재매입에 필요한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하여야 하므로,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예상됨

4 결제방법이 미래의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는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의 발생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결제방법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현금 등의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금융부채라는 성격이 변동하지 않음(문단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비화폐성 외화부채로 간주 다만, 전환권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화폐성 외화부채로 간주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문단 15가 관련 규정임

(1) 내용 분석

- 이 기준서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기 전의 전환증권은 전환가능성의 정도에 관계없이 외화환산 대상임

(2)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보다 다소 복잡한 회계처리가 요구되므로, 실무적용상 부담이 증가할 것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

5 상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계 표시(문단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보유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적인 관련 규정 없음

(1) 내용 분석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와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도입되어,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일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간주하여 재무상태표에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로 표시함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표시하는 경우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등의 효과는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바젤 II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여야 하는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일부가 상계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가 IAS 33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의 내용이 큰 차이는 없음.

(1) 우선주에 대한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의 처리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기준서(안)에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음 관련문단: 문단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주에 대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상각금액을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할 우선주배당금 항목의 하나로 규정함(문단9)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의미함.(기준 제33조)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부터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함.(기준 제72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의 우선주에 대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IAS 33의 할증배당우선주에 대한 할인발행차금과 개념적으로 다른 것이지만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그 상각액을 우선주배당금으로 본다는 것은 동일한 이론적 근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2) 할증배당우선주의 처리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기준서(안)에서는 할증배당우선주의 당초 할인발행차금이나 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액을 이익잉여금처분하고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문단: 문단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증배당우선주(increasing rate preference shares)에 대한 내용 없음

※ 할증배당우선주는 우선주를 시가보다 할인 발행한 기업에 대한 보상으로 초기에 낮은 배당을 지급하는 우선주 또는 우선주를 시가보다 할증금액으로 매수한 투자자에 대한 보상으로 이후 기간에 시장보다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우선주를 말함. 할증배당우선주의 당초 할인발행차금이나 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하여 이익잉여금에 가감하고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으로 처리함.(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15)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가액을 액면가액과 비교하는 개념이지만 할증배당우선주에 대한 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가액을 공정가치와 비교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둘은 서로 다름.

(3) 현금납입의 경우 유통주식수 기산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문단: 문단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납입의 경우에는 납입기일로 규정(문단15)

※ IAS 33의 '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날'(when cash is receivable)과 우리나라의 '납입기일'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4) 발행조건상 전환간주일이 있는 경우의 유통주식수 기산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기준서(안)에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음 관련문단: 문단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환사채, 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상 전환간주일이 있는 경우의 유통주식수 기산일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함(문단29, B1-B4)

(5) 주권을 상장하고 있지 않은 종속회사 등이 자기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한 경우의 처리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기준서(안)에서는에는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음 관련문단: 문단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권을 상장하고 있지 않은 종속회사 등이 자기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지배회사 등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그 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함(문단31)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일부 국내법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실무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주권을 상장하고 있지 않은 종속회사 등이 자기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지배회사 등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그 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다소의 부담이 될 소지는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1) 연결기준의 중간재무보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14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다면 중간재무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없음

- 중간재무제표를 개별기준으로 작성해온 우리나라 기업에게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재무제표 작성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2) 계절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추가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21 계절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중간보고기간말까지 12개월 기간 및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에 대한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것이 권장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없음

- 계절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작성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3) 최종 중간기간에 대한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26 중간재무보고에서 보고된 추정 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하였지만 최종 중간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재무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정의 내용과 금액 을 해당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 표에 주석으로 공시함	12 중간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 는 기업이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 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함 (가) 당 회계연도 최종 중간기간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및 주당 순이익 등 주요 경영성과 (나) 최종 중간기간에 회계추정의 변 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

- 최종 중간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해서만 공시하면 되므로 당 회계연도 최종 중간기간의 매출
액, 당기순이익 및 주당순이익 등 주요 경영성과도 공시하도록 한 현
재의 기준서 체계보다 재무제표 작성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4)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반영 방법

기업회계기준서(안) 제103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43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전의 전 체 회계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실 무상 어려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일부터 새로 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으로 적용함	23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의 수정금액을 합리적 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함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전의 전체 회계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실무
상 어려울 경우에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일부터 새로운 회
계정책을 전진적으로 그 효과를 반영하므로, 회계정책을 변경한 당해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그 효과를 반영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에 비하여 회계정책을 가능한 이전기간부터 적용하는 효과가 발
생하며, 재무제표 작성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5) 중간재무제표를 최초 작성시 비교표시 재무제표의 작성 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의견서 03-6과 같은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중간재무제표를 최초 작성하는 기업도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비교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재무제표를 최초 작성하는 경우 직전회계연도의 동일기간에 대한 비교표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 중간재무제표를 최초 작성하는 회계연도에도 직전 회계연도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간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작성자의 입장에서 재무제표 작성부담은 증가하게 됨

(6) 중간기간에 대한 법인세비용 산정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기준서 제16호 A42, KQA 04-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예상유효세율(법인세비용/세전이익²⁶⁾) 사용함. 누적중간기간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요구하지 않음.(간편법)(B12²⁷⁾-B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예상평균세율(법인세부담액/과세소득) 사용함. 즉 누적중간기간에 대한 세무조정을 요구함(연간과 동일한 방법)

- 중간기간에 대한 법인세비용 산정시 누적중간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작성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26)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 is the tax expense (income) divided by the accounting profit(IAS 12 par. 86)

27) Interim period income tax expense is accrued using the tax rate that would be applicable to expected total annual earnings, that is, **the estimated average annual effective income tax rate** applied to the pre-tax income of the interim period.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1 자산손상의 지표 제시

(1) 차이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 제시(문단 12) <외부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상 밖의 시장가치하락 (2) 불리한 환경의 변화 (3) 시장이자율 상승 (4) <u>순자산 장부금액보다 시가총액하락</u> <내부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자산의 진부화 (6)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의 변화 (7) 기대를 밑도는 자산의 경제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의 문단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장가치의 현저한 하락 (나) 사용강도나 사용방법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초래된 경우 (다) 법률이나 기업환경의 변화 혹은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해당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라) 해당 유형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현금의 유출이 발생하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

*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5항~제7항;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 5(해), 57(나), 67~73, 74(라)(4), 76;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5(재), 35와 36, 43(나)(4), 44; 인수·합병준칙 9.라)

(가) 현행 기준에서는 자산손상을 여러 기준서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의 문단 35에서 유형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징후를 나열하고 있음

(나) 실무적으로 손상징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손상여부를 검토를 수행하기보다 순실현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하락한 것으로 판단될 때 자산손상여부를 검토하였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특이사항 없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가) 문단 12(4)의 시가총액기준 비교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등으로 순자산 장부금액이 높은 기업의 경우 손상징후를 포착할 가능성이 큼
- (나) 이에 따라 회계처리과정에 비용이 많이 드는 손상검사를 수행해야만 하므로 기업의 과도한 부담 예상

2 손상차손 측정 방법 통일

(1) 차이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하지 않음. 따라서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만큼 손상차손이 인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자산손상차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하고 있음(기준서 제5호 문단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식단계: 장부금액이 '할인되지 않은 미래현금흐름총액'을 초과할 때 인식함 ② 측정단계: 인식단계에서 손상차손이 인식된다면 그 측정금액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함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인식단계와 측정단계가 구분되지 않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손상차손인식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므로 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보다 목적접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가) 여러 가지 기준에 산재되어 있던 규정을 통합하고 일관되게 규정함으로써 기준의 이해가능성과 적용가능성을 높임
- (나) 유형자산의 경우,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짐

3 현금창출단위 개념 도입

(1) 차이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창출단위’ 개념을 적용함(문단 65~108) : 창출하는 현금유입의 대부분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의 현금유입과 독립적으로 구별되는 식별가능한 최소 자산집단 •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먼저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켜 인식하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에 각각 장부금액비례로 배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에서 ‘현금창출단위’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저의하고 중단사업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 별로 할 것을 요구함(문단 19) • 이 때 “현금창출단위”는 개별 자산이 포함된 최소 단위의 자산그룹으로서 다른 자산이나 자산그룹의 현금흐름과 독립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단위를 말한다.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특이사항 없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가) 부문별 보고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현금창출단위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도입초기의 혼란 예상

- (나)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등을 측정하는 데에 대하여 도입초기 기업 가치평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영업권 손상검사의 특례

(1) 차이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함(문단 80~99) •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함 •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함. 손상검사는 회계연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며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함. 다만, 당해 회계연도 중에 일어난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는 당해 회계연도 말 이전에 최초로 손상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회계연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며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함. 서로 다른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중 상이한 시점에서 손상검사를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규정 없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영업권은 더 이상 상각되지 아니하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게 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가) 현금창출단위의 식별과 더불어 현금창출단위에 영업권을 적절히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손상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나) 따라서 일부에서는 손상평가를 포기하고 상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5 주식 공시의 강화

(1) 차이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영업권과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회수가능액의 측정에 사용된 추정치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식공시를 강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업권과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②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의 측정 기준(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③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 사용된 주요 가정에 대한 정보 ④ 주요 가정치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동함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수 있다면 이에 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상차손 및 환입의 내용과 금액을 주식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회수가능액의 측정시 필요한 여러 가지 추정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하여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주석 공시 사항의 확대로 실무 부담 가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1 ‘Probable’에 대한 해석 차이

(1) 차이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23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u>가능성이 높아야</u> 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특정 사건이 <u>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에</u> 자원의 유출 또는 기타 사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현재 의무의 존재 <u>가능성이 높지 아니한</u> 경우에는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한다. 다만, 당해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u>가능성이 아주 낮은</u> 경우에는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16.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u>가능성이 매우 높아야</u> 한다.

(가) 이 기준서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으로 미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probable)”, “높지 않은 (not probable)” 및 “아주 낮은 (remote)” 경우로 구분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유출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을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함

(나) 이 기준서의 인식요건을 확률개념으로 표현하면 발생확률이 50%를 초과할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발생확률이 거의 0에 근접하여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음

며, 발생확률이 50%이하이면서 거의 없는 정도보다 높을 때는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함

- (다) 한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는 이 기준서에 따라 50%의 발생확률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은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부채의 과소계상 및 이익조정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정이 과도하게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하여 미국 재무회계기준과 같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대략 80%)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함 [문단 A13 참조]

- (라) ‘Probable’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른 효과는 아래와 같음

	0%		50%		80%	100%
발생가능성						
현행	미인식	우발부채 공시				충당부채 인식
제1037호	미인식	우발부채 공시		충당부채 인식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으로 미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80% 이상)’에서 ‘높은(50% 초과)’으로 수정됨에 따라 부채금액 증가 및 부채비율 상승이 예상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Probable’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인한 기업실무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충당부채 후속측정시 적용 할인율

(1) 차이요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보고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재무보고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고 규정[문단 59]하고 있을 뿐, <u>후속 측정시 적용할 할인율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당부채는 대차대조표일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대차대조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조정하며, 이 경우 당해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u>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한다고 규정함</u> [문단 40]

(가) 이 기준서는 최초 인식 후 재무보고일마다 당해 일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충당부채의 잔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문단 59]함과 동시에 할인율 변동효과를 주식공시 항목으로 규정[문단 84(5)]하고 있음. 이는 현행 할인율을 적용한 충당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나) 반면, 현행 기준서 제17호에서 당초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공개초안 ED에서부터 도입된 내용으로서 명시적 이유로는 매기 할인율을 평가(실질적으로는 매기 공정가치 평가)해야 하는 등에 대한 실무부담을 줄이고자 함. 이와 더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금융부채를 포함하여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부채항목이 없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매기말 현재 할인율로 재측정(충당부채의 공정가치 측정)하게 됨에 따라 부채금액 및 손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매기말 현재 할인율로 재측정(충당부채의 공정가치 측정)하게 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거액의 장기 복구충당부채 등을 관리하는 기업실무의 측정상 번거로움이 증가할 수 있음

3 기타 차이

(1)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의 정의가 제시됨 [문단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정의 없음

(2) 적용범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상품(보증 포함)은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함 [문단 2] • 해당 예시 없음 • 구조조정이 중단사업의 용어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추가적인 공시사항이 요구될 수 있음을 명시함 [문단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규정 없음 •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거래나 사건의 예를 제시함 [문단 4] • 해당 규정 없음

(3) 공시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대한 주석공시를 요구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 (나)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 <p>[문단 24]</p>

1 일반 내용

(1) 국제회계기준 제38호(IAS 38)의 개요

- (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는 국제회계기준서 제38호 무형자산(IAS 38 Intangible Assets)를 기초로 제정된 것임.
- (나) IASB는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에 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AS 38 Intangible Assets를 2004년에 개정하였음. 사업결합에 관한 프로젝트는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의 개정,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과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후속 회계처리에 대한 정립이 주요 목적임. 왜냐하면 사업결합에 관한 기준서에서 영업권은 더 이상 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라 자산손상평가 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을 명확히 식별하지 않을 경우 상각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이 영업권에 포함되어 상각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IASB는 기존의 IAS 38을 전면수정 하지 않고 상기사안에 대한 주요 변경만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을 하기로 하였음.
- (다) 2004년에 개정한 IAS 38의 주요 개정 내용은 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 내용연수와 상각, 개별 취득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기준의 적용,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의 회계처리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임.

2 기준서의 적용범위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2 이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제외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75. 무형자산은 사업상 비슷한 성격과 효용을 가진 종류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다만, 재무제표 이용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p>(1)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무형자산</p> <p>(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 정의된 금융상품</p> <p>(3) 탐사와 평가 관련 자산의 인식과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 탐사와 평가' 참조)</p> <p>(4) 광물, 원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 자원의 개발과 추출에 대한 지출</p> <p>3 다른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유형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 예는 다음과 같다.</p> <p>(1)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참조)</p> <p>(2) 이연법인세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참조)</p> <p>(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리스</p> <p>(4) 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p> <p>(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의된 금융상품. 일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p>	<p>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의 종류는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종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p> <p>(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포함)</p> <p>(나)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p> <p>(다) 저작권</p> <p>(타) 컴퓨터소프트웨어</p> <p>(마) 개발비(제조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p> <p>(바) 임차권리금</p> <p>(사) <u>광업권</u>, 어업권 등</p>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p>계기업 투자'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서 다룬다.</p> <p>(6)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참조)</p> <p>(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제공자의 계약상 권리에서 발생하는 이연취득원가와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이연취득원가에 대한 특정 공시사항을 제시하고 있지만, 무형자산에 대한 공시사항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기준서의 공시사항은 그러한 무형자산에 적용한다.</p> <p>(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비유동 무형자산</p>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는 적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며 불분명하였음. 그 이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제정당시에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제정이 미비하여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임.

(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추출산업의 비중이 낮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는 광업권을 무형자산에 포함시키고 있었음.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서는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 체계를 가지게 되므로 IAS 38과 동일한 적용범위를 가지게 됨. 따라서 기

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는 광업권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광업권을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는 그 활동이 전문화되어 추출산업의 탐사·개발 등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라)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기 전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광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적용범위 변경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무제표에의 영향은 없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적용범위 변경으로 인한 기업실무에의 영향은 없음.

3 무형자산의 정의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	•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가) 무형자산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무형자산은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리라고 기대되는 자산이다
-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다.
-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하다.

- (나) 기업이 이러한 특성을 지닌 항목을 보유하려는 목적(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등)이 그러한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무형자산이 개념적으로 정의됨으로써 과거에는 다른 자산으로 분류되었던 항목들이 무형자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함. 따라서 대차대조표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항목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항목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각 무형자산 항목에 대하여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 등에 대한 추정이 증가하게 될 것임.

4 '식별가능성' 개념의 명확화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11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하다는 것을 요구한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않고 분리하여 인식될 수 없는 자산에서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하여 취득자가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그 미래경제적효익은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 사이의 시너지효과에서 발생하거나 개별적으로 인	9. 식별가능성은 대체로 자산의 분리가능성 여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면 그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하다. 자산이 분리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과 함께 동일한 수익창출활동에 사용되는 다른 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희생하지 않고 그 자산을 임대, 매각, 교환 또는 분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지 않더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p>식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취득자가 사업결합에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p> <p>12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형자산 정의의 식별가능성 조건을 충족한다.</p> <p>(1)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p> <p>(2)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p>	<p>도 다른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조설비를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분리가능하지는 않지만 식별가능하다. 또한, 어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은 식별가능한 것이다.</p>

- 기존의 사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인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요구사항과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사업결합에서 취득하는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 자주 영업권에 포함되었음. 영업권은 더 이상 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라 자산손상평가 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을 명확히 식별하지 않을 경우 상각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이 영업권에 포함되어 상각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식별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영업권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대차대조표에서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의 종류가 증가할 것임.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가)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거래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들의 거래조건으로 그 자산에 대하여 지급하였을 금액을 추정하여야 하는데, 실무상으로 이러한 공정가치의 추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항목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각 무형자산 항목에 대하여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 등에 대한 추정이 증가하게 될 것임.

5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과의 관계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16 기업은 고객구성이나 시장점유율에 근거하여 고객과의 관계와 고객의 충성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객이 계속하여 거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객과의 관계나 고객의 충성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 방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나 고객의 충성도에서 창출될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해서는 그러한 항목(고객구성, 시장점유율, 고객과의 관계와 고객의 충성도)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 기업이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	14.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정고객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객과의 관계나 고객의 충성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로부터 창출될 미래경제적 효익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고객, 시장점유율, 고객과의 관계, 고객의 충성도 등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p>지 않다. 그러나 고객과의 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과의 관계를 교환하는 거래(사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는 고객과의 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한 교환거래는 고객과의 관계가 분리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므로 그러한 고객과의 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p>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는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가 식별가능한지 즉, 분리가능한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음. 즉,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에 대한 식별가능성과 통제와의 관계가 불분명하였음.
-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16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에 대한 교환취득거래는 그러한 항목이 분리가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그러한 고객관계로부터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보았음.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기업이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를 개별 취득한다면,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에 대한 교환취득거래는 그러한 항목이 분리가능하고, 그러한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로부터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보았음. 그러므로 그러한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관계’는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하므로 고객 관련 무형자산(customer-related intangible assets)으로 인식될 것임.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과거에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았던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과의 관계도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보고하는 무형자산의 수가 증가하게 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항목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각 무형자산 항목에 대하여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 등에 대한 추정이 증가하게 될 것임.

6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p>2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p> <p>(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p> <p>(2)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p> <p>25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그 자산에 내재된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즉, 확률의 효과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된다. 따라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1)의 인식조건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p> <p>3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p>	<p>16.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문단5 (가)의 정의와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p>(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p> <p>(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p>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p>합'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 즉, 확률의 효과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한다. 따라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1)의 인식조건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p>	

(가) 사업결합에 의하여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은 무형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매수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고 봄. 즉,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공정가액 측정에 반영된다는 것임. 그러므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봄.

(나) 사업결합에 의하여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과 일관성이 있게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도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인식기준은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봄.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과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만 있다면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무형자산의 수가 증가하게 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항목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각 무형자산

항목에 대하여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 등에 대한 추정이 증가하게 될 것임.

7 내용연수가 비한정(indefinite)인 무형자산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88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만약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이나 내용연수를 구성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평가한다.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	54.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가) 현행기준서 문단 54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음. 이러한 입장은 모든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유한(finite)한 것으로 보는 것임.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서는 표현의 충실성을 위하여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와 더 나아가 당해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봄. 따라서 모든 관련 요소(예를 들어, 법적, 규정적, 계약적, 경쟁적, 경제적 또는 기타 요소)를 분석한 결과, 특정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순현금유입을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한 제한(foreseeable limit)’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음. 이러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indefinite)이라고 봄.

(다)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리라고 기대되는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다면 임의적으로 결정된 최대기간 동안의 자산의 상각은 표현의 충실성을 훼손할 것임. 따라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정기적인 손상평가(impairment test)를 하여야 함.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상각하는 대신에 매년 또는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평가(impairment test)를 하여야 함. 이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회수가능액(recoverable amount)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최소한 매년 계산할 필요가 있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회수가능금액(recoverable amount)의 계산이 최소한 매년 요구되는데, 손상차손의 인식절차가 무형자산의 상각보다는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상 부담이 될 것임.

8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손상평가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111 무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는 자산의 장부금액의 검토시기와 방법, 자산의 회수가능액의 결정방법과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시기를 설명하고 있다.	69.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은 최소한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가액을 반드시 추정하여야 한다. (가)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 (나) 추정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

(가) 장기 기간동안 상각되는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유사한 기간동안 상각되는 다른 자산보다 더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개념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나) 그러므로 20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상각되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음. 결과적으로, 추정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최소한 매 회계연도 말에 추정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69(가)의 요구사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음.

(다) 무형자산의 자산손상과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이 기준서보다 자산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매 회계연도 말에,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69(나)의 요구사항을 자산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재배치하였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실질상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에만 손상평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실무상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임.

9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취득 후의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p>43 문단 54~6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개별 취득하거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p> <p>(1) 연구 관련 지출인 경우에는 발생한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p> <p>(2) 문단 57에서 제시된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개발 관련 지출인 경우에는 발생한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p> <p>(3) 문단 57에서 제시된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 관련 지출인 경우에는 취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p>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에 대한 요구사항이 불분명하였음. 즉,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주장이 있었음.

- 연구, 개발 또는 내부적인 프로젝트 단계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 일반적인 무형자산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즉,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자산화 하여야 한다는 주장)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서는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취득 후의 지출에 대하여 연구, 개발 또는 내부적인 프로젝트 단계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이것은 프로젝트를 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시작하였는지에 따라 연구개발 지출이 다르게 회계처리 되는 것을 막고, 모든 연구개발 지출이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는 것임.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간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게 될 것임.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간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게 될 것임.

10 무형자산의 교환거래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p>45. 하나 이상의 무형자산을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논의는 하나의 비화폐성자산과 기타 비화폐성자산의 교환에 대하여 언급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모든 교환에도 적용한다. 그러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p> <p>(1)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p> <p>(2)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p>	<p>32.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p> <p>33.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액이 비슷한 동종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동종 자산에 대한 지분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p>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p>교환거래에서 제공한 자산을 즉시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없더라도 취득한 자산은 위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p> <p>46 교환거래의 결과 미래 현금흐름이 얼마나 변동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해당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p> <p>(1)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p> <p>(2)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로 인하여 변동한다.</p> <p>(3) (1)이나 (2)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중요하다.</p> <p>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부분의 기업특유가치는 세후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상세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p>	<p>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창출과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하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에 비추어 볼 때 제공한 자산에 감액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먼저 인식하고 감액손실 차감 후의 장부가액을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p>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는 교환거래로 취득한 자산이 제공한 자산과 성격과 가치가 다른 경우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교환거래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였음.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서는 교환거래의 결과로 취득한 무형

자산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인지 여부, 즉 교환거래의 손익을 인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환되는 자산의 성격과 가치의 이질성이 아니라 교환거래로 인하여 기업에 유입될 미래 현금 흐름의 구성이 변동하는 정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교환거래의 경제적 결과를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교환거래의 손익 인식 여부를 상업적 실질 유무에 따라 결정하게 함으로써, 종전보다는 개념적으로 향상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임.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교환거래의 손익 인식 여부를 상업적 실질 유무에 따라 결정하게 함으로써, 종전보다는 개념적으로 향상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임.

11 상각방법의 변경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10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변경한다.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	65.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함.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무형자산 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소급 적용하지 않고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해야 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기업이 자의적으로 무형자산 상각방법을 변경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가 있으나, 무형자산 상각방법의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소비형태의 변동을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실제 기업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A. 비파생상품

1 적용범위

(1) 적용범위 제외항목에 적용할 기업회계기준 비교

(가) 내용 분석

적용범위 제외항목(*)	적용할 기업회계기준		비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1)관계기업 및 조인 트벤처 투자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기업 투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25호(IAS 27과 28에 기초함)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IAS 31에 기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중 ①관련 기준에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한 경우와 ②당해 지분에 대한 파생상품 중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파생상품은 이 기준서를 적용함
(2)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IAS 17에 기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중 다음 항목은 이 기준서를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리스채권의 제거 및 손상 -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부채의 제거 - 리스에 내재된 파생상품
(3)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호 ‘종업원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기업회계기준서는 없으며,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문단 적용함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가 있음 	N/A

적용범위 제외항목(*)	적용할 기업회계기준		비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4) 옵션과 주식매입권을 포함한 지분상품 발행자의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기업회계기준서는 없으며,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문단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지분상품의 보유자는 (1)의 적용에 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기준서를 적용함
(5) 보험계약 또는 임의 배당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기업회계기준서 없음 다만, 관련 규정으로 보험회계처리준칙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 발행자의 권리와 의무, ②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서를 적용함
(6) 사업결합에서의 우발대가에 대한 계약 (취득자에게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12 	N/A
(7) 미래에 피취득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각자 사이의 사업결합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생상품에 해당하지만 파생상품회계처리를 하지 않도록 함. 즉, 미이행 확정계약으로서 회계처리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이행 확정계약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IASB에서는 이 문단의 적용범위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는 개정을 연차개선의 하나로 포함하여 공개초안을 발표한 상태임
(8) 대출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기업회계기준서는 없으며, 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IAS 37에 기초함)이나 감독규정에 따라 부채를 인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대출약정의 제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 대출약정 중 다음 항목은 이 기준서를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대출약정 - 현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다른 금융상품을 인도하거나 발행하여 차액결제할 수 있는 대출약정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9)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및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 (IFRS 2에 기초함) 	N/A
(10) 충당부채의 결제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기준서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기준서 제 	N/A

적용범위 제외항목(*)	적용할 기업회계기준		비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필요한 지출과 관련 하여 제3자로부터 보상받을 권리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 산'	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IAS 37에 기초함)	
(11)비금융항목을 매입 하거나 매도하는 계 약	• 미이행 확정계약으 로서 회계처리 없 음	• 해석53-70: 파생 상품등의 회계처 리	• 해석53-70은 이 기 준서에 의해 대체됨 • 차액결제될 수 있는 계 약은 이 기준서를 적용 함

* 적용범위 제외항목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 문단에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열거하고 있는 항목임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이 기준서 하에서 적용범위 제외항목에 적용할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검토한 결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종업원급여 및 보험계약(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계약 포함)과 관련된 기준서가 없는 상태이나,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일부로서 제정되는 것이므로, 적용범위 제외에 따른 실무적용상의 문제는 없음.

2 용어의 정의

(1) 금융자산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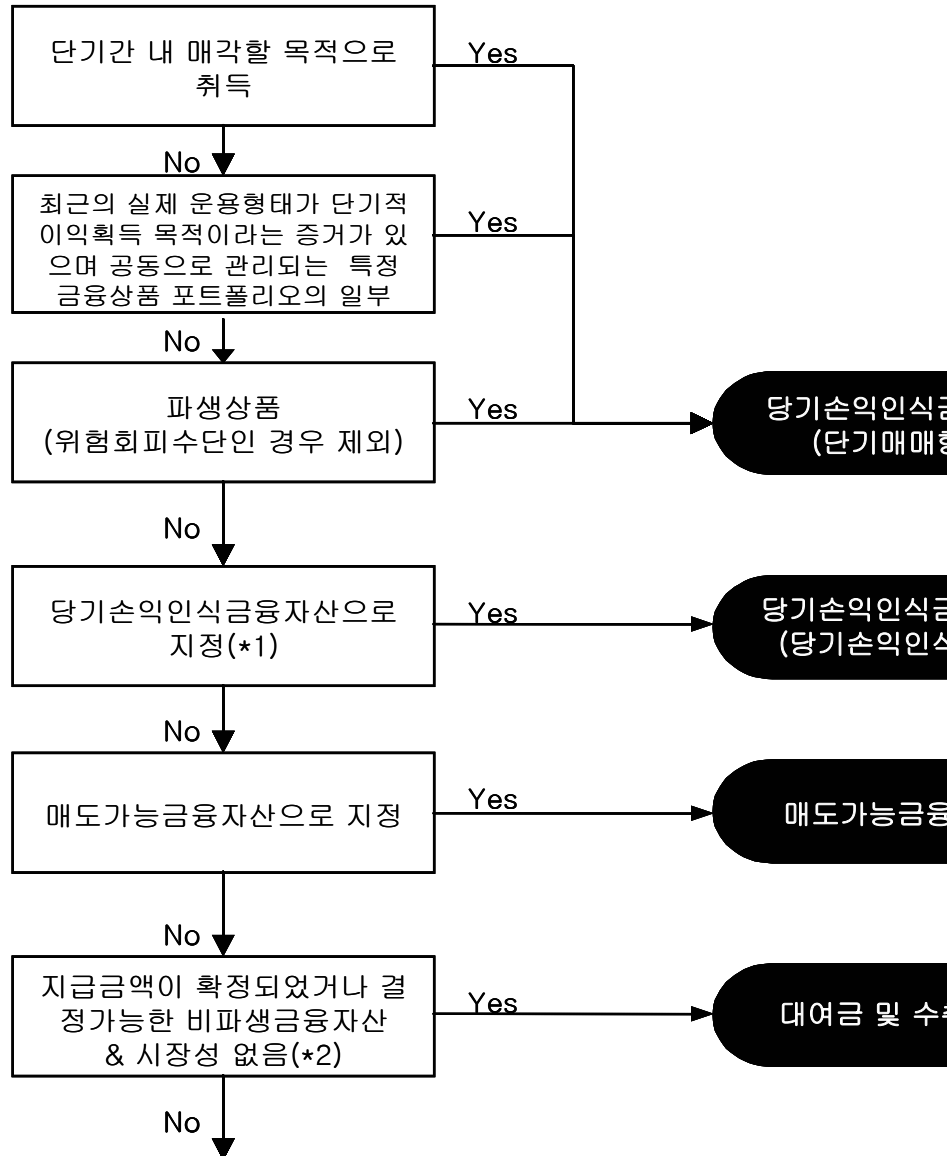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FVTPL)(*)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2 - 단기매매금융자산(HFT)(*)3 • 매도가능금융자산(AFS) • 대여금 및 수취채권(loans and receivables)(*)4 • 만기보유금융자산(HTM) <p>(*)1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변동분을</p>	<p><기준서 제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매매증권(HFT) • 매도가능증권(AFS) • 만기보유증권(HTM) <p><기업회계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채권, 대여금 등(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p>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금융자산</p> <p>(*2) 공정가치선택권(Fair Value Option) : 아래 (2)에서 설명</p> <p>(*3) 파생상품(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을 포함함</p> <p>(*4)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음</p>	
문단 9	기준서 제8호 문단 7, 8, 9 등 / 기업회계기준 제13조, 제14조 등

- 기준서 제8호와 이 기준서에서는 공통적으로 후속측정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준서는 그 금융자산의 범주를 용어의 정의에 포함하고, **‘대여금 및 수취채권 (loan and receivable)’**을 별도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으며, **공정가치선택권(Fair Value Option)** 규정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포함하고 있음.

- 이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분류에 관한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1)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없음. 따라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함

(*2) 채무자의 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함(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의 지정은 별개의 문제)

(2) 공정가치선택권(Fair Value Option) 등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으로 지정됨 지정하는 것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가 제거되거나 상당히 감소됨 (나)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 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요경영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정의 참조)에게 공정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함 다만, 보유한 지분상품이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음. 따라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원가로 측정함 지정은 개별 금융자산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지며(회계정책으로 볼 수 없음), 사후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함 최초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함. 기업의 	<p>신설</p>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재량에 의해 지정할 수 있으나 그 지정기준을 주식으로 공시해야 함	
문단 9, 46 및 AG4C	N/A

-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선택권 등(당기손익인식항목지정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지정)을 신설하였음. 이 기준서의 공정가치선택권에 의하면, 2 가지 조건 즉, ①지정을 통하여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가 제거되거나 상당히 감소되는 경우²⁸⁾, ②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공정가치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²⁹⁾ 중 하나를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보유한)지분상품은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음. 한편, 매도가능금융자산 지정은 특별한 조건 없이 가능함.
- 이 기준서의 공정가치선택권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각각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회계정책의 선택은 아니며,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하며 그 이후에 분류변경은 불가능함.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공정가치선택권 적용에 따라**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회계처리 불일치를 해소**하거나 엄격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위험회피회계 적용효과를 얻을 수 있음**.

28) 예를 들어, 당기손익인식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이 결정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문단 AG4E)

29) 예를 들어, 이자나 배당 및 공정가치 변동 등의 형태로 총수익을 얻기 위하여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캐피털, 뮤추얼펀드, 단위형 펀드 또는 이와 유사한 실체인 경우(문단 AG4I)

- 그러나 공정가치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선택에 따라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는다면, 기업내 비교가능성이나 기업간 비교가능성 훼손문제가 존재함. 또한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가치평가 시스템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3)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의 분류제한(Tainting Rule)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당 회계연도 또는 직전 2개 회계연도에,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중요하지 않은 금액 이상(만기보유금융자산 총액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분류변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음	당 회계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에,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발행자에게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만기보유증권의 분류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보유 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음
문단 9	기준서 제8호 문단 13

-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이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의 분류제한내용은 대체로 동일하지만 이 기준서에서 '중요하지 않은 금액 이상 기준'과 '그 기준은 만기보유금융자산 총액과 관련하여 적용'함을 명백히 한 점은 차이가 있음.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더라도 실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의 분류제한에 관한 규정은 중요성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적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기준서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백히 규정(특히, 중요성 여부 판단시 만기보유금융자산 총액과 비교함)함으로써 실무적용상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4) 금융부채의 분류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FVTP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단기매매금융부채(HFT) 기타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명시적 규정 없음) 파생상품부채를 제외하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금융부채는 없음
문단 9	N/A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금융부채의 분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파생상품부채를 제외한 모든 금융부채는 취득 원가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도록 함. 반면에, 이 기준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용어의 정의에 포함하고, 공정가치선택권 규정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및 후속측정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규정함.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에서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함으로써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명확해짐. 또한 이 기준서에 의하면,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므로 그러한 금융부채는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하게 됨.
- 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선택권의 적용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금융부채의 경우에도 동일함(“(2) 공정가치선택권(Fair value option)”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참조).

3 최초인식과 측정

(1)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 -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vs.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매일 회계처리방법과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매일 인식방법만을 규정함
문단 9, 38, 및 AG53~AG56	기준서 제8호 문단 6

-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말함.
-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함.
 - 매매일**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함.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은 (가)매매일에 수취할 자산과 그 자산에 대하여 지급할 부채를 인식하는 것과 (나)매매일에 매도한 자산을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며 매입자가 지급할 금액에 대한 채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 결제일**은 자산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날을 말함.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은 (가)자산을 인수하는 날에 자산을 인식하는 것과 (나)자산을 인도하는 날에 자산을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 후속적으로 원가나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자산에 대하여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매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함.
-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 금융자산을 회계처리한다면

(문단38, AG53 및 AG56 참조),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의 당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 원가나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지 아니함. 다만, 발생한 손상차손은 인식함.
-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문단55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함.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매입자의 입장)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의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이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의 최초 인식시 회계처리규정 간에는 차이가 없음.

(다)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매도자의 입장)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의 경우 금융자산의 제거와 관련된 손익의 인식시점이 상이하므로, 기간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최초 측정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함 •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해 금융부채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측정 •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유가증권 취득시점의 유가증권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의 합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유가증권 발행자는 발행가액(거래원가 차감)을 부채로 인식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문단 43	기준서 제8호 문단17 / 기준서 제9호 / 기업회계기준 제64조, 제65조

(가) 내용 분석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최초 인식시, 유가증권 취득자는 취득원가 즉,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자산으로 인식하며, 유가증권 발행자는 발행가액(거래원가 차감)을 부채로 인식함. 반면에, 이 기준서에 의하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모두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규정함.
- 기준서 제8호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원칙(principle)이 없음. 다시 말해,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만 확인할 수 있다면 최초 인식자산의 장부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간주함.
- 물론, 기준서 제8호에서는 공정가치와 취득부대비용의 합계를 취득원가의 한도를 규정하여 당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취득원가가 될 수 없도록 함. 그러나 시장성 없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장가격(공정가치)의 측정이 어려움을 이유로 취득대가(예: 현금)를 그대로 취득원가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

(나)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에 의하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시점에 이익과 손실을 모두 인식할 수 있음. 반면에, 기준서 제8호에 의하면, 취득원가의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시점에 손실은 인식할 수 있지만 이익을 인식할 수는 없음.
- 그러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를 가정한다면, 최초 측정에 관한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이 기준서의 규정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이 기준서에서도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수수된 대가로 보고 있으므로,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 차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임.

(3) 거래원가 회계처리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원가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 발행 또는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를 말하며, 대리인(판매대리인 역할을 하는 종업원을 포함), 고문, 중개인 및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의 부과금 및 양도세 등이 포함되고 채무할증액이나 채무할인액, 금융원가나 내부 관리·보유원가는 포함되지 아니함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여 측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부대비용은 유가증권의 대가 이외에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증권거래소의 거래수수료 및 세금을 포함하고 금융비용과 보유에 따른 비용은 제외함 • 취득원가(또는 발행가액)에 포함함
문단 9, 43, AG13	기준서 제8호 문단 4, 17/ 기준서 제9호 / 기업회계기준 제64조, 제65조

-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이 기준서의 거래원가의 정의 및 거래원가(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는 항목의 유형은 유사함.
- 기준서 제8호에 의하면, 거래원가는 항상 취득원가에 포함함. 반면에, 이 기준서에 의하면,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취득시 거래원가는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함. 그 이유는 공정가치로 평가시 그 변동분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므로 거래

원가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더라도 보고기간말에 비용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취득원가 측정시 이와 관련된 거래원가가 존재하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그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포함한 반면에 이 기준서에서는 그 거래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함. 그 이유는 이 기준서에서는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원가가 존재하는 경우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동일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취득원가가 종전과 달라짐.
- 그러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도 금융자산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 경우 그 취득원가에 포함된 거래원가가 보고기간말에 당기비용으로 인식될 것임으로 비용인식시기 및 손익계정 분류의 문제일 뿐 실질적으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1) 제거의 고려대상 - 일부인 경우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가 제거대상임 (가) 제거대상이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으로만 구성(예: 채무상품의 이자나 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 중인 유가증권과 관련된 권리의 일부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잔여 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예: 사채의 원금과 이자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 에는, 그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양도부분과 계속보유부분에 대한 분할 양도일 현재의 상대적인 공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나) 제거대상이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으로만 구성(예: 채무상품의 현금흐름의 90%) (다) 제거대상이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으로만 구성(예: 채무상품의 현금흐름 중 이자의 90%)	가치에 비례하여 나눔 • 금융자산의 양도여부(자산의 일부 양도 포함)는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통제권을 이전하는지에 따라 판단함
문단 16	기준서 제8호 문단 55 / 해석52-14 2.

- 금융자산을 양도하면, 그 양도에 적용할 제거조건이 무엇이나에 관계없이, 그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제거조건 충족여부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거대상」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제거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금융자산 제거에 관한 회계처리의 출발점임. 그 이유는 제거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 제거조건 적용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금융자산의 제거에 관한 회계처리의 적용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① 금융자산 중 제거대상의 결정 - 전체 vs. 일부
 - ② 제거대상의 양도여부 결정
 - ③ 제거대상 중 양도된 것에 제거조건 적용
 - ④ 제거조건 적용결과(충족여부)에 따라 적절한 회계처리
- 일반적으로 제거대상은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 전체이지만 금융자산의 일부인 경우도 있음. 기준서 제8호 및 해석52-14에 의하면, 제거대상이 금융자산의 일부인 경우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 없이 금융자산의 일부 양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음. 이 기준서에 의하면, 제거대상이 금융자산의 일부인 경우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제거대상이 금융자산 전체나 일부냐에 따라 제거조건 적용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에서 양도자가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선순위채권 발행부분은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후순위채권 부분은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 이 예에서 이 기준서의 제거대상 규정과 제거조건 적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제거대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자산의 양도를 적절하게 회계처리할 수 있을 것임. 이 결과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도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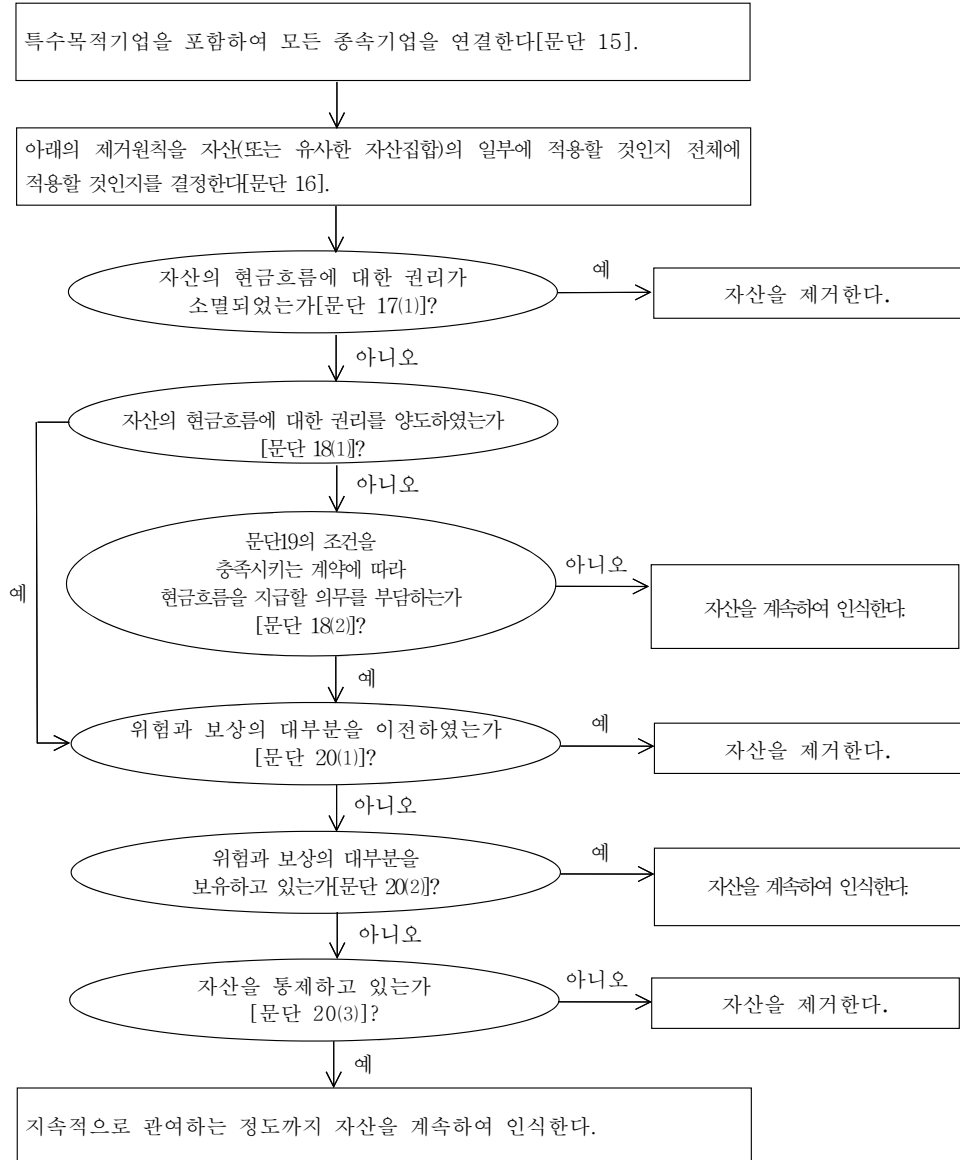
(2) 제거시점 또는 제거조건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2)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당해 양도가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위의 (2)에서 제거조건은 위험과보상접근법, 통제접근법, 지속적관여접근법의 구분 및 이러한 접근법의 순차적 적용을 말함 • 금융자산 양도에 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의 통제를 상실한 때 • 통제를 상실하지 않은 금융자산의 양도는 담보부차입거래로 처리함 • 양도자산에 대한 담보책임은 양도의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유동화는 일반적으로 매각거래에 해당할 것 • 문리적으로는 통제접근법만을 규정할 뿐 위험과보상접근법이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문단 17, AG51	기준서 제8호 문단 48, 49 / 해석52-14 2.

- 기준서 제8호와 해석52-14에 의하면,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통제를 상실한 때 제거되며, 통제를 상실한 경우의 조건과 예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통제 상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험과 보상 개념을 사용하는 등 '통제'와 '위험과 보상'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당해 제거조건 등을 적용하여 금융자산의 제거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
- 한편, 통제를 상실하지 않으면 제거대상(금융자산 전체 또는 일부)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고, 수취한 금액은 담보부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양도자산에 대한 담보책임은 양도의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유동화는 일반적으로 매각거래에 해당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결국, 기준서 제8호와 해석52-14에 의하면, '통제'와 '위험과 보상'의 개념을 혼용하고 적용상 우선순위가 없으며, 제거대상이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서의 지속적관여와 같은 개념이 없으므로 금융자산의 일부 제거의 여지가 없음. 또한 일부 금융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매각거래 간주 규정(예: 받을어음 할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을 두고 있음.
- 반면에, 이 기준서에 의하면, 금융자산의 제거시점, 제거조건 및 그 적용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즉, 위험과보상접근법, 통제접근법 및 지속적관여접근법의 개념을 구분하고, 그 적용순서와 회계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제거조건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매각거래 간주규정을 삭제하였음.

- 이 기준서의 제거조건 적용에 관한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개념적으로는 기준서 제8호나 해석52-14의 제거조건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서의 제거시점 및 제거조건에 관한 규정은 실무적용측면에서는 그 이해가능성 및 적용가능성을 크게 개선하고, 그에 따른 제거여부 판단은 거래의 실질을 더 잘 반영할 것으로 사료됨.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조건없이 연결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준서에 의하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제거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정착하는 상황에서는 유동화의 실무적 유인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제거되었을 양도거래가 이 기준서에 의해 제거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임. 이때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므로 기업의 부채비율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임.

(3) 금융부채의 계약조건변경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함.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차이가 10% 이상 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채권·채무조정에서 발생한 계약조건변경의 회계처리를 기준서 제13호에서 별도로 규정함 • 조건변경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미래현금흐름을 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함
문단 40, AG62	기준서 제13호 문단 19, 20

- 기준서 제13호에 의하면,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채권·채무조정에서 발생한 계약조건변경의 경우 역사적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변경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도록 규정함.

- 이 기준서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구분 없이 역사적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변경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계약조건의 실질적 변경여부를 판단하고,
 - ①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 기존 부채를 제거하여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새로운 부채를 조건변경시점의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
 - ② 실질적 변경이 없는 경우 : 기존 부채를 제거하지 아니하며, 관련 손익의 인식없이 잔존기간에 유효이자율에 따라 상각·환입

(나) 채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발생한 계약조건변경이 실질적 변경인지의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와 관련 손익의 방향이 다름.
 - ①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역사적 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이 기준서는 조건변경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함. 현행 유효이자율이 역사적 유효이자율보다 더 크다면,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과 채권자의 대손충당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② **실질적 변경이 없는 경우** :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역사적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지만, 이 기준서는 기존 채무의 연장으로 보고 잔존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로 상각·환입하기 때문에 계약조건변경시점의 관련 이익과 잔존기간의 이자비용을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더 크게 인식하는 결과가 예상됨.

(4) 금융부채의 일부 재매입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부채의 일부를 재매입하는 경우,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재매입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명시적인 규정 없음)
문단42	N/A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부채의 일부 재매입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음. 반면에, 이 기준서에 의하면, 금융부채의 일부 재매입에 관한 회계처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일부 재매입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재매입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배분하도록 규정함.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금융부채의 일부 재매입에 관한 회계처리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금융부채 일부 재매입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명확해짐

5 후속측정

(1)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구분	후속측정	공정가치변동의 반영	구분	후속측정	공정가치변동의 반영
FVTPL	공정가치(**)	당기손익	단기매매	공정가치	당기손익
AFS	공정가치(**)	OCI(***)	AFS	공정가치(*)	OCI(**)
L&R	상각후원가	-	L&R	상각후원가	-
HTM	상각후원가	-	HTM	상각후원가	-
<p>** 예외: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함. 그러나 분류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후술하는 6. 분류변경 참조)</p> <p>*** 예외: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손상차손 및 화폐성외화금융자산의 외환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p>			<p>* 예외: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p> <p>** 예외 :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석53-70(10-3): 채무증권의 외화환산손익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함 •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30: 모든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문단 45, 46, 55, 56, 57			기준서 제8호 문단 18, 19, 20 / 해석 53-70(10-3) /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 30		

-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관한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이 기준서 규정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 다만,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외)과는 달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화폐성외화금융자산의 외환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석53-70(10-3)에 의하면, 채무증권의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여야 함. 반면에,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30에 의하면, 모든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2) 금융부채의 후속측정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함 • 예외: 괄호안의 참조는 측정규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공정가치 측정) -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또는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될 때 발생하는 금융부채(문단29와 31 참조) - 금융보증계약(문단47(3) 참조)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문단47(4)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평가함
문단 47	기업회계기준 64-66조

-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에 관한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이 기준서 규정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 다만,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신설된 규정에 따라 후속적 측정에 관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에 의하면, 금융부채 중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문단에 따라 상각후원가가 아닌 다른 평가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함.
- 이 기준서에 의하면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함에 있어서 당해 부채의 시장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발행자의 신용변동으로 인한 그러한 부채의 공정가치 증가나 감소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6 분류변경

(1) 금융자산의 분류변경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구분		변경후				구분		변경후			
		FVTP L	HT M	L&R	AFS			HFT	HTM	L&R	AFS
변경전	FVTP L	—	X	X	X	변경전	HFT	-	X	X	O(*)
	HTM	X	—	X	O(*)		HTM	X	-	X	O
	L&R	X	X	—	X		L&R	X	X	-	X
	AFS	X	O(**)	X	—		AFS	X	O	X	-
						*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함 • 대여금 및 수취채권(Loan and Receivable)은 기준서 제8호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음					
* 보유 의도나 능력의 변경 및 tainting rule 위반 → 분류변경은 회계변경 아님, 전기분 제작성 불필요 ** tainting period 경과하고 분류조건 충족한 경우 (참고: 최초 인식 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은 분류변경 할 수 없음) •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은 원가로 측정함 → 분류(매도가능금융자산)는 변경하지 않음						기준서 제8호 문단 45~47 / 기업회계 기준 제13조, 제14조 등					
문단 50~54											

- 금융자산의 분류(자체)에 관한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이 기준서의 차이는 위의 2. (1)을 참조함. 금융자산의 분류변경과 관련하여, 기준서 제8호에서는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하는 것을 인정하는 반면에 이 기준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분류변경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서 다른 분류로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 즉, 이 기준서에 의하면, 종전 기

업회계기준의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지 않음. 당해 자산이 시장성 상실로 인해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그 시점의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 장부금액을 그 자산의 새로운 원가로 함. 이 이외에는 금융자산의 분류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이 기준서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7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1)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Loan & Receivables)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식단계(손상사건 발생)와 측정단계를 구분하여 손상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함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채권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식단계(손상사건 발생)와 측정단계의 구분 없음. 따라서 손상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음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함
문단 63~65	기업회계기준 제57조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채권(예: 매출채권)에 대하여 인식단계(손상사건의 발생) 없이도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음. 반면에, 이 기준서에 의하면, 인식단계(손상사건의 발생)가 있어야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음.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예상손실(Expected Loss)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인식을 유도하

는 바젤 II의 방향과 상이하므로, 금융기관의 경우 감독목적의 대손충당금과 재무회계목적의 대손충당금을 이원화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었던 대여금 및 수취채권도 이 기준서에 의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감소될 수 있음.

(2)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과 매도가능지분상품 - 손상차손 회복불가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지분상품이나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당해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하지 않음 •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하지 않음 •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하여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고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취득원가로 평가한 지분증권에 대하여 그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함 •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모든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함
문단 66, 69	기준서 제8호 문단38-39, 44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지분증권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다른 모든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함. 반면에, 이 기준서에 의하면,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하여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하지만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지분상품과 파생상품자산)과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하지 않음.

-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감액사유의 해소로 인한 부분과 기타의 사유로 인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임.

(나)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에 의하면 현행 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원가를 장부 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지분상품과 파생상품자산)과 매도가능 지분상품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 인식 후에 손상이 회복되더라도 당기이익을 통하여 그 손상차손을 회복시킬 수 없음.

B. 파생상품

8 적용범위

(1) 물리적변수(예: 기후, 지질)를 기초변수로 하는 계약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어떤 계약은 기후, 지질 또는 기타 물리적 변수에 기초하여 지급액이 결정됨. 기후변수에 기초한 계약은 때로는 '기후(날씨)파생상품'이라고 함. <u>이러한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이 기준서를 적용함</u>	기초변수가 물리적 변수인 경우로서 <u>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계약은 해석53-70의 대상이 아님.</u> 물리적 변수는 온도, 강수량 등을 의미함
문단 AG1	해석53-70 3.마

- 물리적변수(예: 기후, 지질)를 기초변수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 해석53-70에서는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한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국내·외적으로 물리적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이상기온현상에 따라 기후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 그 이익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하여 기후를 기초변수로 하는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물리적변수를 기초변수로 하는 계약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고 있음. 한편, 날씨파생상품에 대한 전세계 시장은 지난 1년간(3월 기준) 10% 증가한 46억 달러 규모임. 온도를 기초변수로 하는 파생상품이 일부 거래소(예: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거래되며, 대부분은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음).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물리적변수를 기초변수로 하는 계약이 파생상품의 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석53-70에서는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이 기준서에 의하면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이러한 파생상품 회계처리로 인하여 실무적 부담 및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기초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재 기후(날씨)파생상품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액형의 보험계약이 있을 뿐이나, 향후 관련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서는 이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것임.

(2) 금융보증계약(Financial Guarantee Contract)과 신용관련 보증계약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보유자에게 손실액을 지급하는 계약(금융보증계약)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지정 가능 - 지정 이외의 경우에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한 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한 금액 ②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채무자의 지급불이행을 지급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신용등급의 변동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불이행시 대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은 해석53-70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신용상태를 기초변수로 하여 현금흐름이 결정되는 계약은 파생상품의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해석53-70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를 기초변수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용위험을 부담한 경우 : 파생상품은 이 해석에 따라 처리하고, 파생상품이 아닌 경우 은행업 등의 지급보증충당금 규정에 따라 처리함 ② 신용보증을 받은 경우 : 파생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계약의 경우 파생상품으로 보아 이 기준서를 적용	<p>품은 이 해석에 따라 처리하고, 파생상품이 아닌 경우 주식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보증계약은 충당부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충당부채 요건 충족시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함
문단 9 & 47, AG4	해석53-70 3.마,14 / 기준서 제17호 문단4

- 해석53-70에 의하면,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금융보증계약은 ①채무불이행시 지급하는 계약과 ②경제적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하고 신용상태를 기초변수로 하여 현금흐름이 결정되지만 파생상품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을 모두 의미함. 반면에, 이 기준서에 의하면, 금융보증계약이란 위의 ①만을 말하며, 위의 ②의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은 파생상품에 해당함
- 해석53-70에서는 위의 ①을 당해 해석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현재 충당부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반면에, 이 기준서에서는 ①은 금융보증계약으로서 이 기준서에 따라 처리하며,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②의 경우에는 파생상품으로서 이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바젤 II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의 제고를 위하여 신용위험의 매입 또는 매도가 가능한 신용파생상품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실무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다)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위의 ②와 관련하여 신용상태를 기초변수로 하여 현금흐름이 결정되고 파생상품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의 경우, 해석53-70과 이 기준서 모두에서 파생상품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이 기준서에 의하면, 위의 ① 즉, 금융보증계약은 더 이상 충당부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이며, 회계처리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최초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가치로 측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당부채 요건 충족시 충당부채를 인식
후속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가치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미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한 금액 ②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함 추정(변경)된 미래현금흐름을 역사적 할인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측정함

- 위의 ① 즉, 금융보증계약에 대해서 이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그 이유는 회계처리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할인율의 차이로 인한 것인데 그 할인율이 일반적으로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기(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때문임.

(3) 대출약정(Loan Commitment)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충당부채 인식(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예외: 다음 3가지에는 이 기준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 가능 - 차액결제가 가능한 대출약정은 파생상품으로 보아 회계처리함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대출약정은 공정가치로 최초인식 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충당부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최초에는 인식하지 않고, 충당부채 요건 충족시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함 은행감독규정 등 금융기관 감독규정에서 일부 약정에 대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함. (은행업: 미사용 약정/ 카드업: 현금서비스한도 등 업종마다 다름)
문단 4, 47	기준서 제17호 문단4 / 은행감독규정 등

- 해석53-70에 의하면, 대출약정에 관한 명시적인 회계처리 규정이 없음. 실무적으로는 충당부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이나 은행감독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였음.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의하면 업종마다 회계처리가 달라지기도 함. 반면에, 이 기준서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충당부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예외적으로 3가지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함.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에서는 대출약정에 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명확해지고 실무적으로도 일관된 회계처리가 가능함.
- 대출약정 중 위의 3가지 예외 항목의 경우는 더 이상 충당부

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이므로, 이를 계약단계에서 식별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임.

9 용어의 정의

(1) 파생상품의 정의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p>파생상품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을 말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함.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 및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한 비금융변수를 말함 2.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함 3. 미래에 결제됨 	<p>파생상품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말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함 2.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함 3. 차액결제 가능성이 있어야 함
문단 9	해석53-70 3.

- 해석53-70과 이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정의’의 차이점은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음. 하나는 파생상품 정의의 대상(즉, 모집단)의 차이이며, 다른 하나는 파생상품 정의의 조건의 차이임.

- 파생상품 정의의 대상의 경우, 해석53-70은 ‘모든 금융상품과 이와 유사한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또는 기타계약’을 대상으로 함. 이러한 차이는 해석53-70과 이 기준서의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됨. 해석53-70은 용어의 정의를 먼저 규정하고 적용범위를 나중에 규정하는 반면에 이 기준서는 적용범위를 먼저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나중에 규정하고 있음.
- 파생상품 정의의 대상을 금융상품³⁰⁾과 비금융상품(비금융항목을 기초로 하는 계약)으로 구분하여 더 구체적으로 그 차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금융상품	적용범위 제외항목의 차이	적용범위 제외항목의 차이
비금융상품	차액결제 의미의 차이	차액결제 의미의 차이

파생상품의 정의의 대상과 관련하여, 금융상품의 경우 해석53-70과 이 기준서의 차이는 결국 ‘적용범위 제외항목의 차이’로 귀결되며, 그 적용범위 제외항목의 차이는 대체로 위의 <I. 적용범위>의 분석내용과 같음. 반면에 비금융상품의 경우 해석53-70과 이 기준서의 차이는 결국 ‘차액결제 의미의 차이’로 귀결되며, 그 이유는 비금융항목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에서도 차액결제가능계약만을 그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차액결제의 의미는 해석53-70과 이 기준서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 파생상품 정의의 조건의 경우, 해석53-70과 이 기준서 모두 3가지 조건을 요구하며, 이 3가지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이 서로 다름. 즉, 해석53-70은 ‘차액결제 가능조건’을 요구하며, 이 기준서는 ‘미래결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총액결제 조건을 인정하고 있음. 다만, 비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에서도 차액결제 가능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30) 해석53-70과 이 기준서에서 금융상품의 정의가 일치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차이는 없음

- 파생상품의 정의의 조건을 금융상품과 비금융상품으로 구분하여 더 구체적으로 그 차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금융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기초자산의 시장성 유무의 차이 • 예외: 시장성이 있다면 해당 자산의 시장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체 자산을 일시에 매각할 수 없더라도 차액결제요건을 충족하므로 파생상품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기초자산의 시장성 유무의 차이 • 예외: 시장성이 있더라도 해당 자산의 시장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체 자산을 일시에 매각할 수 없다면 차액결제 가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파생상품이 아님
비금융상품	차액결제 의미의 차이	차액결제 의미의 차이

파생상품의 정의의 조건과 관련하여, **금융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석53-70과 이 기준서의 차이는 결국 ‘기초자산의 시장성 유무의 차이’로 귀결되며, 금융상품 중 그 기초자산이 시장성이 있는 것은 해석53-70과 이 기준서 간에 차이가 없지만(예외 있음: 위의 표 참조), 그 기초자산이 시장성이 없는 것(예: 시장성이 없는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당해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그 차이가 존재함. 반면에 비금융상품의 경우 해석53-70과 이 기준서의 차이는 결국 ‘차액결제 의미의 차이’로 귀결되며, 그 이유는 비금융항목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에서도 차액결제 가능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차액결제 의미는 해석53-70과 이 기준서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나)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파생상품 정의의 대상의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대체로 위의 <I. 적용범위>의 분석내용에 따라 해석53-70과 이 기준서 간에 그 차이가 존재함. 즉, 파생상품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던 일부 항목이 이 기준서에 의하면 파생상품의 적용

범위에 해당함. 반면에 비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해석53-70과 이 기준서 간에 실질적으로 그 차이가 없음.

- 파생상품 정의의 조건의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기초자산이 시장성이 있는 계약은 해석53-70과 이 기준서 간에 차이가 없지만(예외 있음: 위의 표 참조), 그 기초자산이 시장성이 없는 계약은 해석53-70에 의하면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기준서에 의하면 파생상품에 해당함.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 기초자산이 시장성이 없는 금융상품은 후속기간에 취득원가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최초인식시점과 후속기간에 공정가치 평가)에 예외만 발생시킬 뿐 회계처리 결과는 기존과 차이가 없음. 반면에 비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해석53-70과 이 기준서 간에 실질적으로 그 차이가 없음.
- 위의 회계적 효과 이외에 경제적 효과는 해석53-70에서는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던 일부 항목이 이 기준서에 의하면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해 실무적 부담 및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기초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임.

10 내재파생상품

(1)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보유자의 회계처리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과 비분리형 구분 없음)의 보유자는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요건을 충족하면 그 권리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하여 인식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석53-70 4.(4-2)에 의하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보유자는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요건을 충족하면 그 권리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하여 인식하여야 함 기준서 제9호 문단31(상충규정)에 의하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유자는 해석53-70 4.(4-2)이 아닌 기준서 제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준서 제9호 문단18에 의하면, 보유자는 분리형신주인수부사채의 경우만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인식하고, 전환사채나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함
문단11, AG30	해석53-70 4.(4-2) / 기준서 제9호 문단 18, 31

- 해석53-70에 의하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보유자는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요건을 충족하면 그 권리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서 제9호 문단31(상충규정)에 의하여 분리형신주인수부사채의 경우만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인식하고, 전환사채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에, 이 기준서에 의하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과 비분리형 구분 없음)의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요건을 충족하면 그 권리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하여 인식하여야 함.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에 의하면, 전환사채와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보유자도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요건을 충족하면 당해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하여 인식하여야 하므로,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의 분리 및 그 공정가치 평가 등에서 실무적인 부담이 발생될 수 있음.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p>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함</p> <p>(1)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변경되는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중요하지 않음</p> <p>(2) 유사한 복합계약을 고려할 때,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된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음</p>	<p>신설</p>
문단11A, AG33A-33B	N/A

- 이 기준서에 의하면, 예외적인 경우(2 가지)를 제외하고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음. 이는 해석53-70에 없는 규정임.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복합계약 전체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실무적으로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함으로써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및 그 회계처리의 부담을 덜 수 있음.

11 위험회피회계

(1) 매도옵션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원칙적으로 매도옵션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불가함. 다만, 매입옵션을 상쇄하기 위해 위험회피수단 지정 가능함	신설
문단 72, AG94	N/A

- 이 기준서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매도옵션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음. 그 이유는 매도옵션의 잠재적 손실은 관련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잠재적 가치변동 이익보다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임. 즉, 매도옵션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변동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임. 이는 해석53-70에 없는 규정임.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해석53-70에 의하면,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매도옵션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옵션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실무에서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임. 따라서 이 기준서의 이 신설규정이 실무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2)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으로 복수의 위험회피 지정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p>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복수의 위험을 회피하는 데 지정할 수 있음</p> <p>(1) 회피대상 위험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음</p> <p>(2) 각 위험회피효과를 입증할 수 있음</p> <p>(3) 위험회피수단과 각 회피대상위험 사이의 구체적인 지정을 확인할 수 있음</p>	신설
문단76	N/A

- 이 기준서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복수의 위험회피에 지정할 수 있음.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복수의 위험회피에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복수의 위험회피를 위해 그 수만큼 위험회피수단을 거래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무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4) 간편법(Shortcut Method)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간편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서 이자율스왑의 경우만 간편법(위험회피수단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의 변동으로 간주하여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하는 방법) 인정함
문단81, AG108	해석53-70 8.(8-6)

- 해석53-70에 의하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서 이자율스왑 계약금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최초 스왑계약체결시 스왑의 공정가치가 영(0)이라면 위험회피가 완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반면에, 이 기준서에 의하면, 간편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일부(예: 이자율위험, 신용위험)에 대해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상품의 일부위험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주요 조건이 동일하다면 효과적인 위험회피가 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만 설명하고 있음.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에 의하면,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서의 이자율스왑에 대한 간편법 적용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위험회피효과를 별도로 평가하여야 하는 등 실무적으로 부담이 될 것임.

(5)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자본)의 회계처리 - 장부금액 조정법(Basis Adjustment)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예상거래의 결과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인식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에 대한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확정계약이 된다면, 장부금액조정법을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함	예상거래의 결과 자산(금융과 비금융 포함)이나 부채(금융과 비금융 포함)가 인식되는 모든 경우에 인정함
문단 97~99	해석53-70 9.(9-7)

- 장부금액조정법(Basis Adjustment)란 자본에 인식된 관련 평가손익을 제거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취득원가 또는 장부금액에 포함하는 것을 말함. 장부금액조정법은 일반적으로 실무편의 즉,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자본) 관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음.
- 해석53-70에 의하면, 예상거래의 결과 자산(금융과 비금융 포함)이나 부채(금융과 비금융 포함)가 인식되는 모든 경우에 인정함. 반면에, 이 기준서에 의하면, 예상거래의 결과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인식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에 대한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만, 장부금액조정법을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함.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예상거래의 결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인식되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 장부금액조정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무부담을 줄 수 있음. 그러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짧으며,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

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그 실무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임.

(6)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가) 내용 분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피대상 위험을 공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도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 위험회피에 한하여, 개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화폐금액(예: 달러, 유로 또는 파운드 금액)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순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포트폴리오 일부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한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다음 중 하나로 표시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조정기간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인 경우에는 하나의 별도의 항목으로 자산에 표시 재조정기간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부채인 경우에는 하나의 별도의 항목으로 부채에 표시 위의 (1)과 (2)에 따른 별도의 항목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다음에 표시함. 당해 별도의 항목에 포함된 금액은 관련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함. 	<p>신설</p>
문단78,81A,89A, AG114-132	N/A

- 이 기준서에 의하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당해 포트폴리오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자산이나 부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므로 해석53-70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사한 항목의 집합(실질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님)과는 다름. 한편, 미국회계기준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위험회피회계를 매크로 헤지(macro hedge)라고 부르며, 실무적용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이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은 다음과 같음.
 - ① 위험관리절차의 일부로서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를 식별함
 - ② 계약상 재조정시점이 아닌 예상 재조정시점에 기초하여 포트폴리오의 재조정기간을 분석함
 - ③ 이러한 분석에 따라 위험회피하려고 하는 금액을 결정함
 - ④ 회피하고자 하는 이자율위험을 지정함
 - ⑤ 각 재조정기간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함
 - ⑥ 위의 ③~⑤에서 이루어진 지정을 이용하여, 위험회피지정기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되는지의 여부를 지정시점과 후속 기간에 평가함
 - ⑦ 위의 ②에서 결정한 예상 재조정시점에 기초하여, 위의 ③에서 지정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의 ④에서 지정한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측정함
 - ⑧ 위의 ⑤에서 지정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하여 손익계산서에서 평가손익으로 인식함.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는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함.
 - ⑨ 위의 ⑦의 공정가치 변동과 위의 ⑧의 공정가치 변동의 차이는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이며,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EU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IAS 39의 포트폴리오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규정을 ‘carved-out’하였으나, 관련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86/2004 문단 (8), (9), (10))
 - ① 요구불 특성이 있는 핵심예금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는 등 자산부채관리(ALM)에 필요한 실무의 적절한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 ② 중도상환위험을 이자율위험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은행감독 기구가 수용가능한 특정 위험관리기법의 중단이 불가피함.
- ③ 포트폴리오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규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가까운 장래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영국의 ASB의 경우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제약이 많더라도 수정되지 않은 IAS 39를 적용할 것을 요구함(ASB Guidance on application of EU-adopted IAS 39 -December 2004).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이 기준서에서 포트폴리오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인정함으로써 실무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를 회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실무에서 포트폴리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의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큰 비용이 소요될 것임. 따라서 대형금융기관 등 일부 기업에서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1) 투자부동산의 범위와 평가

- (가)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유형자산 또는 투자부동산(보험업)으로 분류하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서는 업종과 무관하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함.

<투자부동산 범위>

보유목적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	보험업준칙
임대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시세차익		투자부동산	

- (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각후원가로,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함.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서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원가 또는 공정가치 중 선택하여 보유한 투자부동산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함.

<투자부동산의 평가>

보유목적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	보험업준칙
임대	원가(상각후원가) 또는 공정가치	원가(상각후원가) * 기준서 제5호	원가(상각후원가)
시세차익		취득원가 * 기준 제55조	취득원가 * 기준 제55조 *준칙에 규정이 없어 기업회계기준 적용

(2) 리스이용자의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회계처리

- (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운용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부동산에 대한 사용 권리를 얻기 위하여 지급한 선급리스료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음.
-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서는 다음의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리스이용자도 운용리스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함.
- ① 당해 운용리스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임대수익·시세차익 획득 목적)에 부합
 - ② 당해 운용리스 부동산을 포함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자산으로 인식한다면 허용	-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 선급리스료가 있는 경우 당해 금액만 자산으로 인식

*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한 권리 중 하나라도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경우 보유한 다른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만 허용됨.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음.

(3) 주석공시의 차이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토지(임대, 시세차익)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 주석공시	토지(유형자산의 토지, 투자자산의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시지가 공시 * 기준서 제5호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1) 투자부동산의 범위 확대

-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유형자산에서 투자자산으로 재분류됨

(2) 공정가치모형 선택시 영향

- (가) 표현의 충실성 제고
- (나) 손익의 변동성 증가 : 공정가치변동금액이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므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할 때 매 회계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
- (다) 이 기준서 최초 적용시 기업의 순자산에 영향 :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이 기준서 최초 적용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보므로 기업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의 선택 허용에 따른 비교가능성 저해

- 공정가치모형만 규정하는 경우에 비하여,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의 선택 허용에 따른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저해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1)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모든 기업은 투자부동산의 측정(공정가치모형 선택한 기업)이나 공시(원가모형 선택한 기업)를 위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여야 함

(2) 세법 규정으로 인한 공정가치 평가 유인 감소

- (가) GAAP : 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감가상각, 손상차손 등을 모두 반영하여 평가된 금액이므로 별도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음.
- (나) TAX :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회계상 반영한 경우에만 손비 인정 (결산조정사항)하며, 투자부동산에 대한 임의평가 불인정
- (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기업은 현행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공정가치모형 선택 유인 감소
- (라) 공정가치평가의 세무상 수용,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허용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세무당국과의 협의 등이 필요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1 수익인식 시점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생물자산, 수확시점의 수확물, 정부보조금에 적용(문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임산물, 가축의 자연적 가치증가는 수익인식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문단 3)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문단 12)

○ 내용 분석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문단 6에서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의 최초인식과 공정가치의 변동, 수확물의 최초인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음.
-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에서는 농산물, 임산물³¹⁾, 가축의 자연적 가치 증가만을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어업과 관련된 생물자산의 자연적 가치증가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음
-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적용범위 배제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생물자산의 자연적 가치증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소비용 생물자산과 수확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문단 12)을 적용하였을 것임.

31)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수확물(포도)과 소비용 생물자산(육우)으로 본다면 생산용 생물자산(포도나무, 빈우나 종우)의 자연적 가치 증가는 수익인식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것임.

2 생산용 생물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생물자산에 적용(문단 1, 44)	생물자산을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음(문단 3)

○ 내용 분석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3에서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생물자산을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생산용 생물자산도 이 기준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함.
-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에서는 생물자산을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산용 생물자산은 일반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에 반영함.

3 소비용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수확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생물자산, 수확시점의 수확물에 적용(문단 1)	농업, 임업, 축산업의 재고자산을 적용범위에서 배제(문단 3)

○ 내용 분석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문단 2에서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수확물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소비용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수확물도 이 기준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함.
-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에서는 농업, 임업, 축산업의 재고자산만을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어업활동과 관련된 재고자산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농

림업활동과 관련된 소비용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수확물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를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4 생물자산과 수확시점 수확물의 측정과 평가손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생물자산, 수확시점의 수확물, 국고보조금에 적용(문단 1) -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공정가치')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의 최초인식시점과 순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문단 26) - 수확물의 최초인식 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문단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제4호 문단 12) - 유형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감가상각, 손상차손을 인식(제5호 문단 12, 26, 36)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되 저가법을 적용(제10호 문단 5, 24)

(1)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가) 이 기준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수확물에 대하여 판매 전인 재화의 보유 및 생산 과정에서도 손익을 인식해야함.

(나) 생산용 생물자산은 순공정가치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므로 공정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른 회계처리(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에 반영)와는 차이가 있음.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생산용 생물자산의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므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유사할 수 있음.

- (다) 원칙적으로 소비용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의 변동도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므로 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현행 실무상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준용, 저가법 적용)와 차이가 있음.
- (라) 수확시점의 수확물도 최초인식 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평가손익을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므로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현행 실무와는 차이가 있음.

(2) 기업 실무에의 주요 영향

(가)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나) 세법 규정으로 인한 공정가치 평가 유인 감소

- 세법에서는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회계상 반영한 경우에만 손비 인정(결산조정사항)하며, 생물자산 등에 대한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함.
- 순공정가치로 생물자산 등을 평가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 기준서의 선택적용 유인이 감소

5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 중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는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수익으로 인식(문단 34, 38)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를 적용(문단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 • 자산취득과 무관한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

(1) 내용 분석

- (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의 경우 순공정가치의 변동을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당해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이나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
- (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 따라 회계처리함.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은 자산취득과 관련되고 그 밖의 조건없는 정부보조금의 수익인식 시점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음.
- (나) 상각후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의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³²⁾ 중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2)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은 deferred income을 설정하거나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 ‘영업활동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정부지원’

- 현행 기업실무에서도 이 해석서의 내용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현행 기업실무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특수목적회사 연결’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결정능력만으로 지배 여부를 입증하기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는다는 목적이 수반되어야함을 강조. 특수목적기업의 지배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활동, 의사결정능력, 효익, 위험을 검토하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되는 종속회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지분율,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과반수의 임면 권한 등과 같이 의사결정능력 위주로 지배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하는 종속기업의 범위가 현행 외감법 시행령에 따른 범위보다 확대될 수 있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1)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0-2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연결대상 포함여부)에서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여 금융자

산(주식등 지분증권은 제외함)을 유동화하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활동범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자금의 회수등 수동적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금융자산의 양도자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자산 양도자의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 해석서 문단 7에서는 자산의 이전이 양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특수목적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해석서를 적용하면 연결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현행 실무(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0-24를 따르는 경우)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2)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4-7(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의 연결대상 포함 여부)에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의 활동범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및 배분활동으로 제한되어 있고,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회사의 재산 운용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한다면,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최대출자자라 하더라도 동 회사를 지배할 수 없으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 해석서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효익의 과반을 얻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 그 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결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현행 실무(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4-7을 따르는 경우)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 ‘참여자의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비확폐
성자산 출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참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1 운용리스 인센티브: 개념 및 예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리스제공자가 제공하는 것.(문단 1) • 기본적으로 운용리스자산의 이용을 위한 대가에 해당.(문단 3) • 운용리스 인센티브의 예시.(문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이용자의 원가를 리스이용자에게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 - 리스이용자의 재배치원가, 리스자산개량원가를 리스제공자가 보상하는 것 - 리스이용자가 이미 유지하고 있는 리스약정과 관련된 원가를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것 - 리스기간 초기에 리스료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문 규정 없음

- (1)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운용리스자산의 이용을 위한 대가의 일부로 보고 있음
- (2) 운용리스 인센티브의 예를 제시하고 있으며, 해석서(안)의 부록에서 두 개의 예제를 제시하고 있음

2 리스개설원가와 구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리스 인센티브(BC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자산 이용을 위한 대가의 일부 - 계약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개설직접원가(문단 44)³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을 위한 원가 - 계약조건과는 직접적으로 상관 없음

- (1)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에서는 리스개설직접원가(Initial direct cost)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해석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리스개설원가(Initial cost)를 언급하고 있음
- (2) 또 「계약체결을 위한 원가」에 해당하는 ‘리스개설원가(Initial cost)’와 구별하여 「리스자산의 이용을 위한 대가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3 운용리스 인센티브: 회계처리 방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자산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제공자(이용자)는 인센티브의 총원가(효익)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에 따라 리스수익(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문단 4, 문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문 규정 없음.

- (1) 문단 3에서는 인센티브의 성격, 형식, 지급시점과 관계없이 리스자산의 이용을 위하여 합의된 순대가의 일부로 인식하도록 규정
- (2) 문단 4와 문단 5에서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운용리스 인센티브의 인식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33)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문단 44에서는 리스개설직접원가와 관련하여 ‘운용리스제공자’의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 후 리스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동안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운용리스이용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음.

1 비상각자산의 회수 방법 및 이연법인세 인식에 대한 규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이연법인세 부채의 인식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고, 이 해석서에 의해 처분으로 회수되는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된 토지의 경우 문단 70의 2에 따라 당해 토지를 예측가능한 미래에 처분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

- (1)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16호에 의하여 비상각자산의 회수방법은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2005년 6월 기준서 제16호의 문단 70의 2를 추가하여 처분하지 않을 토지의 경우 재평가로 인한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실무적으로 차이가 발생함.
- (2) 그러나 위에 언급한 차이는 이 해석서(안)를 발행함으로써 나타난 차이가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를 도입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것임.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과거 인식하지 않았던 재평가증된 토지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추가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임.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회계처리를 수행함에 있어 추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실무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

1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에 대한 규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기간의 순손익으로 회계처리함. 다만, 자본 항목과 관련된 부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규정은 없음.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는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함. 이 해석서에 따르면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에 따라 당해 기업의 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가 변동된 경우, 이로 인한 세효과를 당기 손익에 반영(세효과가 동일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으로 인식된 금액의 변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본에서 직접 차감)함.
- (2) 다만, 이 해석서가 없는 경우에도 동 기준서 문단 41과 문단 42에 따라 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고 측정 금액이 변경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은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이러한 방법은 이 해석서(안)의 결론은 일반원칙과 동일함.
- (3) 회계추정이 변경된 경우의 회계처리 원칙은, 인식된 법인세 금액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의 문단 52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음. 즉,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원칙에 따른 회계처리와 해석서에 따른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문단 52에 따른 회계처리가 모두 동일하므로 차이 없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특이사항 없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1)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이전에는 기업이 일반법인 또는 공개법인인지 여부 및 대주주 보유 지분율에 따라, 각기 법인세를 다르게 부담하였으며, 1990년 대 초까지 일반법인과 공공법인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세율체계가 적용됨. 현재 이러한 과세 방법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의 경우 발생가능한 상황임.
- (2) 세법이나 세율이 변경된 경우가 아닌 납세지위의 변경시 현행 기준 체계 내에서도 회계추정을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동 해석서(안)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으나, 이 해석서(안)을 통하여 관련 사안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준서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래 실질의 평가’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 (1)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특정 목적(예: 세무상의 혜택)을 위하여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기초 자산의 사용권의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약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2) 기준서나 해석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약정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와 재무회계개념체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 해석서(안)을 통하여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가공의 리스거래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3) 결론적으로 이 해석서(안)이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본질적으로 다른 회계처리를 제시하는 것은 아님.

2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거래의 실질상 리스가 아닌 경우의 회계처리 명확화
 - (가) 이 해석서(안)은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거래의 실질상 리스가 아닌 경우의 회계처리를 제시함으로써, 거래의 실질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예를 들어,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을 리스로 제공하고 다시 그 자산을 역리스로 이용하는 경우에, 기업이 자산의 소유에 따르는 위험과 보상을 그대로 보유한다면, 자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임.
 - (나) 실무에서 상당수의 계약이 실질에 따르지 않고 형식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거래의 실질상 리스가 아닌 거래에 대하여는 리스회계를 적용할 수 없음.

1 일반 사항

- (1) SIC 29에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함.
- (2) IASB는 2006년 11월에 제정된(시행일 : 2008년 1월 1일 이후) IFRIC12에서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의 인식과 측정의 Issue를 다루고 있음.
- (3) 현재 K-GAAP에는 SIC29나 IFRIC12에 상응하는 기준(서) 또는 해석이 없으며, 질의회신(KQA)에서는 사용수익기부자산(무형자산)의 인식 등에 관한 질의는 있었으나, 관련된 주식공시사항에 대한 질의는 없었음.
- (4)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주식사항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5) 결국 이 해석서가 적용되는 경우 관련거래의 공시에 대한 최초의 기준이 될 것임.
- (6) 즉 해석서 문단 6-7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사항(아래 규정 내용 참조)은 새롭게 요구되는 내용이 되는데,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 I'의 문단 96(3) 등 주식의 일반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음.

2 주요 내용

- | |
|---|
| <p>6 민간투자사업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식공시사항을 결정한다. 사업시행자와 사업허가자는 매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계약의 내용(2)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 |
|---|

약상 주요 조건 (예: 사업기간, 사용료의 가격 재산정 시점, 가격 재산정 또는 재협상의 결정기준)

(3) 다음 사항의 성격과 범위(예: 수량, 기간 또는 금액 중 적절한 사항)

(가) 특정 자산을 사용할 권리

(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또는 제공받을 권리

(다)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할 의무

(라) 사업기간 말에 특정자산을 인도할 의무 또는 수령할 권리

(마) 갱신 및 해지 선택권

(바) 기타의 권리와 의무 (예: 중요한 분해수리)

(4) 당기에 발생한 계약변경의 내용

(5) 민간투자사업의 분류 방식

6A 사업시행자는 금융자산이나 무형자산과 건설서비스를 교환하면서 당기에 인식한 수익과 손익을 공시한다.

7 이 해석서 문단 6의 공시사항은 각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민간투자사업의 분류별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분류란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집합을 말한다(예: 통행료 징수, 통신 및 상하수 처리 서비스).

1 수익금액의 측정 :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5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은 제공받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판매자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비교환거래를 참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환거래시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9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본다. 이때 수익은 교환으로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이전이 수반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만일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그 수익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이전이 수반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 (1)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서는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을 교환하는 경우 그 수익의 측정과 관련하여 문단 9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해석서는 기본적으로 기준서 제4호의 규정과 상충하지 않음
- (2) 다만, 광고용역의 교환시 그 수익의 측정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제공받은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음. 이는 광고를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제공받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임
- (3) 따라서, 상이한 광고용역의 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되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비교환거래를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4) 또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공정가치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문단 26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 가능한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임

2 기업실무 및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광고용역의 '성격과 가치의 유사성(또는 상이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무상 이를 판단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 현재 K-GAAP에는 이 해석서에 상응하는 기준(서) 또는 해석이 없으며, 질의회신(KQA)에서는 KQA 01-065 : '판매목적 Web Site 제작비용에 관한 회계처리'가 있었음. 이 해석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없는 웹 사이트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지출의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는 없음.

2 기업실무 및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웹 사이트 원가에 대한 기준이나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별로 웹 사이트 원가를 비용 또는 자산으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다르게 표시되었으나 이 해석서에서 웹 사이트 원가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증가할 것임. 현행 기준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웹 사이트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적용에 도우미 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이 해석서의 정확한 적용을 위하여는 웹 사이트의 개발과 운영의 각 단계별 활동과 지출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실무상으로 회계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1) 할인율 변동에 의한 제거, 복구 및 유사부채의 변동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47에서 정의한 현행 시장이자율의 변경 (현행 시장이자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의 변화와 당해 부채에 특정된 위험을 포함한다.)(문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에서는 제거, 복구 및 유사부채가 변동할 수 있는 상황을 문단 3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시장이자율의 변경을 제거, 복구 및 유사부채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으로 기술하고 있다. 현행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에서는 충당부채가 변경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문단 40에서 충당부채의 현재가치계산에 사용된 할인율은 변동하지 않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할인율 변경에 의한 충당부채의 변경은 발생할 여지가 없음.

(2) 제거, 복구 및 유사부채의 변동의 회계처리 - 관련 자산을 원가법에 의하여 측정한 경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p>(문단 5)</p> <p>5부채의 변경은 당기에 관련 자산의 원가에 더하거나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p>	<p><u>문단 41</u></p> <p>상황변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면, 관련 충당부채는 환입</p>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부채의 감소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u>문단 40</u>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 해당 증가 금액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A53)
--	--

- 제거, 복구 및 유사부채와 관련된 자산을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2101호에서는 제거, 복구 및 유사부채의 변동을 관련 자산의 원가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및 제17호에서는 미래 복구비용에 따른 충당부채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준서 제17호의 문단 40~41에 따라 부채의 증감액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제거, 복구 및 유사부채의 변동의 회계처리 - 관련 자산을 재평가법에 의하여 측정한 경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의 변경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나 결손금을 변경시켜 회계처리한다.(문단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함.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을 재평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와의 본질적인 차이임. 기업회계기준서 제2101호에서는 제거, 복구 및 유사부채와 관련된 자산을 재평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경우, 부채 변동의 회계처리를 예시하고 있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부채의 변동을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관련 자산을 증감시켜 처리하므로, 충당부채와 특정 자산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게 되며, 해당 변동이 손익계산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기업실무를 간편하게 하는 이점이 있으나, 이를 자산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면, 관련 자산가액을 변경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므로 실무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큼.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에는 매 결산일마다 자산가액을 증액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감가상각대상가액의 변경을 가져 오므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1) 조합 출자금의 분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항목(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려면 발행자가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가 있어야 함(문단 7) 법률, 규정 또는 정관에 의하여 상환이 무조건 금지되면 조합원의 지분은 자본으로 분류함(문단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임(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104) 소유주의 투자는 기업실체에 대한 소유주의 권리를 취득 또는 증가시키기 위해 기업실체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자본이 증가함(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108) 상호금융기관의 자본은 설립근거 법률에 명시된 설립목적에 비추어 당해 기관의 법적 성격에 따라 신용사업 또는 비신용사업으로 전액 구분하되, 신용사업의 대차대조표 표시상으로는 전액 신용사업의 자본으로 표시함(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문단 12) 조합 출자금을 대차대조표 자본항목에 출자금으로 표시함

(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의거 신용사업을 취급하는 기관(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을 말한다)의 신용사업에 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상호금융기관 신용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문단 1)

(나) 위와 같은 협동조합은 현행기업회계기준과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할 경우 조합원 출자금을 자본으로 분류함.

(2) 공시사항: 상환금지대상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와 자본사이의 분류변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환금지대상의 변동이 금융부채와 자본 사이의 분류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분류변경의 금액, 시기 및 이유를 별도로 공시함(문단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 없음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41의 비교정보 관련 공시에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한다. 비교금액을 재분류할 때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① 재분류의 성격, ② 재분류된 개별 항목이나 항목군의 금액, ③ 재분류의 이유"로 규정하고 있음.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서는 상환금지의 변화에 따른 금융부채와 자본의 이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음.

(다) 기준서 제1001호에서는 비교정보에 대한 분류 변경시의 공시만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기준서 제1107호 문단12에서는 분류변경에 대하여 금융자산의 측정기준 변경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음. 따라서 '상환금지대상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와 자본사이의 분류변경'을 공시사항으로 추가함.

2 기업실무 및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조합 출자금이 자본에서 부채로 분류되어 조합의 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하여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의 결정’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 이미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가 시행 중이므로,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는 없다고 판단됨.

2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거래의 실질상 리스인 경우의 회계처리 명확화
 - (가) 실무상 상당수의 계약이 형식적으로는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리스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해석서(안)이 거래의 실질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나) 실무에서 상당수의 계약이 실질에 따르지 않고 형식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해석서(안)의 적용으로 인하여 기업이 공급약정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거래에 대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임.
 - (다) 공급약정(supply arrangement)이 리스거래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해석서(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공급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른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야 하고 구매자는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5호 ‘사후처리, 복구와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 현재 사후처리, 복구와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회계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2 재무제표와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1) 원전사후처리충당금: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는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설정하여 사내에 유보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과 환경단체 등에서 이러한 충당금이 원전 건설 등에 전용되어 실제 잔고는 없다고 주장하며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기금화하여 국가가 관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 해석서가 적용될 여지는 있음
- (2) 광해방지사업금: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방지사업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해당 부담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됨. 광해방지의무자는 이러한 부담금을 세금과공과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 해석서가 적용되면 상기 부담금 중 사실상 거의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자산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
- (3)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환경오염방지사업의 경우에 한하되,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과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등 각종 법률에 의한 보증금, 부담금, 가산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상기 내역중 부담의무자가 사실상 거의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

- (4) 그러나 위 (3)의 경우 실질적으로 준조세의 성격이 강하며 산정 및 부과기준이 명확하기 않고 부당한 징수에 대한 사후 구제절차 규정이 미흡하여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많은 시일 소요되며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에 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사용내역을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자산화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1) ‘폐전기·전자제품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부채

- (가) 현행 기준서에서는 명시되지 않은 ‘전기·전자제품시장의 참여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가 등장하게 되었음. 이는 ‘폐전기·전자제품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EU Directive on WEEE)’에 따른 것으로 이 해석서를 적용하는 기업은 지침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나) 유럽연합 지침은 폐전기·전자제품의 발생억제(사전예방) 및 재사용 등을 통한 폐기물의 최종처리량 감축(사후처리)을 규정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전기·전자제품의 전과정(life-cycle)에서의 ‘환경성과의 개선 및 환경의 보전’에 있음
- (다) 이 해석서는 기업이 유럽연합의 회원국(25개 국가)내 특정 시장(전기·전자제품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유럽과의 교역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2) 유럽연합 회원국별 측정의 상이성

- (가) 유럽연합 지침을 토대로 유럽연합의 각 25개 회원국은 자국법을 제정·시행 하게 됨. 따라서, 이 해석서에서 언급하는 ‘측정기간’ 및 ‘시장점유율’과 같은 용어는 개별 회원국마다 그 기간이나 측정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 (나) 또 폐기물의 처리비용에 대한 청구방식도 시장점유율 기준, 판매수량 기준, 판매중량 기준 등 회원국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국가의 시장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게 될 충당부채의 측정금액도 달라지게 됨

(3) 적용대상 기업 및 적용범위

- (가) 이 해석서의 주요 적용대상 기업은 유럽연합의 25개 회원국에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될 것임. 즉, 국내에서는 가전 3사를 비롯한 주요 전기·전자회사가 그 대상이 되며 주로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관련회사는 적용의 가능성이 높지 아니함
- (나) 이 해석서는 2005. 8. 13 후에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전기·전자제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2005. 8. 13 이전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도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음. 즉, 2005. 8. 13 후에 관련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기업은 자신이 판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2005. 8. 13일 이전의 최종소비용 전기·전자제품의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그 폐기물 관리원가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임

(4) 유럽연합의 지침과 유사한 국내의 환경관련법률

- (가) 국내에서도 유럽연합의 지침과 거의 유사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환경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에서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여 2006년 10월에 법제처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음
- (나) 제정이유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게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음

(다) 이 법률이 시행될 경우(시행일은 2008. 1. 1) 관련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법률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충당부채 등을 추가로 설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2 기업실무 및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1)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에 관련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해석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함. 그러나, 회원국별로 법규의 제정 및 시행 시기가 다르며, 또 처리비용의 측정기준이 상이하므로 부채금액의 측정이 어려울 수 있음
- (2) 부채금액 측정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발생시 비용처리 하였던 기업이 이 해석서에 따라 충당부채를 인식하게 될 경우 부채비율의 상승 및 관련비용에 대한 인식시점의 차이로 기간손익에 영향을 받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초인플레이션 경제국가에 피투자회사(그 국가의 화폐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지고 있는 극히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영향이 없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초인플레이션 경제국가에 피투자회사(그 국가의 화폐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지고 있는 극히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처음 도입되는 개념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예상됨.

4 기타 사항

- 인플레이션율에 관한 정보는 IMF에서 매월 발표하는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에서 얻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초인플레이션 상태(3년 동안의 누적인플레이션율이 100% 이상)에 있다고 분류되는 국가의 예
 - 앙골라,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짐바브웨, 콩고, 수리남, 미얀마, 터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해서 식별할 수 없는 거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황에 비추어 재화나 용역이 이미 제공되었거나 앞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함.(문단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문 규정 없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해서 식별할 수 없는 거래(예: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의 특정계층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거래)의 경우에도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이 증가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지분상품부여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기 전에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특정해서 식별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1 주계약과의 분리여부 검토의 시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9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계약시 계약조건 변경으로 현금흐름이 중요하게 수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계약시

- (1) 현행 해석[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는 4.에서 최초 인식시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는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고, 그러한 분리여부에 대한 재검토 여부 등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음. 또한 그동안 질의회신에서 재검토의 필요여부에 대한 질의는 없었음.
- (2)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설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가) 기업들이 계약조건 변경을 경험하지 않았음.
- (나) 기업들이 계약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기존 계약을 지우고 새로운 계약을 인식하면서, 분리여부를 검토하였음.
- (3) 결국 이 해석서가 적용되어도, 기존의 회계관행과 달라질 것은 없다고 판단됨.

2 최초적용기업의 경우 분리여부 검토의 기준시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해석 [5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계약시점과 계약조건 변경으로 현금흐름이 중요하게 수정된 시점 중 나중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시적 언급 없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부록 IG55에 의하면, 최초적용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관련내용을 소급적용하여야 함. 그러나 최

초 인식후 조건변경이 있다면 이 해석서에 의하여 분리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어차피 재검토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초적용기업이 최초계약시점까지 소급할 필요가 없을 것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1) 누적중간기간의 예외 인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	적용의견서 03-6 및 질의회신
<p>손상차손 환입이 인정되지 않는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누적중간기간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권(기준서 제1036호) • 원가로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기준서 제1039호) • 매도가능지분상품(기준서 제1039호) 	<p>채권 등의 평가시 누적중간재무보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중간기간에 당해 결과에 맞추어 Plug-in 분개 수행</p>

(2) 이 해석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의 문단 28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취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와 제1039호의 손상차손 환입의 금지 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림

(3) 현행 실무상 적용의견서와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모든 평가는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수행되고 있음. 현행 손상차손환입이 인정되지 않는 영업권에 대하여 한정된 질의회신은 없었으나 실무적으로 다른 자산들과 다르게 회계처리하지 않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1) 법에 따라 중간보고를 수행하는 빈도가 다르며, 이것이 연차재무제표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 (2) 이에 따라 동일한 환경에 있는 기업들 간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 영업권이나 원가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및 지분상품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은 일시적인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결론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1) 사실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와 제1036호·제1039호 사이에 존재하는 상충을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는데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1)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기준보상약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원칙은, 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자신의 지분상품을 매입하기로 결정하는 상황인지 또는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상황인지에 관계없이 적용함.(문단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문 규정 없음. 다만 해석상 동일한 회계처리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2)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종업원에게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차이가 없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종속회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측정하여 그 금액만큼 지배회사에게서 자본을 불입받은 것으로 보아 자본의 증가를 인식함.(문단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위해 종속회사의 종업원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하는 경우, 종속회사는 보상원가 전액을 인식하고 동일한 금액에 대해 지배회사에서 자본(자본잉여금)을 불입받은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함.(문단 B49)

- (3) 종속회사가 자체의 종업원에게 지배회사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속회사는 종업원과의 거래를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함. 이 원칙은 종속회사가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분상품을 어떻게 획득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함.(문단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문 규정 없음.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종속회사가 자체의 종업원에게 지배회사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종속회사는 종업원과의 거래를 무조건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인식하는 부채가 증가하게 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종업원에게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와 종속회사가 자체의 종업원에게 지배회사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엄밀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지분상품 부여와 관련된 계약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증대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1 적용범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자의 회계만 다룸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간투자사업을 사업허가자(grantor)가 통제 또는 감독. (2) 사업허가자가 사업의 시행기간 말에 사회기반시설의 중요한 잔여지분을 통제. <p>[문단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자의 회계만 있음(질의회신) 회계기준은 없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이 해석서 문단 5의 요구를 충족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음 <p>[민간투자법 제3장 (감독) 등]</p>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는 운영권을 가진다. <p>[문단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현재에도 공공부문이 소유권을 가지는 사회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 시설의 사용권(운영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 다만,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경우 건설기간의 회계처리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음. (3. 참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라 사용권(운영권)을 가짐.

- 현재 실무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건설이 완료되고 운영이 시작될 때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을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운영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따라서 이 해석서가 실무에 미치는 영

향은 없음. 다만 건설기간중의 회계처리 등 세부적인 회계처리는 현행실무와 이 해석서의 요구사항이 차이가 있음. (3. 참조)

3 민간투자사업 시행대가의 인식과 측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측정한다. → 건설기간 중에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함. 단일의 실시협약을 통하여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수행한다면, 그 대가는 제공된 서비스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배분함. 대가의 회수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자산 :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무조건부 권리 무형자산 : 사용료 부과권리 <p>[문단 13]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자가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 <u>건설기간에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지 않음.</u> → '<u>건설중 인자산</u>'으로 회계처리함. 건설과 운영에 따른 대가를 구분하지 않음. →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에 비로소 수익을 인식함. <u>일반적으로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함. 따라서 무형자산이 일반적임.</u> <u>사업시행자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허가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음.</u> → <u>건설 중인 자산의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3-2. 참조)</u>

- (1) 현재 우리나라의 실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 건설기간에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지 않음. 또한 건설과 운영에 따른 대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공공부문이 지급한 금액(만약 있다면)을 건설 중인 자산의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 (2) 그러나 이 해석서에서는 건설기간에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익으로 인식되는 대가(consideration)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문단 15] 그리고, 건설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공정가치로는 건설서비스의 공정가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BC30 참조)³⁴⁾

- (3) 한편 운영서비스와 관련된 수익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 해석서는 건설서비스의 대가로 무형자산(건설서비스의 공정가치에 해당함)을 취득하였고, 해당 무형자산이 운영서비스에서의 수익창출에 사용되는 것으로 봄. (BC32, 34 참조)³⁵⁾

34) BC30 The accounting requirements for construction and service contracts are addressed in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 and IAS 18. They require revenue to be recognised by reference to the stage of completion of the contract activity. IAS 18 states the general principle that revenue is measured at the fair value of the consideration received or receivable. However, the IFRIC observed that the fair value of the construction services delivered may in practice be the most appropriate method of establishing the fair value of the consideration received or receivable for the construction services. This will be the case in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because the consideration attributable to the construction activity often has to be apportioned from a total sum receivable on the contract as a whole and, if it consists of an intangible asset, may also be subject to uncertainty in measurement.

35) BC32 In some circumstances, the grantor makes a non-cash payment for the construction services, ie it gives the operator an intangible asset (a right to charge users of the public service) in exchange for the operator providing construction services. The operator then uses the intangible asset to generate further revenues from users of the public service.

BC34 The IFRIC noted that total revenue does not equal total cash inflows. The reason for this outcome is that, when the operator receives an intangible asset in exchange for its construction services, there are two sets of inflows and outflows rather than one. In the first set, the construction services are exchanged for the intangible asset in a barter transaction with the grantor. In the second set, the intangible asset received from the grantor is used up to generate cash flows from users of the public service. This result is not unique to service arrangements within the scope of the Interpretation. Any situation in which an entity provides goods or services in exchange for another dissimilar asset that is subsequently used to generate cash revenues would lead to a similar result.

3.1 건설 또는 개량 서비스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에 따라 회계처리.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함. [문단 14] 건설서비스 또는 개량서비스를 제공시, 사업시행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대가(금융자산 or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는 공정가치로 측정. [문단 1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 또는 기존 시설물의 개량기간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따라서, 건설 등에 소요된 원가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함.

- (1) 이 해석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건설기간 중에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사업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시공자가 건설하느냐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 (2)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건설기간 중의 이익은 인정하지 않고(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건설원가(취득원가)를 기부채납액으로 인정하여 줌), 취득원가금액(기부채납 인정액)에 대한 일정한 이익률을 운영기간 중에 보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
- (3)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시행자 대신 건설시공업자(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SPC)의 주주회사)가 도급공사에 따른 건설수익과 비용(및 건설이익)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지만,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건설기간 중에 비용(건설소요원가)과 수익(비용과 동일금액)을 인식하는 것이 요구됨.
- (4) 형식상, 건설기간중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는 건설 후 기부채납시 인식하게 되는 무형자산을 자가창설무형자산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아무런 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 (5) 그러나 이 해석서는 건설기간 중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의 대가가 무형자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즉, 건설서비스와 무형자산 간의 교환거래로 보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수령한 대가 또는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음.³⁶⁾ 다만 일반적으로 건설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공정가치로는 건설서비스의 공정가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임.

3.2 사업시행자에 대한 건설 지원금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이 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기타항목을 제공할 수도 있다. 만일 해당 자산들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이 지급할 대가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해당 자산들은 IAS 20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아니다.[문단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의 Financing을 돕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건설 중인 자산의 국고보조금으로 처리 후, 향후 무형자산을 인식할 때 국고보조금이 무형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 됨.

- (1) 민간투자법에서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현행실무에서는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 (2) 그러나, 이 해석서에 따르면, 해당지원은 사업시행에 따른 대가의 선지급에 해당함. 따라서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수익의 누적금액을 초과한 대가수령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부채로 인식함.
- (3) 결국,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실질이 무엇이나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되는데, 이 해석서의 관점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즉, 사업시행자의

36) IFRIC 12의 부록에 있는 사례(Illustrative Examples) 참조

모든 서비스(건설서비스와 운영서비스)가 수익창출활동이 된다는 것임.

3.3 운영서비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서비스에 따른 수익과 원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회계처리 [문단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실무도 운영기간의 수익인식 기준으로 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을 따르고 있음

○ 이 해석서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차이는 없음

4 사회기반시설의 복구 의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 의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 및 측정 [문단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약 실시협약에서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면 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하여야 할 것임.

○ 이 해석서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차이는 없음

5 사업시행자의 차입원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자가 금융자산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건설 단계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함. 사업시행자가 무형자산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건설 단계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함. [문단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입원가를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원가로 회계처리 가능 당기비용으로 처리도 가능하지만, 건설 중에는 아무런 수익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유인이 없을 것임.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에 따라 Qualifying Asset에 대하여 차입원가를 자본화함. 금융자산은 자본화대상자산이 아니고, 무형자산은 자본화대상자산임.
- (2)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서 제7호에 따라 당기비용과 자본화 중 선택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할 유인은 없을 것임.

6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자산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여금 또는 수취채권, (2)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으로 인식 [문단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가 현금흐름을 보장하는 경우라면(예, BTL방식) 금융자산(금융리스채권)을 인식하게 됨.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자산: 인식과 측정'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음

- (2) 또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 중 정상거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 다만, 다음의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고 하면서
- (가)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는 금융자산(이 경우 단기매매로 분류한다)과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 (나) 최초 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 (다) 채무자의 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금융자산. 이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음.
- (3)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서의 대가는 정상거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을 것이며(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 만기보유증권으로는 분류되지 않을 것임.
- (4) 그러나 정상거래시장에서 거래된다면, 기업의 선택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 될 것임.

7 무형자산의 후속적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포함)
• 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8호 '무형자산'을 적용 [문단 26]	• 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준서 제3호를 적용

○ 이 해석서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차이는 없음

**부록: 제·개정 예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현행의 기업회
계기준’과의 비교**

1 개정내용³⁷⁾

- (1) 가득조건을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에 한정하도록 가득조건의 정의를 개정함.

○ IASB가 가득조건을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으로 한정한 이유는 이 두 조건만이 거래상대방의 용역제공을 보증한다고 보았기 때문임.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거래상대방이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양(quantity)'와 '용역의 질(quality)'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음. '용역의 양'과 관련된 '용역제공조건'은 기업이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대가로 거래상대방이 일정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보증하는 조건이며, '용역의 질'과 관련된 '성과조건'은 성과목표를 사용하여 거래상대방이 일정 수준 이상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보증하는 조건임

- (2) 비가득조건 미충족은 가득조건 미충족과 다르게 취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함. 즉, 비가득조건의 미충족을 '상실(forfeiture)'로 보지 않고 '취소(cancellation)'으로 봄.

○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 미충족시 회계처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가득조건 미충족	비가득조건 미충족
상실(forfeiture)로 보아 기 인식 주식보상비용을 환입함. 단 시장 조건은 제외함.	취소로 보아 잔여가득기간에 인식할 비용을 즉시 인식함. (예외) 기업이나 거래상대방 모두 조건의 충족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이는 부여일 공정가치 평가에 포함됨.

37) IFRS 2의 개정 후에는 K-GAAP과 주요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개정에 따른 영향 분석

(1) 재무제표에의 영향

(가) 비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보상원가는 변함없이 인식해야 하므로, 궁극적으로 인식되는 보상원가가 종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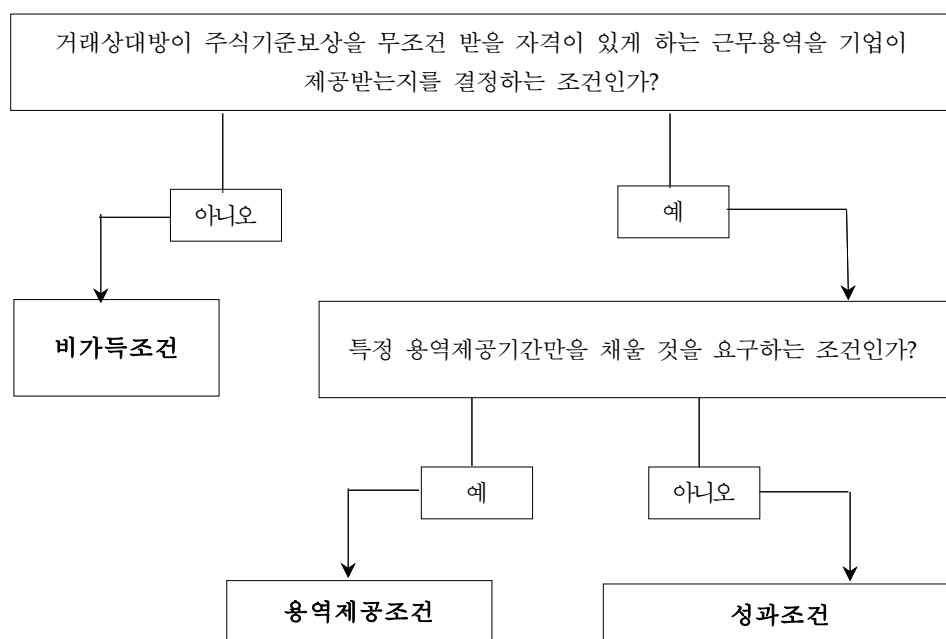
(나)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비가득조건의 충족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비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취소'로 보므로, 종전보다 보상원가가 더 일찍 인식됨.

(2) 기업실무에의 영향

○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구분을 위해 주식기준보상약정을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 있음.

3 개정내용의 요약

(1) 가득조건과비가득조건의 구분



(2) 거래상대방이 부여된 지분상품을 받는지를 결정하는 조건의 요약

	가득조건			비가득조건		
	용역제공 조건	성과조건		기업이나 거래상대방 어느 누구도 조건의 충족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조건의 충족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이 조건의 충족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시장조건인 성과조건	그 밖의 성과조건			
조건 예시	3년 동안 계속 근무해야 하는 조건	기업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에 근거한 목표	성공적인 기업공개에 근거한 목표 (특정 용역제공 포함)	일반상품지수 에 근거한 목표	주식기준보상의 행사가격 지급을 위한 기여금의 납부	기업이 제도를 지속시키는 것
부여일 공정가치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예	예 ^(a)
부여일 후 가득기간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의 회계처리	상실. 기업은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 수량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최선추정치를 반영하여 비용을 수정한다. (문단 19)	회계처리에 어떠한 변화도 없음. 기업은 잔여 가득기간에 계속해서 비용을 인식한다. (문단 21)	상실. 기업은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 수량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최선추정치를 반영하여 비용을 수정한다. (문단 19)	회계처리에 어떠한 변화도 없음. 기업은 잔여 가득기간에 계속해서 비용을 인식한다. (문단 21A)	취소. 기업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잔여 가득기간에 인식될 비용금액을 즉시 인식한다. (문단 28A)	취소. 기업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잔여 가득기간에 인식될 비용금액을 즉시 인식한다. (문단 28A)

(a)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를 계산할 때 기업에 의해 제도가 지속될 가능성은 100%라고 가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7년 제정)와 전면개정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의 주요 차이

(1) 용어변경

(가) 제1103호(2007년 제정)의 ‘소수주주지분(minority interests)’의 용어를 전면개정안은 ‘비지배지분(non-controlling interests)’으로 변경함. 소수주주지분의 소유주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할 수 있고 반대로 대주주지분의 소유주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투자기업을 지배하지 않는 소유주의 지분을 기술할 때 ‘소수주주지분’보다는 ‘비지배지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본 것임

(나) 이 외에 몇 가지 용어 변경이 있는데 이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2008년 전면개정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2007년 제정)
Non-Controlling Interests 비지배지분 ³⁸⁾	Minority Interest 소수주주지분
Acquisition method, 취득법 (Acquirer: 취득자, Acquiree: 피취득자)	Purchase method, 매수법 (Acquirer: 취득자, Acquiree: 피취득자)
Transferred Consideration 이전대가	Cost of Business Combination 사업결합원가
gain from Bargain purchase 염가매수차익	Excess of acquirer's interest in the net fair value of acquiree's Identifiable assets, Liabilities and contingent liabilities over cost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금액

38) 기존 minority의 소수주주에 대응하여 Non-controlling을 비지배(주주)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개정 기준서 전반에 걸쳐 주주의 개념보다는 지분의 성격별로 지배, 비지배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주주)를 삭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즉, Non-controlling interest를 ‘비지배지분’으로 번역하였음.

(2) 적용범위 확대

- (가) 전면개정안에서는 조인트벤처의 형성과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만을 제외함. 이에 따라 제1103호(2007년 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상호실체 간 사업결합과 지분취득없이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도 전면개정안의 적용범위에 해당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2008년 전면개정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2007년 제정)
<p><적용범위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인트벤처의 형성 ·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p><적용범위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인트벤처의 형성 ·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 둘 이상의 상호실체간 사업결합 · 지분취득없이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예: 이중상장목적)

- (나) 전면개정안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① 취득자와 피취득자가 지분만을 교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 ② 투자자(취득자)가 지배력을 획득할 정도로 피취득자가 자기주식을 충분히 매입하는 경우
- ③ 취득자의 지배를 가로막고 있던 소수거부권이 소멸한 경우
- ④ 단일화 약정으로 두 개의 사업을 통합하거나 이중 상장 기업을 구성할 목적으로 취득자와 피취득자가 계약만으로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 ⑤ 상호실체간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3) 비지배지분의 측정방법 선택 허용

- (가) 제1103호(2007년 제정)에서는 비지배지분을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기업 소유주지분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도록 하였으나, 전면개정안은 이 방법과 함께 지분의 공정가치 측정을 허용함. 즉 두 가지 방법 중 선택가능함. 각 방법에 따라 영업권은 각각 달리 산정됨 (다음 4의 <사례: Partial Goodwill, Full Goodwill 산정>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2008년 전면개정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2007년 제정)
<p>다음 두 방법 중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례적 몫 · 지분의 공정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례적 몫

(*) SFAS 141(R)에서는 공정가치 측정만 허용

(4) 영업권 측정

- (가) 영업권 측정에 대하여 제1103호(2007년 제정)는 partial goodwill만 허용하였으나, 전면개정안은 partial goodwill과 Full goodwill을 선택하여 측정하도록 허용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2008년 전면개정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2007년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ial goodwill · Full goodwill (≠ 엄격한 의미의 Full Goodwill)³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ial goodwill

- (나) 앞 3.의 비지배지분의 측정방법에 따라 Partial goodwill과 Full goodwill이 측정됨. 즉, partial goodwill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몫으로 비지배지분을 산정함으로써 비지배지분에서는 영업권이 발생되지 않고 지배지분에서만 영업권이 발생됨. Full Goodwill은 지배지분뿐만 아니라 비지배지분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 모두에서 영업권이 발생됨

39) 엄격한 의미의 Full goodwill은 영업권의 전체가치측정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의 공정가치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개별적인 합의 차이로 측정함. IFRS 3의 경우는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영업권을 산정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Full goodwill과는 차이가 있음(IASB의 Business Combinations Phase II 'Project summary and feedback statement' 참조)
그러나 그 동안 비지배지분에 대하여 영업권을 인식하느냐 안하느냐를 기준으로 Full goodwill, Partial goodwil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본 주요 논점에서는 편의상 기존 관점에서 용어를 사용함

(다) 사례를 통해 각 경우의 영업권 및 비지배지분의 측정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사례: Partial Goodwill, Full Goodwill 산정>

- B사의 공정가치는 11,000원으로 추정된다.
- A사는 현금 6,600을 지급하고, B사 지분 6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취득하였다.
- 취득일 현재 B사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의 합은 9,000원이다.
- B사 발행주식수는 100주이며, 취득일 현재 주당 공정가치는 @100원이다.
- 각 방법에 따라 산정된 영업권 및 비지배지분은 다음과 같다.

(1) Partial Goodwill

$$[6,600 + (9,000 \times 40\%)] - 9,000 = 1,200$$

비지배지분: 3,600

영업권: 1,200

(2) Full Goodwill

$$[6,600 + (40 \text{주} \times @100)] - 9,000 = 1,600$$

비지배지분: 4,000

영업권: 1,600,

<참고> 엄격한 의미의 Full Goodwill

$$(11,000 - 9,000) =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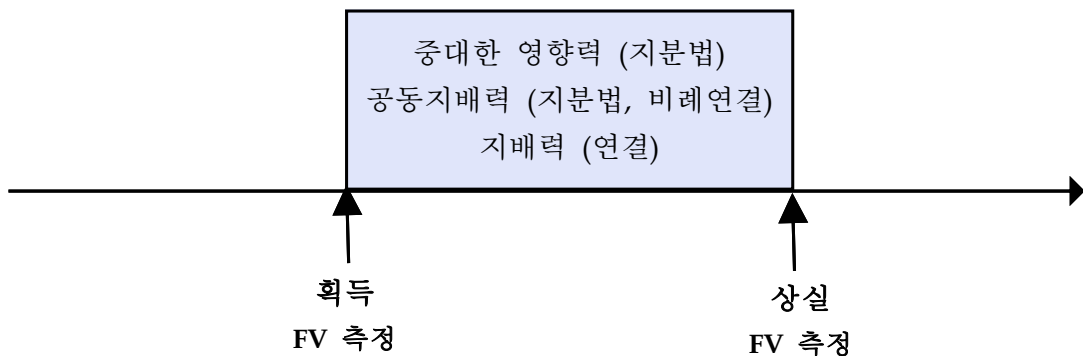
(5)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영업권 산정

(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영업권을 산정할 때 제1103호(2007년 제정)는 지분의 취득시점별로 영업권을 측정하여 합산하지만, 전면개정안은 지배권 획득시점에 일괄하여 영업권을 산정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2008년 전면개정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2007년 제정)
· 일괄법	· 단계법

(나) 또한, 전면개정안은 이전대가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또는 제1028호에 따라 공정가치 또는 지분법 등으로 평가되었더라도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관련손익을 차손익으로 인식함

<참고> 지배력 획득(전면개정안 제1103호 참조)과 지배력 상실(제1027호 개정안 참조)은 중요한 경제적 사건으로 보아, 각 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6) 이전대가가 현물일 경우 해당 현물이 결합기업에 남아 있다면 장부금액으로 측정

(가) 현물출자에 대하여 제1103호(2007년 제정)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반면, 전면개정안은 현물출자로 당해 현물이 결합기업이 계속 남아 있을 경우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도록 명시함. 즉, 이전대가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이 원칙인데, 이전대가에 포함된 자산·부채가 결합기업 즉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에 계속 남아 있다면 취득자가 해당 자산·부채에 대하여 여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를 둔 것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2008년 전면개정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2007년 제정)
· 현물출자로 당해 현물이 결합기업(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에 남아 있을 경우, 장부금액으로 측정	· 언급없음 ^(*)

(*) 제2013호에서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은 미실현손익으로 제거하도록 함. 한편 최근 IASB ED 9을 보면 SIC 13을 폐지하려고 함

(7) 취득관련원가

(가) 취득관련원가 중 회계전문가, 법률고문, 가치평가 전문가 수수료
를 제1103호(2007년 제정)에서는 사업결합에 직접 귀속된다고 여
겨 자산으로 인식하였으나, 전면개정안에서는 그러한 용역에 대한
효익은 받는 순간 소모된 것으로 보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함. 그 외는 동일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2008년 전면개정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2007년 제정)
· 중개수수료 (자문, 법, 회계, 가치평가, 상담 등): 비용 으로 인식	· 수수료 (회계전문가, 법률고문, 가치평가 전문가) : 사업결합원가에 귀속
· 내부 사업결합담당부서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포함한 일반관리원가: 비용 으로 인식	· 좌동
· 금융부채발행 원가, 지분상품발행 원가: 제1032호, 제1039호에 따라 인식	· 좌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7년 제정)과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8년 개정⁴⁰⁾)의 주요 차이

(1) IAS 39개정에 따른 공시사항의 추가(문단 12A)

제1107호(2008년 개정안) ‘금융상품: 공시’	제1107호(2007년 제정) ‘금융상품: 공시’
<p>개정 IAS 39에 따라 분류변경한 경우 다음을 공시해야 함</p> <p>(1) 범주별 분류변경된 금액</p> <p>(2) 당해 보고기간과 과거 보고기간에 분류변경된 모든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제거되기 전까지 매보고기간마다 공시)</p> <p>(3) 문단 50B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변경한 경우, 그 예외적 상황과 그러한 상황이 예외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p> <p>(4) 금융자산이 분류변경된 보고기간의 경우, 그 보고기간과 과거 보고기간에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공정가치 손익</p> <p>(5) 당해 금융자산이 분류변경되지 않았더라면 당기손익이나 기타포</p>	<p>신설 내용임</p>

⁴⁰⁾ IAS 39개정에 따른 공시사항의 추가

<p>팔손익에 인식되었을 공정가치 손익 그리고 당기손익에 인식된 이익, 손실, 수익 및 비용(금융자산이 분류변경된 보고기간을 포함하여 분류변경 이후 금융자산이 제거되기 전까지 매 보고기간마다 공시)</p> <p>(6) 유효이자율과 금융자산의 분류변경일 현재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추정현금흐름금액</p>	
---	--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해당사항 없음)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가) 분류변경되지 않았더라면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었을 금액을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되기까지 계속 산출하여 공시해야 하므로 부담이 있을 것임

(나) 예를 들어 단기매매항목에서 만기보유항목으로 분류변경한 경우에 분류변경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정가치를 산출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07년 제정)과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08년 개정⁴¹⁾) 주요 차이

(1) IAS 32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추가(문단 8A)

제1001호(2008년 개정 공개초안) '재무제표 표시'	제1001호(2007년 제정) '재무제표 표시'
용어의 정의 추가 ①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②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 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한 금융상품으로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 명시적 언급 없음

(2) IAS 32개정에 따른 공시사항의 추가(문단 80A, 136A, 138)

제1001호(2008년 개정 공개초안) '재무제표 표시'	제1001호(2007년 제정) '재무제표 표시'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문단 80A) · 기업이 다음의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나 자본 간에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각 범주(금융부채나 자본)간에 재분류된 금액, 재분류의 시기와 이유를 공시 ①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이나 ②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 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한 금융상품으로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 명시적 언급 없음

41) IAS 32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공시사항의 추가

자본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문단 136A)

·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단, 다른 곳에서 공시되지 않은 사항)

- ①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액에 대한 양적요약자료
- ② 금융상품 보유자가 요구할 때 재매입해야 하거나 상환해야하는 의무를 관리하는 목적, 정책 및 절차(전기 이후의 변경사항 포함)
- ③ 이러한 종류의 금융상품의 상환이나 재매입시 기대되는 현금유출액
- ④ 상환이나 재매입시 기대되는 현금유출액의 결정 방법에 관한 정보

기타공시(문단 138)

· 존속기간이 정해진 기업의 경우 그 존속기간에 대한 정보

(3)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해당사항 없음

(4)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해당사항 없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1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1월 개정)의 주요 차이

	제1027호 2008년 개정안	제1027호 (2007년 제정)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지 않는 소유지분 변동 회계처리	자본거래	명시적 규정 없음 cf) 실무에서 다양하게 회계처리
비지배지분이 부(-)가 되는 경우	부(-)의 비지배지분으로 하여 자본에서 차감	지배기업지분에 배분
지배력 상실시점의 잔존 보유 주식 평가	공정가치 평가: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존 장부금액 유지
기타 설명 보장	복수의 거래를 단일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지표 제시	명시적 규정 없음

(1)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가) 명시적 규정이 없을 경우 다양한 회계처리가 예상되었으나, 개정안으로 기업간 비교가능성 증대
- (나) 자본내 배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순자산 및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 없음
- (다) 논리적 일관성 제고, 기보유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순자산 및 순손익 증감
- (라) 논리적 일관성 제고
- (마) 경제적 실질에 대한 표현충실성 제고

(2)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가)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 제시로 혼란 방지
- (나) 자본내 배분 조정 필요
- (다) 논리적 일관성으로 인한 이해가능성 증가,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부담 가중
- (라) 거래의 경제적 실질 판단 필요

2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5월 개정)의 주요 차이와 영향분석

	제1027호 2008년(5월) 개정안	제1027호(2007년 제정 및 2008년 1월 개정)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고 IAS 36(개정)에 따라 손상 검사를 실시함.	취득 전 이익잉여금에서 발생한 부분은 투자자산의 원가를 감소시킴.
새로운 지배기업(NP)을 설립하여 연결실체의 구조를 재편성하는 경우 NP의 별도재무제표에 인식될 투자금액	OP의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지분항목에 대한 NP의 몫의 회계처리 방법 제시	명시적 규정 없음

(1)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가)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 부터의 배당금을 취득 전과 취득 후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진 반면, IAS 36에 따라 손상 검사를 실시해야 함.
- (나) 구체적인 규정이 제시됨으로써 실무 적용시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됨.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2007년 제정)과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2008년 개정)의 주요 차이

제1032호(2008년 개정) ‘금융상품: 표시’			제1032호(2007년 제정) ‘금융상품: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풋가능 금융상품이나 ②청산시에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금융상품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자본으로 분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풋가능 금융상품’)은 금융부채로 분류함(문단 18)
특정조건	풋 가능 금융상품	청산시에만 계약상 의 무있는 금 융상품	
청산시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에 대한 권리	○	○	
가장 후순위	○	○	
동일한 특성 공유	○	○	
다른 계약상 의무없음	○	해당사항 없음	
존속기간 중 기대되는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대상 기업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기초함(배타적 조건)	○	해당사항 없음	
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그 밖의 금융상품이 없어야 함 - 위 배타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 해당 금융상품의 잔여 수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	○	

(1) 내용 분석

- (가) 풋가능 금융상품이나 청산시에만 계약상 의무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의 정의에 해당되지만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임

- (나)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보통주와 동등한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됨

(2)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가) 조합의 출자금이나 존속기간이 정해진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금액 등이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임
- (나) 기술된 특정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에 대한 검토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임

2 타 기준서·해석서

제2102호(2008년 개정)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제2102호(2007년 제정)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 전 기준의 조건(발행자가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보유하였는지 여부)을 만족하거나, IAS 32의 특정 조건(상기 1. 참조)을 만족하면 자본으로 분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원 지분의 경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데, 조합이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분류함

(1) 내용 분석

- (가) 조합이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개정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조합의 출자금을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음

(2)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가) 개정에 따라 조합의 출자금을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으나, 개별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또한 분류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2007년 제정)과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2008년 개정)의 주요 차이

(1) 개정의 배경

(가) 기존 IAS 39에서는 당기손익인식항목의 금융상품은 다른 범주로의 분류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 미국 GAAP(SFAS 115와 SFAS 65)에서는 분류변경이 가능함

(나) 은행 등 관계자들은 IAS 39와 미국 GAAP의 이러한 차이를 없애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IASB는 미국 GAAP에서 허용되는 것과 동일한 상황에서 분류변경이 가능하도록 IAS 39를 개정함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주요차이와 영향분석

제1039호(2008년 개정안)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039호(2007년 제정)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구분			변경후				구분			변경후			
			FV TPL	HTM	L&R	AFS				FVT PL	HTM	L&R	AFS
변경 전	FVT PL	파생	—	X	X	X	변경 전	FVTPL	—	X	X	X	
		비파생 (*)		O	O	O							
	AFS		X	O	O(**)	—		AFS		X	O	X	—

(*) 단기매매항목(즉 당기손익항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분류변경 불가능)의 금융자산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분류변경가능

- 금융상품은 보유기간 또는 발행 이후 기간 중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변경하거나, 당기손익인식항목에서 다른 범주로 분류 변경할 수

제1039호(2008년 개정안)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039호(2007년 제정)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매도가능항목의 금융자산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분류변경가능	없다(문단 50).

(가) 내용 분석

-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단기매매항목인 경우(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에 해당하면 다른 범주로 분류변경할 수 있음
 -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이 아닌 자산으로서 다음에 해당해야 함
 -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음 (문단 50(3))
 -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문단 50B)
 -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으로서 다음에 해당해야 함
 -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음 (문단 50(3))
 - 예측가능한 미래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문단 50D)
- 당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은 다음에 해당하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음

□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으로서 다음에 해당해야 함

- 예측가능한 미래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문단 50E)

(나)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금융자산의 보유목적과 의도가 변경된 경우 분류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정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더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기업의 판단에 따라 기업 간 서로 다른 회계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증가할 것임

(3) 타 기준서·해석서의 주요차이와 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의 주요 차이

(1) 개요

- (가) 기업회계기준해석서(안)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는 고객충성제도에 따라서 보상점수를 부여하는 기업의 회계문제 즉, 수익인식 방법 및 측정을 다루고 있음.
- (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은 ‘고객충성제도’와 유사한 포인트적립·마일리지제도를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음(문단4).
- (다) 하지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는 ‘고객충성제도’에 관하여 본 해석서 처럼 별도의 기준서나 의견서 등을 제시하지 않음.

기업회계기준 해석서 제2113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 고객충성제도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있음.	· 고객충성제도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서나 의견서등은 없음. ·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문단4

(2)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회계처리 비교

- (가) 기업회계기준해석서(안) 제2113호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문단 13을 적용하여, 일반 매출거래와 보상점수를 부여한 매출거래를 구분하여 수익인식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매출한 시점에 미래에 지출될 원가를 판매비와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함(기준서 제17호 문단(나), KQA05-032, KQA01-133, KQA01-080).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회계처리 비교 요약>

구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현행기업회계기준
회계 처리	최초매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 중 일부를 보상점수에 배분하고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부채로 인식함.	기업회계기준 제17호에 따라 최초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그러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측정하여 비용으로 인식함.
측정	부채는 고객에게 주어진 보상점수의 가치(보상점수에 대한 원가가 아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수익(비용이 아님)의 배분으로 인식함.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함.
수익인 식시점	최초매출을 각 부분별로 나누고 인식기준을 각 부분에 개별적으로 인식함.	최초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대가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상한,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의 주요 차이⁴²⁾

(1) 배경설명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58에 따르면 확정급여자산의 측정 한도는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와 미인식손익의 합계
- (나) 환급과 미래기여금절감은 언제 이용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특히 최소적립요건이 존재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됨
- (다) 최소적립요건은 종업원급여제도의 가입자에게 약속된 퇴직급여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도입
- (라) 최소적립요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에 제도에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의 최소금액이나 최소수준을 명문화
- (마) 따라서 최소적립요건에 의해 기업이 미래기여금을 절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
- (바) 확정급여자산의 측정에 한도가 있으면 최소적립요건이 손실부담을 야기하게 될 수 있음. 즉, 요구되는 기여금을 납부한 후 기업이 그러한 기여금을 이용할 수 없다면 최소적립요건으로 인해 부채가 발생

42) 대응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없음. 대신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2) 사례

확정급여자산의 측정에 한도가 있으면 최소적립요건이 손실을 야기하게 될 수 있음.

자산의 시가	1,000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100)
과소적립액	(100)
확정급여부채 (최소적립요건을 고려하기 전)	(100)
최소적립요건에 관한 조정⁴³⁾	(80)
채무상태표상 순부채	(180)

(3) 환급은 기업이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무조건부 환급권을 가질 때에만 이용가능함.

- (가) 제도가 존속하는 동안, 환급을 받기 위해 제도부채가 청산되어야 한다고 가정하지 않는 경우
- (나) 모든 가입자가 제도를 탈퇴할 때까지의 기간에 제도부채가 점진적으로 결제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 (다) 단일 사건으로 제도부채가 전부 청산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예: 제도해산)

(4) 최소적립요건이 없는 경우,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

- (가) 제도의 초과적립액
- (나) 제도의 기대존속기간과 기업의 기대존속기간 중 짧은 기간동안 매년 기업이 부담할 미래근무원가의 현재가치

43) - 최소적립요건에 의하여 추가기여금 3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
 - 그 결과 적립상태는 과소적립액 100에서 초과적립액 200으로 전환됨
 - 초과적립액 200원 중 40%(80원)는 기업에게 이용가능하지 않다고 가정 ◀ 1019호의 문단 58에 따른 한도에서 제외됨
 - 따라서 기업은 확정급여부채를 80원만큼 증가시키고 그만큼 손실을 인식해야 함

- (5) 미래발생급여에 관련된 기여금에 대해 최소적립요건이 있다면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은 다음 (가)에서 (나)를 차감한 금액의 현재가치로 결정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른 각 연도의 추정미래근무원가

(나) 각 연도의 미래발생급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추정최소적립기여금

- (6) 최소적립요건하에서, 기업이 이미 제공받은 근무용역과 관련하여 최소적립기준상 존재하는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기여금이 제도에 납부된 후 이용가능하지 않게 되면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그 금액만큼을 부채로 인식

2 재무제표에의 주요 영향

- (1) 미래발생급여에 관련된 기여금에 대해 최소적립요건이 있다면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은 각 연도의 미래발생급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추정최소적립기여금의 현재가치만큼 감소. 따라서 대차대조표에 인식되는 자산금액이 감소
- (2) 최소적립요건하에서, 기업이 이미 제공받은 근무용역과 관련하여 최소적립기준상 존재하는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기여금이 제도에 납부된 후 이용가능하지 않게 되면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그 금액만큼을 부채로 인식 따라서 대차대조표에 인식되는 부채금액이 증가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1) 최소적립요건이 자산인식상한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위해서는 매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처럼 보험계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의 주요 차이

(1) 본 해석서의 제정 목적 및 취지

- (가) 기업회계기준해석서(안) 제2115호 '부동산건설계약'은 직접 또는 하도급을 통해 부동산건설을 수행하는 기업의 회계처리를 보여주고 있음.
- (나) 현재 각국의 회계실무를 보면, 부동산개발업자(real estate developer)가 부동산건설계약(예: 아파트분양)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일치하지 않음⁴⁴⁾
- (다) '인도기준⁴⁵⁾'에 따른 회계처리와 '진행기준⁴⁶⁾'에 따른 회계처리가 병존
☞ 한국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오랜 관행
- (라) 이에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는 해석을 마련하여 회계관행을 통일할 필요성이 부각되어 본 해석서가 공포됨.

44) 호주의 경우 2003년에 Urgent Issues Group(UIG)이 Abstract 53 'Pre-Completion Contracts for the Sale of Residential Development Properties'라는 의견서를 발표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적이 있음.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한 뒤로는 동 의견서도 폐기되었음. 한편 2004년 11월 IFRIC의 의제채택위원회(AGENDA Committee)는 호주에서 발표된 의견서에 주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진행기준적용문제를 의제로 채택할지를 논의하였음. 그 결과 사전분양형식의 부동산개발사업은 IAS 11에서 말하는 건설계약(construction contract)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는다(즉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인도기준을 적용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별도의 의제로 채택하지는 않기로 하였음. 따라서 D21이 나오기 전에 이미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음. 그러다가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자 IFRIC은 상세한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INTERPRETATION을 제정하기로 하고 사전의견수렴을 위해 D21을 발표하고 이것의 결과물인 IFRIC 15가 2008년 7월에 발표되었음.

45) IAS 18 Revenue에 따라 인도기준 적용, 즉 분양계약자에게 부동산이 인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
☞ 한국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규정(문단 12~19, A33)이 있음.

46)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에 따라 진행기준(the stage of completion) 적용, 즉 건설기간 중에 진행률에 비례하여 수익을 점진적으로 인식
☞ 한국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의 문단 7(타)에 규정되어 있음.

(2)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회계처리 비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13. 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적용범위에 속하고 그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 따라 계약활동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7. 이 기준서의 목적상 건설형 공사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계약 등을 포함한다. (가) 공사감리나 설계용역의 계약과 같이 자산의 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 (나)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그리고 자산의 철거에 따르는 환경의 복구에 관한 계약 (다) <u>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u>
14. 계약이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당해 계약이 용역제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재화판매를 위한 것인지를 결정한다.	

- (가) 기업회계기준해석서(안) 제2115호에서는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부동산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려면 매수자가 건설 시작 전에 부동산의 주요설계구조요소를 지정할 수 있거나 건설진행 중에 주요 구조변경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함.
- (나)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건설계약은 주요 설계구조요소를 매수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구매자의 상세한 주문을 나타내는 특성이 없음. 오히려 완성부동산판매를 나타내는 특성이 뚜렷함.
- (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의 부동산건설계약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인도기준을 적용하여야함. 이러한 사항은 적용사례247)에서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음.
- (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7에서는 분양 아파트와 같은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을 포함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본 해석서가 적용되면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게 됨.

47) IE6, IE7에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보여주고 있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1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의 주요 차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현행 기업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될 수 있는 회피대상위험의 성격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을 분명히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험회피회계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어느 지배기업이든 그 기업의 기능통화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차이에 대해서만 적용함 (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더 작은 순자산금액임 (다)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의 노출정도는 연결재무제표 상 단 한번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을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파생상품이나 비파생금융상품(또는 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의 조합)은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음 (나) 연결실체 내 어느 기업이나 기업들은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음 (다)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는 위험회피수단이나 연결방법에 영향 받지 않음 •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금액은 무엇인지 명확히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험회피수단과 관련해 지배기업의 	<p>명시적인 관련 규정 없음</p>

<p>연결재무제표 상의 외화환산적립금에서 재분류조정을 통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하는 금액은 효과적인 위험회피로 결정되었던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임</p>	
---	--

(1) 내용 분석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에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나)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활동 시 위험회피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기업과 해외사업장의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금액을 명확히 함

(2)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 (가) 위험회피회계를 다루고 있는 현행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서는 지분법 적용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에 대하여 외화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와 유사함.
- (나) 따라서 이 해석서는 국내 실무적으로 이미 적용은 되고 있으나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수 있었던 지분법 적용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의 외화위험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상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와 관련하여 명확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실무상 적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됨